

통일연구원

20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차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차보고서

2007 연차보고서

2008년 3월 14일 인쇄
2008년 3월 17일 발행

발행인 이봉조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기획조정실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Tel 02-901-2521 Fax 02-901-2541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NEULPUM* (주) 늘플러스
Tel 02-2275-5326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발간사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통일문제 연구와 정책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단체와의 공동연구, 통일관련 자료의 출판을 비롯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난 한해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2·13 합의’와 ‘10·3 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한해 “통일 한국의 내일, 우리에게서 오늘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 연구진이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학술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관련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 이어 『2007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올해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구상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후쿠다 총리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메드베데프 제1부 총리가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통일 환경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21세기 통일한국을 설계하는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은 올해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통일연구원 원장 이 봉 조



Contents

발간사

1 연구원 개요

비전·중점목표	10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기능	11
2008년도 조직도	12
연구사업추진 기본구도	14
2007년도 연구사업 내용	15

2 2007년도 기본연구사업

평화기획연구부문	21
남북협력연구부문	49
북한연구부문	75
동북아연구부문	101
북한인권연구부문	129
협동연구부문	161
수시연구부문	203

3 2007년도 연구관련사업

국내학술회의	250
국제학술회의	251
국제워크숍	252
국내워크숍	253
KINU Round Table	255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	256
해외전문가 방문간담회	261
통일문제연구협의회	263

4 부록

2007년도 발간물 목록	266
2008년도 사업계획	271
2008년도 연구위원 현황	272

연구원 개요

비전·중점목표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기능

2008년도 조직도

연구사업추진 기본구도

2007년도 연구사업 내용



비전·중점목표

● 비전

21세기 통일한국을 설계하는 중심 연구기관

● 경영철학

‘실사구시’의 고품질 연구성과 창출

- (고객) 고객만족의 서비스 구현
- (인력) 전문능력을 구비한 인력 양성
- (조직) 고효율의 조직 구축
- (문화) 화합·혁신 중시의 문화 조성
- (네트워크) 북한·통일 연구의 허브 역할 수행

● 중점목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연구역량 집중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 입체적·종합적인 협동 및 공동 연구
- 상시 경영혁신체제 확립
- 연구관리 및 고객관리시스템 강화
- 화합하는 직장 공동체 구현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기능

● 설립근거

- 1990. 8. 1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 제정·공포
-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제정·공포
통일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2005. 7.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573호)
공포에 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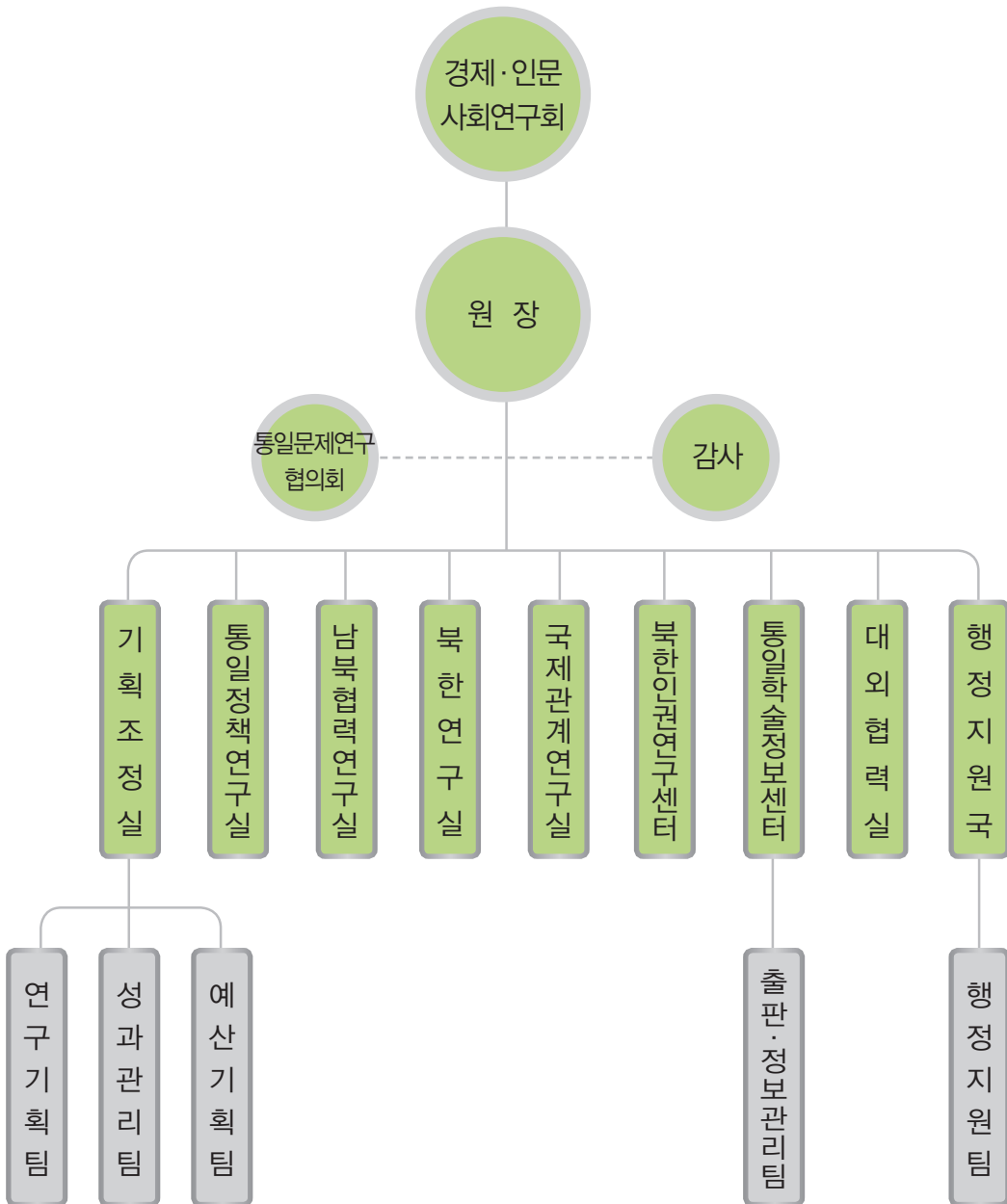
● 설립목적

-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 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기능

- 북한·통일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 북한·통일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08년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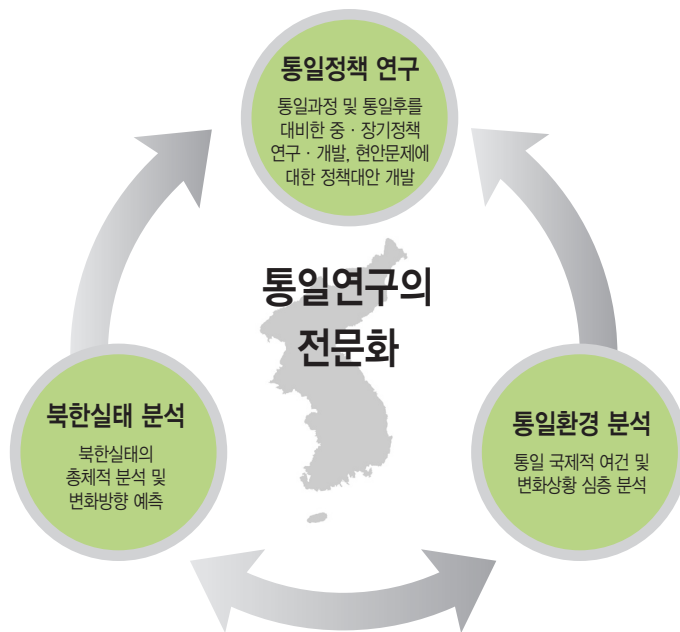
부서별 업무분장 (6실 2센터 1국)



연구사업추진 기본구도

연구원은 개원 이래 정부의 통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연구의 전문화 추진

- 북한실태·통일환경·통일정책 연구의 3개 부문이 3위 1체가 되도록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연구를 수행
- 통일정책 연구부문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정책의 연구·개발과 통일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을 진행
- 북한실태 연구부문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실태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
- 통일환경 연구부문에서는 동북아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여건과 정세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



2007년도 연구사업 내용

기본연구사업

구분	부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고유 과제	평화기획 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확산방지구상” (PSI)과 한국의 대응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허문영 외 허문영 외 전성훈 손기웅
	남북협력 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김규륜 외 김영윤 외 이 석 조한범
	북한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터민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이교덕 외 정영태 외 최수영 정영태
	동북아 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김국신 외 배정호 최춘흠
	북한인권 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북한인권백서 2007 	서재진 최진욱 김수암 이금순 김수암 외
협동 연구 과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외 8개 과제 	김국신 외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외 2개 과제 	김국신 외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외 2개 과제 	박종철 외

구분	부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수시 연구 과제	KINU정책연구시리즈	• 북핵 '2·13 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외 7개 과제	전성훈 외
	통일정세분석보고서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외 13개 과제	허문영 외
	학술회의 총서	•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 평가와 전망 외 2권	KINU
	동향분석 보고서	• 연례정세전망보고서(연간)	KINU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반년간) • KINU insight(계간) • 북한동향(주간, 월간)	KINU KINU KINU
기타 단행본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외 3권	KINU	

연구관련사업

구분	내용
학술회의 및 국내외 교류협력체제 구축	• 국내학술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 국제(미·일·중·독·러·EU 등)·국내 전문가 워크숍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고서 영역사업	• Studies Series(영역과제) 발간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KINU Round Table	• 북한·통일분야 현안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초청토론회
전문학술지	• 국문논총(2007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 「통일정책연구」, 연 2회 발간
	• 영문논총(2006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연 2회 발간
정세보고서	• 연차보고서, 통일정세분석보고서, 연례정세전망보고서 발간
출연연구기관 정책화 형성	• 출연연구기관 협력사업 및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

연구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연구원 대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 대내외 홍보 • 기관 홍보
통일 및 북한관련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유지 •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관리·배포
보안 및 통신망 서비스 고도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보안시스템 강화 및 통신망 서비스 개선
경영혁신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및 경영혁신 프로그램 운영

2007년도 기본연구사업

평화기획연구부문

남북협력연구부문

북한연구부문

동북아연구부문

북한인권연구부문

협동연구부문

수시연구부문

<<2

평화기획연구부문

-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외 공저
- ▶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허문영 외 공저
-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저
-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 손기웅 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평화기획연구실장),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실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영윤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기획조정실장), 박형중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배정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재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손기웅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인곤 (동북아연구실장), 이교덕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평화기획연구실 부연구위원),
 전성훈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실장), 조 민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남북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조한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진욱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춘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세부 실천방안들을 북핵문제 진전을 기준으로 4단계 (핵 동결 및 봉인, 핵 불능화, 핵 폐기, 핵 폐기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I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2007년 10월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가능성에서 평화적 관리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은 2007년 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2007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는 다시 급격하게 움직였다.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었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9.27~30,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10.3)가 합의되었다.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하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3개 핵시설(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불능화 완료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정확한 신고를 하고, 이에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과정 개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을 약속하였다. 일본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관계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10.2~4, 평양)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은 8개 본항과 2개 별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년 「남북정상선언」)(10.4)에 합의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이 같은 국제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족적 문제이자, 동시에 미·일·중·러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민족적 차원의 수레바퀴와 국제적 차원의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구조(질서)가 바뀌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이 준 충격과 더불어 미국의 세계·아태·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미국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도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차분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6자회담과 남북협력의 병행추진 기초아래,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회의에서 도출된 「10·3합의」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성사된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의 일정한 진전에 조응하여 다층적(국제·남북·국내)인 평화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화합을 토대로 남북협력과 6자회담의 선순환적 구조 위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6자회담의 진전에 긍정적 기여를 이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 핵동결·봉인 단계를 넘어 핵불능화 단계로 들어선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 폐기로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이를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계기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5년 「9·19공동성명」 그리고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하여 국제적 차원과 남북한관계 차원을 함께 아우르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기(2007년 6월: 핵 동결), 중기(2007년 말: 불능화), 장기(2~5년 이상: 폐기와 폐기 이후)적 대책을 모두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통일방안 중 화해·협력단계의 완성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과 미국 양쪽의 관점에서 보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개념 규정하고, 그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에 기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5대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국내통일기반 공고화,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추진 원칙으로는 균형·병행·창의·신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미국 및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개념도를 비교·제안하였고,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치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남·북한 및 미·일·중·러 각국의 입장을 비교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과거·현황 및 전망 순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각론적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3장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고 있다. 북핵 보유불용, 북핵폐기와 남북대화 병행, 한국의 확고한 비핵정책 견지, 핵무기 없는 평화통일 지향 등 4대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세부추진방안을 핵시설 폐쇄·봉인,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핵무기 폐기, 핵무기 폐기 이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었다. 특히 2007년 쟁점으로 부각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 구체적 안과 더불어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유엔사·전시작통권·평화보장관리 문제 등에 대한 단계별 해법을 제안하였다. 제5장은 동북아 협력체제를 다루었다.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쟁점과 그 해결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및 경수로협력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남북관계발전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공동체 구축, 사회문화공동체 구축, 북한인권, 대북인도적 지원 등 총 6가지 의제를 각각 연구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진행해야 할 주요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제8장에서는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였다.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전면개선, 선 부분타결 후 지지 부진, 북한의 급변사태 등 3가지 상황이 예상되었고, 이 가운데 전면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9장에서는 주요 평화협정 체결사례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자협상으로는 상하이 공동코뮤니케(72.2.21)와 미·중수교(79.1.1), 베트남 평화협정(73.1.27)과 미·베트남 수교,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79.3.26)을 각각 검토하였다. 다자협상으로는 보스니아 평화협정(95.12.14), 유럽안보협력회의와 헬싱키의정서를 검토하였고,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의미와 향후 추진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제10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보완사항을 기술하였다.

III | 목차

- I. 문제제기
 1. 연구목적
 2. 평화프로세스 개념
 3. 평화프로세스 목표 및 전략기조
 4. 평화프로세스 원칙
 5. 평화협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 II.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입장
 1. 남한
 2. 북한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러시아
- III. 한반도 비핵화
 1. 실태
 2. 쟁점
 3. 해결전략

- IV. 한반도 평화체제
 - 1. 종전선언/평화협정
 - 2. 한·미동맹
- V. 동북아 협력체제
 - 1. 안보협력
 - 2. 경제협력
- VI. 남북관계 발전
 - 1. 정치적 관계개선
 - 2. 군사적 신뢰구축
 - 3. 경제공동체 형성
 - 4.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 5. 북한인권
 - 6. 인도적 지원
- VII. 대내조치
 - 1. 남한
 - 2. 북한
- VIII. 상황별 시나리오
 - 1. 전면개선
 - 2. 선 부분타결, 후 지지부진
 - 3. 급변사태 발생
- IX. 평화협정 국제사례 분석
 - 1. 양자협상
 - 2. 다자협상
- X. 맺음말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화가 우려된다. 국내에서도 핵무장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

할 때, 남북한과 미·일·중·러 6국체제는 전통적 이중삼각대립구도를 지속할 수 있다. 게다가 동북아 군사력 경쟁과 더불어 다시 해양 일본·미국 세력 대 대륙 중국·러시아 세력의 각축이 심화될 경우, 동아시아 평화는 더욱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주변 4국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족적 문제이자, 동시에 미·일·중·러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을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민족적 차원의 수레바퀴와 국제적 차원의 수레바퀴가 함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두 바퀴가 잘 돌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다. 북핵 불능화를 위한 제2단계조치 합의(「10·3합의」)로 국제 수레바퀴가 잘 돌기 시작했고, 「10·4선언」으로 민족 수레바퀴가 더욱 잘 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도 실기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북·미 협상 실패,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 이행 실패, 2000년 클린턴정부와의 관계정상화 실패를 2007~8년 관계개선 이행과정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은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 또한 비록 더디지만, 6자회담과 더불어 다양한 남북회담과 북·미 관계개선 회담과 같은 작은 걸음을 계속 내디디며 꾸준히 신뢰를 구축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단순히 선·후 관계로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 목표로 분명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정상화·동북아 협력체제 구축·국내조치(국내통일기반 공고화 및 북한의 변화) 등 5대 목표를 균형·병행·창의·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내용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대화·압박 병행전략을, 남북관계 정상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선도분야 집중 추진을 통해 타 분야 견인을 이끌어 내는 상징전략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유인전략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접근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통일기반 공고화를 위해서는 남남화합을 목표로 제 사회정치적 세력간에 합의도출 및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최소 합의전략을 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온정책을 병행해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상응(Tit for Tat)전략과 북한이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경우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무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세부 실천방안들을 북핵문제 진전을 기준으로 4단계(핵 동결 및 봉인단계, 핵 불능화 단계, 핵 폐기 단계, 핵 폐기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여건조성 단계로서, 핵 시설 폐쇄 및 재가동을 막기 위한 봉인장치를 설치하고 감시와 검증을 실시한다. 이 시기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한·미간에는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북·미간에는 상호 특사를 교환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 중 일부를 해제하도록 하며, 국제사회는 BDA문제를 풀고 대북에너지 지원을 개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대화를 재개할 것과 3대경협사업 지속 및 민간차원의 경협사업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노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남북한 내부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남한에게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북한에게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분야 현지지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07년에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제2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초기화 단계로서, 「2·13합의」 및 「10·3합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실시를 의미하며, 6자회담 참가국 합의하에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목록 결정 및 신고 그리고 신고에 따른 검증을 실시한다. 이 시기 남·북·미·중 4국은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중전선언」(또는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한·미간에는 「신안보선언」을 발표하며, 북·미간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일간에는 일본인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6국 다자간에는 평화안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차원에서는 「10·4 공동선언」 이행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 2·3단계 사업 추진 및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운행 그리고 신경협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단계에 들어서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가동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북한주민의 자유권 문제도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소규모의 인도지원 차원을 넘어서 개발협력 시범사업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남북한 내부에서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북한은 감시·억압체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본격화 단계로서 핵 폐기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에 따른 핵 폐기 이행과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 기간 남·북·미·중·일·러 6국은 2(주도국: 남·북)+2(보장국: 미·중)+2(협력국: 일·러) 방식으로 한반도평화체제를 1(한반도평화 기본협정)+3(남·북/북·미/한·중 부속협정)

형식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한·미연합지휘체제를 병립형 지휘협조체제로 변경하고, 북·미간에는 관계를 정상화하며, 동북아에서는 평화안보협의를 형성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더불어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군사분야에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하고,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대규모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남북한 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분야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정을 체결하여 사회문화공동체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며, 대북지원은 이제 대북개발지원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한 각각의 경우 남한은 국내적으로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기구를 가동하며 평화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한반도 공산화통일조항을 삭제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4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화 단계로서 북한 핵폐기 이후, 북한의 비핵화상태의 지속성 확인 및 화학무기·세균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 및 관련 국제규범 가입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군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동북아지역 안정자로 변경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되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며, 동북아에서는 평화안보기구가 창설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연합기구 설치를 준비하도록 하고, 군사분야에서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실시하여 군축을 확대하며,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남북한 시장의 점진적 통합 및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완성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사회문화공동체기구를 창설해서 운영하고, 남북한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대북지원은 경제공동체 틀 속에서 대규모로 개발협력을 본격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한은 각각 국내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고,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정상국가로의 길을 걷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시기가 완전히 무르익은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시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다.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평화기획연구실장),

오일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 (1) 북핵폐기, (2) 남북관계 개선,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5) 국내 통일기반구축 등 5대 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I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평화번영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향이 어떠해야하는가를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과 미·일·중·러 주변 4국의 21세기 정책방향을 간략히 살펴본 후, 한국의 정책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대북정책 또는 남북관계가 국내 보수여론의 반발과 상관없이, 동시에 동북아 국제관계 및 한·미관계 등으로부터도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대북 포용정책 또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민적 합의 부족, △국제적 지지 약화, △북한의 변화 거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부분적으로 타당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들이다. 북한의 변화 거부에 대해 살펴보자. 대북 포용정책 또는

평화변영정책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그랬듯이, 대북 포용정책도 북한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둔 접근방식이지 당면한 군사적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해법은 아니다.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한다고 하는 병행적 접근방식이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군사적 현안의 미해결이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나 문제점은 아니다. 군사적 현안의 해결은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사적 현안이 발생했는데도 모르쇠하며 교류·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전략적인 행위일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과거와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된 원인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II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및 역사적 배경과 특징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다원주의, 연방주의, 구성주의를 검토하고 평화변영정책을 다양한 이들 통합이론의 혼재로 분석하였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북한체제 부인기, 인정기, 지원기 등 크게 3 시기로 구분해서 역대 남한통일방안의 지속과 변화 맥락에서 평화변영정책의 뿌리를 살펴보았다. 평화변영정책의 주요 특징을 달성목표·추진원칙·추진전략 중심으로 정리·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9·19 공동성명 이전기·핵실험 이전기·핵실험 이후기·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등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초·분야·총괄로 구분해서 평가하였다. 기초평가와 관련해서는 평화변영정책을 선임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으로 규정하고, 그 주요 전략적 기초로서 ‘시장평화론’과 ‘연계론에서 분리론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하였다. 분야별 평가와 관련해서는 핵문제 해결에 있어, 과잉의욕으로 북핵 실험까지 유발하였으나,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치·군사부문에서는 남북대화와 관련 엄청난 양적증가가 있었으나,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경협에서는 남북교역·개성공단사업·금강산 관광·경의선·동해선 연결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상호의존성이 상당정도 확대되었으나,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자발적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남북공동행사의 정례화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괄적으로 평가할 때, 남북협력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전략이 부재한 것을 비롯하여 5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역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실태와 주요합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상호인식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무장한 형제로, 북한은 남한을 혁명적 협력상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개념과 관련해서는 남한의 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민족해방이 대립하였다. 통일방안에서는 남한의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경쟁하였다. 통일정책 기초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3대 선언과 북한의 3대 현장이 대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 남북합의(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는 향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활용해야 할 토대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같은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일정책 과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차기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로서는 평화한국(Peace Korea) 기반 건설을 제시하였고, 추진과제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대 추진전략으로는 무지개전략과 십자균형외교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3대 추진방향으로는 국내화합·국제협력·남북화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세부실천방안으로는 10·4 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신평화정책 추진 차원에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III 목차

- I. 문제제기
- II. 평화변영정책 배경과 내용
 - 1. 이론적 배경
 - 2. 역사적 배경
 - 3. 평화변영정책 주요내용
- III. 평화변영정책 추진과정
 - 1. 9·19 공동성명 이전기
 - 2. 핵실험 이전기
 - 3. 핵실험 이후기
 - 4.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 IV. 평화변영정책 평가
 - 1. 기초 평가: 햇볕정책 계승·발전(시장평화론)
 - 2. 분야별 평가: 화해·협력 이행과 절반의 성공
 - 3. 총괄적 평가: 남북협력기반 마련과 대전략 부재
- V.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평화공존 對 혁명공존
 - 1. 상호인식: 무장한 형제 對 혁명적 협력상대
 - 2. 통일개념: 공동체 형성 對 민족 해방
 - 3. 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 對 연방제 통일방안
 - 4. 통일정책 기초: 3대 선언 對 3대 헌장
 - 5. 남북합의 변천과정
- VI. 향후 대북정책 과제와 실천방향
 - 1. 목표: 평화한국(Peace Korea) 기반 건설
 - 2. 추진과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
 - 3. 2대 추진전략: 무지개 전략과 십자균형외교
 - 4. 3대 추진방향: 국내화합·국제협력·남북화해
 - 5. 10대 세부실천방안: 10·4 선언 이행과 신 평화정책 전개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민족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역사적·실제적 공과 평가와 더불어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현황과 미·일·중·러 주변 4국의 국가전략을 간략히 분석한 후, 우리의 국가전략(grand strategy) 수립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통일논의를 자제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나, ‘한반도 시간’ 보다 ‘동북아 시간’이 더욱 급박하게 흐르고 있음도 유념해야만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통일정책 목표로서 새로운 시대정신인 ‘통일한국’ 또는 ‘평화한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추진과제로서는 우리의 목표를 단순히 북핵문제의 해결 또는 한반도 비핵화에만 둘 것이 아니라, 북핵폐기·남북관계 발전·동북아안보협력체제 형성·국내 통일기반 조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5가지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력과 국력을 동시에 고려하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되 이 축을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밀접히 한 후 동심원을 그려나가면 주변 3국(중·일·러)과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지지국가(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확보해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목소리의 주도세력으로 일어서는 무지개전략과 십자균형외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데올로기와 힘에 기초한 미·일중심의 동맹외교에서 원칙에 기초한 평화외교로 변형해 나가야 할 것도 강조하였다.

또한 한반도문제의 구조적 이중성(민족문제와 국제문제)과 상황적 이중성(냉전과 탈냉전) 속에 평화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먼저 통일적 삶에 대한 준비와 초당적 협력 구축에 기초한 국민화합에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주변국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회복 추구 노력의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기왕의 남북정부에 의해 합의된 4대 남북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남북화해도 반드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실천방안으로는 다음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주체에 있어 통합지향적 중용의 중심세력으로 평화세력을 일으키자.

둘째, 대북정책 목표로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

셋째, 대북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북전략에서는 민족문제와 국제문제 그리고 보편적 문제와 국가적 문제를 극단적으로 분리하거나 연계시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구분하는 입장에서 병행추진 하도록 한다.

다섯째, 대북 의제에 있어서는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되, 창의적으로 풀어어나가도록 한다. 즉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함께 제기하자.

여섯째, 남북경협에서는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호이익을 추구하자.

일곱째,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특히 나진·선봉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여덟째, 대미전략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자.

아홉째, 대내정책으로는 탈이데올로기적 남남대화와 국민동의를 반드시 이뤄내자.

열째, 통일방안으로 복합국가론에 기초해 연합제와 연방제를 적극 검토해 보자.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WMD 확산이라는 국제안보 위협의 중심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WMD 확산 저지를 목표로 하는 PSI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 사안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PSI의 탄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PSI를 미국의 3대 외교안보전략 수단의 틀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PSI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I | 필요성과 목적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은 2003년 5월 유럽을 순방 중이던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적 구상을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코(Krakow)의 한 성(Wawel Castle)에서 핵·화학·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범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수단으로서 확산방지구상을 제안했다. PSI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의지를 갖춘 WMD 제거 정책이란 점은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부시 대통령이 PSI에 관한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된 2003년 6월 3일, 당시 볼튼(John Bolton)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PSI 개념

을 구체화하는 증언을 했고,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이 PSI 개념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다. 2003년 9월에는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해군이 참여하는 첫 해상 나포 훈련이 호주 해역에서 실시되었고, 지중해와 아라비아 해역 등에서도 추가 훈련이 개최되었으며, 회원국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PSI가 한국에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해서 상당한 외화수입을 벌어들이는 등 그동안 PSI의 기본 목표인 ‘WMD 확산 방지’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PSI가 특정국가를 적용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PSI의 기본취지와 지향하는 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이 PSI의 주요 대상국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WMD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문제의 중심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PSI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를 들자면, PSI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조치 가운데 육상, 해상 및 공중 교통수단에 대한 “차단”(interdiction) 행위가 있다. 북한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이 WMD 관련 장비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해상에서 이 선박을 정선시켜 내부 수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단작전을 수행하는 PSI 회원국 군대와 정선 요구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에서 ‘PSI는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파생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PSI는 또한 인권, 마약, 위폐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 즉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과 일련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PSI의 한 수단으로 공해상에서 국적선박을 차단시켜 수색하는 차단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PSI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안보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는 탈냉전 이후 WMD 특히 핵확산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

WMD 확산 방지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최대 안보위협이라는 점과 이 문제의 중심

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PSI가 남북문제와 국제문제의 교차점에 위치하면서 한국의 핵심적인 통일·외교·안보문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PSI가 한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PSI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PSI를 역사적, 정책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훌륭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을 감안할 때, PSI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PSI의 탄생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PSI를 미국의 3대 외교안보전략 수단의 틀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PSI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PSI에 대해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PSI가 탄생한 배경과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PSI의 기원과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PSI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안보의 현안으로 등장했고 9·11 테러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구현된 정책구상이다. 비록 처음 발의한 주체는 미국이지만 많은 수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동참하는 형태’(coalition of willing)를 취하면서 사실상의 국제규범으로 확고하게 그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WMD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천명된 “확산저지구상”(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CPI)이 PSI의 개념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9·11 테러 이후에 테러집단을 지칭하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WMD 확산 방지를 위해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호가 PSI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개별 국가와 개인의 WMD 확산 행위에 PSI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금지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일명 SUA 협약을 들 수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 볼 때, PSI는 미 공화당의 정책브레인들이 1999년 3월에 제시했던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라는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된 것이라

고 볼 수도 있다. 또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PSI를 북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와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 구사해 온 세 가지 주요 대외전략수단의 관점에서 PSI를 해석했다: ①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 ②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 ③ “억지전략” (Deterrence Strategy). 첫째, PSI는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의 팽창과 호전적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구사했던 봉쇄전략을 21세기의 변화된 국제정세와 동북아의 안보현실, 그리고 북한의 특성에 맞게 구사하는 소위, “맞춤형 봉쇄” (Tailored Containment)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PSI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군사적이지만 상당한 강제성과 압력을 수반하는 소위, 강압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전략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세력으로 부상한 북한 등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에서 PSI가 갖는 의미는 인권문제 및 금융제재와 함께 대북 압박의 3축의 하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PSI, 인권문제 및 금융제재를 “대북 압박전략의 3축” (Coercive Strategic Triad against North Korea)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PSI는 상대방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힘으로 입증함으로써 상대의 침략을 저지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억지전략보다 더 적극적인 억지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억지전략은 상대방의 무력증강 자체는 허용하고 있지만, PSI는 상대방이 WMD 능력을 보유하거나 다른 적대국가로 확산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공세적 억지” (Aggressive Deterrence)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PSI와 관련된 한국 내의 논란을 정리하고 PSI 참여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2007년 11월 현재 한국 정부는 PSI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참여를 결정하고 있으나, 국익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PSI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불참’, ‘부분참여’ 및 ‘적극참여’로 분류한 다음, 각각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본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III 목차

- I. 서론
- II. PSI의 배경, 목표 및 전개과정
 - 1. 배경
 - 2. 목표
 - 3. 기원과 전개과정
- III. PSI에 대한 입체적 분석
 - 1. 맞춤형 봉쇄
 - 2. 강압외교
 - 3. 공세적 억지
- IV. 한국의 대응방향
 - 1. 고려사항
 - 2. PSI 참여 수준과 득실 분석
 -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PSI가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히 WMD의 확산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최대 안보현안인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범죄행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PSI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북전략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해왔던 북한의 인권, 마약밀매, 위조지폐 등 북한문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큰 틀 속에서 PSI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추진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PSI는 강압유인의 한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절한 압박을 가하지만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대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이 당근과 유화 정책의 수단이라면 PSI는 채찍과 압박을 상징하는 정책수단이다. 대화와 지원이라는 당근과 더불어 PSI를 비롯한 채찍을 병행

하는 것이 모순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국력과 가용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마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한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사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남북대화과 PSI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견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설정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은 북한의 행태 가운데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 별개의 대응방안을 취한다는 “분리접근” 방식이다.

분리접근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PSI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서 근절해 나간다는 것을 정책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분리접근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명확한 등식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현재 우리 정부는 PSI에 대해 ‘제한된 수준의 참여’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본 연구의 다각적인 분석을 기초로 국익차원에서 PSI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입장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우선 PSI는 해상봉쇄나 경제봉쇄를 의미하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순한 도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PSI를 주도하는 미국의 의도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PSI가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PSI 전면참가에 대한 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PSI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건설은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4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민족의 비상을 위한 유일한 국가전략이다.

I | 필요성과 목적

1945년 6월 5일 연합국 공동성명서에 합의된 “분할점령원칙” 과 1945년 8월 2일 「포츠담협정」에 의해 확정된 독일관리이사회의 원칙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4국인 미·영·불·소는 독일을 점령할 수 있는 권리와 독일을 관리하고 통일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양 독일 간의 통일 정부수립과 통일의 선포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승4국과 양 독일의 합의에 의해 통일에 대한 관리권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아울러 독일의 주권 회복, 경제 건설, 군사력 건설과 군사안보적 위상 및 역할에 관하여 전승4국은 물론 주변이웃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결국 분단기간 동안 서독은 분단의 극복, 즉 독일의 통일이 반드시 유럽의 통합과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독일의 통일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우려감은 독일통일이 유럽 전역에 평화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유럽 통합과 동시에 맞물려 진행될 때 상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독은 특히 혹독한 냉전

의 분단시기를 통해 체득하였다. 따라서 서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승4국을 포함하는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일에 다가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단 직후부터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서독이 동시에 추진해온 유럽대륙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분단을 극복해야 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이 한 동전의 양면이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그 논지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서독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의 병행 추진이 국가전략적 방향성임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II | 주요내용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물어 분단된 독일은 “통일”이란 말조차 거론할 수 없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바로 국제법적으로 분단된 독일의 상황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분단된 독일의 양 쪽은 각자가 처한 상황, 지향하는 목표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완화하거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갔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독일과 독일민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서독이 국제사회와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통합정책이었다. 패전국인 서독의 입장에서 전쟁도발의 과오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국가와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쪽을 포용하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수립 이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통합정책은 국제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서방통합” → “동방통합” → “전 유럽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독·미, 독·불, 독·소, 독·폴, 독·독과 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중첩적·복합적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의 가능성이 도래한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토대로 통일

을 무리 없이 이끌어내었다.

아데나워정권이 서독역사에서 차지한 중요한 정치적 발전은 서독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에서 출발하여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이르는 서방세계와의 경제공동체와 NATO라는 정치·안보공동체에 편입시킨 사실이다. 서방연합국과 서구 이웃 나라들에 서독을 성공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서독의 헌법 제정과 국가 건설, 산업시설 철거를 종결시킨 「페테르스베르크협정」 체결, ECSC 가담과 경제 발전 및 중심적 역할, 재무장과 NATO가입, 그리고 피점령국 지위를 종결시킨 「파리조약」 등을 이끌어내었다.

아데나워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자유, 그 다음을 평화, 그리고 그 다음을 통일로 삼았다. 그가 반대한 것은 통일자체가 아니라 공산독재체제 형태의 통일을 반대한 것이었다. 그는 미·영·불 전승3국이 두려움과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서독 정치의 회복과 경제의 재건을 더디게 할 것이고, 서방통합을 확고히 하는 정책만이 소련과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이 서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믿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방정책을 통해 서부유럽에 한쪽 발을 굳건하게 딛고 일어서게 된 서독을 이제는 동부유럽에도 다른 한쪽 발을 디디게 하여 유럽대륙의 양쪽에서 서독이 두 발로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달릴 수 있게 하는 틀을 만들었다. 그의 동방정책은 전후에 독일이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한 반면, 전쟁 이후에 부정되던 더 큰 것을 얻었다. 동부유럽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유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서독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동부유럽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좀 더 주체적인 서독의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서독이 국제무대의 중요한 주역으로 부상하게 해주었다.

한편 브란트의 독일정책은 아데나워 시기의 그것을 180도 뒤집어 동독의 공산체제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독일영토 위에 한 민족 두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는 정치적 분단을 인정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서 분단의 부작용을 감소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잃지 않는 것이 진실로 민족적인 독일정책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동·서독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터져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콜 정부의 균형정책은 이전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의 공과를 검토한 바탕 위에 서방통합을 주요 축으로 하되 동방과의 접근을 심화시키면서 서독의 정치·외교력을 키워나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나가는 실리외교에 중점을 두었다. 고

르바초프의 등장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란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미래 유럽의 평화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의 여건을 하나씩 조성했다. 그리고 통일의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동·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 의도에 부응하는 통일외교를 펼침으로써 통일이란 민족적 소망을 실현시켰다.

구체적으로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진행을 적절히 제어된 구도 속에서 이루고자 한 전승4국과 관련 국가들의 이해를 “2+4협상”이란 틀로 수용하여 통일독일이 유럽통합의 추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그리고 통일독일이 방어위주의 비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군사소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NATO에 가담하되 동독지역에 대한 외국군의 주둔을 금지하여 서방연합국과 소련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안보정치적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오데르-나이쉴강을 독·폴 간의 항구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함으로써 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이후 고조되었던 독일의 통일에 관한 전 유럽국가, 국민들의 우려를 마지막으로 불식시켰다.

통일 이전이나 통일과정을 막론하고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중요하게 믿고 추진해 온 정책은 서구와 손을 잡아야만 서독사회를 근본적으로 민주화된 정치문화를 가진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삼아 동구사회를 개혁하고 민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독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서구와의 연대라는 필수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선택사항을 충족시켜 나갔다. 서독이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방세계의 확고한 일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의 희생을 딛고 자국의 힘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타국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려는 민주사회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통일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통일환경이 조성된 그 순간에 소련은 물론 서방연합국들도 독일의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독이 불란서와의 화해에 이어 서방세계, 나아가 동방세계 그리고 전 유럽에 융화·통합되어가는 그 도정은 독일연방공화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적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독일민족의 재부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냉전” → “데탕트” → “신냉전” → “탈냉전”으로 전개된 세계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국의 힘에 서방우방국들의 힘을 더하고 나아가 소련의 지지와 힘을 빌어 자국의 이해를 관철해 나간 눈부신 외교적 성과의 시기였다.

독일을 점령할 수 있는 권리, 독일의 분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통일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승4국이 국제법적으로 보유한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사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한반도에 있어서 주변4국이 분단을 관리할 권리나 분단의 극복에 관여할 권리가 국제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분단의 극복은 법률상(de jure) 남북한 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4국이 분단의 극복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영향력은 간과되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서독의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심층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III 목차

- I. 문제제기
- II. 독일문제, 독일분단과 유럽통합
 1. 독일문제와 유럽통합
 2. 독일분단과 유럽통합
- III. 분단 이후 통합정책과 통일정책
 1. 아테나워 수상
 2. 브란트 수상
 3. 슈미트 수상
 4. 콜 수상
- IV. 1989~90년 통일과정에서의 통합정책
 1. 독일의 통일에 관한 전승4국의 입장
 2. 서독의 대응: EC와 NATO로의 통합
- V. 결론: 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참여정부”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의 선결 요소로서 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다자안보를, 경제

적 측면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문화적 측면에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였거나 적어도 개념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군사·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정책의 지향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도정에서 국가적 역량을 키우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전략을 참여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체계화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성과는 의도한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먼저 정권의 시작과 더불어 발표된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건설은 주변국들로부터 무관심과 반발을 초래하였다. 미·일이라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사이에서, 육일승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의 상황에서 제기된 경제중심국가론은 현실의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개념적인 측면에서조차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구상의 경우 그 선결 요소가 미국과의 확고한 공감대 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협력관계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불리 발표된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 구상은 국내·외적으로 의도와 실현가능성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론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동북아균형자론 역시 현실성이 없는 슬로건으로서 평가되었다.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경우, 국가간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에 있어서 상호 “win-win”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각국이 얻는 이익의 크기가 동일할 수 없고,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제한하고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국가간 문화적 공감대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정책방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 국내적으로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제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 향후 방향성에 관한 논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라 할 것이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측면에서의 노력은 그 정책들이 가지는 내용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의 정책방향이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관련국과의 공감대와 협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일

방적으로 천명·추진됨으로써 실천성이 근원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정책방향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추진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떨어짐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그 자체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확실하게 인식되게 하고 그들이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독의 서방정책 및 동방정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미·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중·러 협력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정책과 더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적 공동번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통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동시 병존정책은 더욱 환영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고도화 되고, 남북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남북 간의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도래할 경우, 동북아 4국과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반도라 할지라도 역내국가 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굳게 하여 한반도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통일정책이다.

이러한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적인 동시추진 과정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사항은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를 고도의 선진민주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선진민주사회는 정치·경제·사회·산업·환경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관계적 차원에서도 실현된 사회이다. 우리사회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시킬 경우 우리와 함께 하려는 북한주민의, 국제사회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한민족의 의지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통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유인력, 우리의 자석력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건설은 따라서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4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 민족의 비상을 위한 유일한 국가전략이라 할 것이다.

남북협력연구부문

-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외 공저
-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영윤 외 공저
-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이 석 저
- ▶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 조한범 저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실장),

조 민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우평균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연계 추진방안을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교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차원의 협력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간 동시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 | 필요성과 목적

동북아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수록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남북한 관계이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북한의 폐쇄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북한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증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다자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만큼 동북아 지역 내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증가할수록 남북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협력이 동북아 지역협력의 추동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 지역협력이 발달할수록 남북한 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압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 지역협력 또한 남북협력의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은 별도의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동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북협력과 동북아 지역협력의 '동시발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이들 간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만큼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간의 연계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및 경제협력 발전추세와 남한과 북한간 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협력 간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및 남북협력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교통분야를 4대분야로 선정하여 각 분야의 동북아 지역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4대 분야에서의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의 연계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적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의 '동시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데 이론적,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추진의 이론적 배경, 4대분야 남북한 협력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지역주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도출하였다.

4대분야 남북한 협력에 관한 부분에서는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교통분야에서의 남한과 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상세한 현황 및 발전방향을 필요성 및 의의, 북한의 실태, 남북한간 교류·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4대분야 남북협력의 발전방향을 목표, 원칙, 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연계 추진구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환경을 분석하였으며,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연계 추진전략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4대분야별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목차

- I. 서론
- I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추진의 이론적 배경
 - 1. 지역주의 이론
 - 2.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간의 관계
 - 3.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연계 이론
 - 4. 지역주의와 남북관계 동시발전 기본구도
- III. 4대분야 남북한 협력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 1. 보건·의료분야
 - 2. 환경분야
 - 3. 에너지분야
 - 4. 교통분야
- IV.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구도
 - 1. 추진환경
 - 2.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전략
 - 3. 분야별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V. 결론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에 연계적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교통분야를 4대분야로 선정하여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협력 및 남북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동북아 지역협력 및 남북협력에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 및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보건·의료분야는 철도, 에너지, 환경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동북아 및 남북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다. 또한 인간안보에 관한 아직 일정한 국내외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 관계로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안보와 달리 합의와 협력을 비교적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와 한계를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보건·의료분야가 동북아 및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차원에서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과 부담 없는 주제를 부각시켜 동북아 차원의 협력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와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차원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공동방역체계, 자연재해 등에 대한 공동구호 협력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시장원리에 입각한 보건·의료산업의 협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하위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새로운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간 의료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며, 보건·의료체계의 상이성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보건·의료협력이 어렵고,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동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별로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나, 동북아의 반일 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UN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남북협력을 감안할 경우, 인접국이면서 체제유사성 및 협력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우회적 협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몽골도 유용한 대상이 된다.

동북아 환경협력과 남북 환경협력의 연계추진을 통한 남북 환경협력의 활성화 전략방안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6자회담'에서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주도과 조정의 역할을 동북아 환경협력의 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회의장소와 관련하여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당분간 북한이 동북아 환경협력체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는 경우는 관련 회의 또는 활동이 중국에서 열릴 때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중간자적 위상 때문에 동북아의 지역환경협력에서도 중국이 주도적으로 조정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조정자적 역할은 동북아 환경협력과 남북 환경협력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가 예상된다. 둘째,

동북아 환경협력체 또는 관련활동에 북한의 참여를 제기할 때, 소위 ‘납치문제’로 인해 북한의 참여, 또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일본이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준비와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간 또는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기술 및 장비의 제공 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한 바탕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동북아 환경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안보 협력체제 논의 시 지역환경안보를 안보협력의 주요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분야에서도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들어 자본, 사람, 물건의 이동과 통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물류이동의 측면에서 볼 때, 상품과 폐기물이 함께 이동하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환경협력을 통한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 시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DMZ 평화지대화, 임진강 및 상류댐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한 안보협력의 추진 시 DMZ와 임진강의 생태환경보전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경협이 북한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구해야하며, 경험분야와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분야는 4대분야 중에서 경제 및 안보협력의 연계가 가장 명확한 분야이다. 에너지는 에너지원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안보적 요소와 이익 창출의 중요한 원천인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고, 국가들의 관심이 제일 높은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는 남북 및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을 대륙과 연계된 개방형으로 전환해야하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도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역내 자원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적 가치창출과 도입비용의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 보유국은 물론, 자원 수요국까지를 포괄하는 유기적 협력활동의 전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이를 통해 역내 에너지의 개발, 거래, 국가간 이동, 분쟁조정 등이 조율된 ‘동북아에너지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분야 동북아 경제·안보협력 추진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권장된다. 우선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에너지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이 체제전환국으로서의 상당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역내 국가들 사이에는 에너지네트워크가 연결되고 특별한 관세나 제도적, 기술적

장애 없이 자유로운 에너지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 정황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U의 경우에는 공동시장이 형성된 이후 활발한 기업합병 과정을 통해 이미 자국적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력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 가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아시아, 북미, 남미 등지에서도 석유 송유관,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들이 속속 연계·통합되어가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시장에서도 러시아는 한국, 북한, 중국 등지와 일본, 미국 등을 겨냥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타쉬에트에서부터 스코보르디노에 이르는 동시베리아송유관(Eastern Siberia Pipeline for Oil: ESPO) 공사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이룩크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통합가스 공급시스템(United Gas Supply System: UGSS)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의 청진을 거쳐 남한에 이르는 전력망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사업이지만 결국 장래 동북아 역내 에너지 인프라의 물리적 통합(Physical integration)을 통해 역내에서 배타적인 에너지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장기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시장에서의 에너지시스템의 연계·통합과정도 결국 남북문제가 해결되면 한층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동시에 그 결과로 나타난 시스템에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적 구상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스템이 연계·통합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의 우월성을 유지해 가는 가운데 역내 에너지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가는 능동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가 바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 가능성이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북한 스스로 복구하고 구축하는 방향과 국제사회나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 구축하는 방향, 또는 그 양자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동북아 역내에 가장 큰 자원 보유국은 러시아이고 현재로서 가장 잘 준비된 시장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이 북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정에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석유도, 천연가스도, 전력도 북한을 통과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우리나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도 해양으로 개방되고 대륙과 연계된 남북통합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염원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환경을 동북아 국가간 다자간 에너지협력 논의의 장에서 잘 풀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국제금융기구나 북한의 대일 청구

권 자금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에너지부문의 숙원인 해양으로 개방되고 대륙과 연계된 남북통합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는 인프라건설 및 인적·물적 이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분야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 물류 수송비를 절감한다는 점에서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철도는 육로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 협의와 보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으로의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철도협력은 경제이익의 창출은 물론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보요인이 고려됨으로써, 남북 및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을 추동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특히, 남북이 단절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철도의 연결 및 TKR의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동북아협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 및 동북아 통합으로 이어지는 상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철도협력은 동북아 경제 및 안보협력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동북아철도망의 구축은 관련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큰 만큼 경제협력을 유인하는 데 용이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철도 연결과 TKR의 복원 및 TKR과 TSR·TCR의 연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이고, 동해선과 경의선 두 축을 연결해야 하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철도분야의 협력은 남북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에서 보듯이, 남북경협이 활성화는 남북 철도협력을 강화하고 강화된 철도협력은 남북경협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 철도협력의 확대는 군사안보협력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갖는다. 더욱이 남북철도의 연결·복원은 TSR 및 TCR 등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합과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부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사실상 지역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각국의 지도자들과 선각자들이 모든 안보 및 경제적 사안을 의도적으로 연계한다기보다는 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지도자들과 지역주의론자들은 지역협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의 선각자들이 지역공동체적 의식을

전파하는 작업과 함께 지역협력의 자연스러운 확대추세가 단계별로 발전해 나갈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남북한은 분단상황으로 말미암아 수동적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북한의 분단상황이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오랜기간 동안 유지해 온 폐쇄적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북한의 경제회생과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작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이 상호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동북아 지역협력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을 실질적 협력사안을 도출해서 다자적으로 추진하는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즉,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인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및 교통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동북아의 지역협력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물류·운송분야이다. 이 분야의 활성화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 필요성과 목적

남북한간의 교역량은 총 교역액을 기준으로 1991년부터 2006년 말까지 연평균 약 15%의 증가를 가져왔다. 2006년 남북교역량은 1,350백만 달러로 2005년의 1,055백만 달러에 비해 27.9%나 증가한 실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북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들은 남북한 교역에 있어 높은 물류비용을 사업추진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미해결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이의 우선적으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비교적 활발한 대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생산원가의 40%, 판매가격의 10~15%를 물류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분야의 해결과제가 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북 교역 및 경협 기업들은 북한 내 SOC 미비 등 인프라 문제, 특히 화물과 여객 수송에 필요한 항만,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부족을 대북 물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북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제기되어 남북은 조속

한 시일 내 3통 문제, 특히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남북간에 이루어진 경의선·동해선 연결(2007.5.17) 및 시험운행은 비록 한 차례에 그치긴 했으나, 향후 남북한간 육상교통로 연결에 따른 한반도중단철도 운행, 더 나아가 아시아횡단철도(TA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횡단철도망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가 동북아 및 유럽지역 국제복합운송경로의 하나로서 새롭게 개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 물류·운송체계의 구축은 남북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 활성화에 따른 물류측면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운송경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중단철도 구축을 통해 동북아 및 유럽지역으로의 전략적 국제복합운송경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와 협력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물류·운송분야이기 때문에 물류·운송분야의 활성화가 바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물류·운송분야, 특히 육상 및 해상 물류·운송분야에서의 정책적, 제도적인 방안 연구에 주력하고자 한다.

물류·운송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폭 넓게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남북한 철도·도로연결과 물류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초점이 모아진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북경협 활성화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 이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제2장에서 남북경협과 물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물류개념의 남북한 적용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물류·운송분야별 남북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육상 및 해운·항만분야로 나누어 고찰하는 동시에 남북경협 장애요인으로서의 대북 물

류분야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제4장에서는 남북한 물류·운송분야의 과제를 통일 전 동·서독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제5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 본 장에서는 물류·운송분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적 개선의 기본방안을 남북출입절차 개선과 남북관계정립을 통한 물류·운송분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물류·운송 활성화를 위한 세부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6장은 결론이다.

Ⅲ 목차

-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I. 물류·운송의 개념과 남북한 적용
 1. 물류·운송의 개념과 의미
 2. 물류정보화 문제
 3. 물류개념의 남북한 현실 적용
- III. 물류·운송분야 남북협력 현황과 문제점
 1. 물류·운송분야 남북협력 현황
 2. 남북경협 장애요인으로서의 대북 물류·운송 문제
- IV. 사례연구: 동·서독 물류·운송분야 협력
 1. 통일 전 동·서독 교통시설 및 이용 실태
 2. 통일 전 동·서독간 교통분야 협력
 3. 통일 후 동·서독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
 4. 시사점
- V. 남북 물류·운송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
 1. 기본방향: 남북한 물류체계 연결 및 개발
 2.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방안
 3.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4. 세부추진 과제
- VI. 결론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향후 물류산업은 한국의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남한은 일본, 대만, 러시아, 중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정기선 항로의 간선항로에 위치, 유럽대륙과 직접 연결되어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최적 여건을 확보, 특히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수출입 물량을 취급함으로써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우수한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는 경우 한반도는 물류거점지역으로서 세계 경제, 무역,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여 유라시아, 태평양 연결의 관문으로서 물류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은 동북아에서 비교적 우수한 인적 자원, 발달된 통신기술, 인프라 및 운송산업 등 기본적인 물류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CR), 중국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대륙과의 육상교통연계노선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력은 단지 남한을 대상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 논의되는 경향이 크다.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물류·운송 문제의 해결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 물류·운송분야 활성화와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의 물류·운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것을 정리하면,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물류분야의 협력사업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사업의 추동력이 남북한간에 합의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 제시된 사업으로 물류분야의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된 경제협력사업에는 ① 해주 경제특구건설 및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착수를 포함, ② 해주 직항로, ③ 한강하구 공동이용, ④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⑤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⑥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⑦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남북한 상생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상호 이익창출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 남북이 동반발전함으로써 남

북이 하나의 경제권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류분야의 남북 경제협력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과 이에 따른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됨으로써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 교류협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한은 동북아 육상 인적·물적 운송망 및 물류거점 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 경제특구건설, 조선협력단지조성, 백두산 관광사업을 비롯, 통행·통신·통관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경우, 남북 양측은 생산 및 고용유발, 남북교역증진효과 등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경제성장과 후생증가, 투자유인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이 경공업분야의 임가공에서 중공업분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북한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물론,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근무 북한 인력 증가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북한 노동자 거주시설의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이 사실이다. 셋째, 한강하구 이용을 통해서는 남한 건설업분야에 필수적인 골재채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북한에게는 수입원이 되며, 준설에 따르는 북한지역 수해방지도 도움을 주고, 북한의 식량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비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변영의 체제가 굳건하게 확립될 경우, 군사비용의 절감은 물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백두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중국지역으로의 백두산 관광 수요를 낮추는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백두산공정)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 당국은 직접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은 어떤 형태로든 남측에 비용조달의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며, 투자의 기회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의 공동개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개발 결실을 확보하기 이전 전력, 수송, 설비 등의 분야에 상당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향후 남북 물류·운송분야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정상선언에서 언급된 사업을 포함, 남북한 물류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단

절된 남북연계 교통시설을 복원하고, 대북 교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가 동북 아지역의 물류거점 역할수행을 위한 단계적 남북통합의 물류망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류시설의 효율화, 물류운영의 첨단화, 물류산업의 선진화, 물류제도의 합리화, 물류조직·인력의 정예화 등의 국가물류정책을 달성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단기적 차원의 물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류분야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와 국제화가 중요하다. 물류를 기획·계획·관리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국제전문물류인력의 확보, 지식기반 물류 서비스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대북 물류에서도 자산·노동집약적 물류에서 정보·기술집약적 물류로의 전환 및 물류운영 체계의 첨단화와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남북협력연구실 연구위원)

본 연구는 북한이 새롭게 발표하는 수치들을 계기로 북한의 통계를 조금은 꼼꼼히 검토해 보려는 예비적 시도이다. 본 연구를 예비적 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의 제한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계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질문, 단 두 가지만을 다루려고 한다. 하나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특히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외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I |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이후 북한연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막대한 식량과 경제지원에 대한 답례의 하나로 그 동안 꼭꼭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통계를, 썩 내키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외부세계에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외부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북한통계의 증가 현상이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수치가 그간 북한연구자들이 사용해 온 수치와 그를 통한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라서 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엔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당국은 자국의 미국 달러화 표시 GDP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 북한 연구자들은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북한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에 매우 익

속해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이 자국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자국의 GDP 규모가 한국은행 추정치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할 만큼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자국의 1인당 GDP 규모를 463~520달러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 수치가 757~1,050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무역에 관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거 북한은 자국의 무역규모에 대해 어떤 수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북한 연구자들은 KOTRA나 IMF, UN 등의 기관에서 북한의 무역 상대국 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무역 추정치에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추정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북한의 (한국과의 거래를 제외한) 무역적자는 매년 8억~23억 달러에 달해 북한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당국은 무기나 마약, 밀수 같은 비합법적 거래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북한이 내놓은 자국의 무역거래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의 거래를 제외한) 북한의 (상업적) 무역적자는 2000년 이후 연간 8,00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며, 만일 한국과의 거래를 감안한다면 무역거래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통계와 관련된 이처럼 곤혹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새롭게 발표하는 수치들을 계기로 북한의 통계를 조금은 꼼꼼히 검토해 보려는 예비적 시도이다. 본 연구를 예비적 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의 제한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계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질문, 단 두 가지만을 다루려고 한다. 하나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특히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외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앞서의 두 가지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내용과 범위가 제한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의 수준으로는 아직도 북한통계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해부하기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의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표되며, 이에 따라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는 북한 통계제도 전반의 열개를 간단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통계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통계의 범위와 형태, 그리고 발표 주체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앞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1945~1961년, 1962~1990년,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세 시기를 중심으로 외부세계가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통계의 기본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통계의 특징을 통계적 정의(definition),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 통계의 수정과 재편(correction and revision), 그리고 의도적 조작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통계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즉 1990년대 이전의 북한통계는 공표된 통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굳이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통계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990년 이후의 통계는 통계 자체의 명시적 결함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 신뢰성을 판단하려면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대표적 북한통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GDP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인구통계 각각에 대해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통계 전반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III 목차

- I. 머리말
- II. 북한의 통계제도와 북한통계의 가용성
 1. 북한의 통계제도
 2. 북한통계의 범위와 발표형태 및 발표기관
 3. 북한통계의 가용성 1: 1945년~1960년대 초반

4. 북한통계의 가용성 2: 196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5. 북한통계의 가용성 3: 1990년대 중반 이후~현재
- Ⅲ.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1. 통계적 정의
 2.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
 3.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4. 통계의 의도적 조작
 5.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
- Ⅳ.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1. 북한 GDP통계의 신뢰성 검증
 2. 북한 무역통계의 신뢰성 검증
 3.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 검증
 4.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
- Ⅴ. 맺음말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의 통계제도와 통계형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북한통계 전반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활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통계제도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통계국이라는 전문 통계기구와 내각 쩌들의 통계기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북한의 통계와 통계발표는 다양한 특징을 보유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① 북한 대부분의 통계는 행정통계이며, ② 북한당국은 통계의 비밀성을 위해 통계발표의 부정기성을 유지하고, ③ 발표되는 통계 역시 실물적 수량 통계와 지수 통계 그리고 증가율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④ 통계발표의 주체 역시 전문 통계기관으로부터 내각의 쩌 그리고 정치지도자에 이

르기까지 다양화 하여 그 모호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통계의 가용성은 시기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1945년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당국은 거의 정기적으로 자국의 공식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통계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통계의 암흑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통계의 암흑기는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크게 뒤바뀌었는데,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당국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여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부의 통계들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

셋째, 외부로 발표된 북한통계 일반은 그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특징 또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통계의 정의가 모호하며 빈번히 변화한다는 것과 ② 통계의 수집 및 생산 그리고 공표과정에서 기술적이며 구조적인 과장과 왜곡의 가능성이 크고 ③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이 빈번하며 ④ 통계의 의도적 조작의 개연성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또는 결함으로 인해 외부로 공표된 대부분의 북한통계는 그 신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그대로 분석에 차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앞서와 같은 북한통계의 특징 또는 결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통계의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과정에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도록 설계되어 유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그것들의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섯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 가운데 그 잠재적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통계 세 가지를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의 GDP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인구통계일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북한통계의 신뢰성을 각각에 맞는 별도의 기법을 동원하여 검증할 경우 그 결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북한의 GDP통계의 경우에는 적어도 1995년 이후의 통계에 관한 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작성한 북한의 GDP 추정치와 같은 외부 추정통계의 경우가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한편, 북한의 무역통계와 관련해서는 수출통계의 경우 그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통계의 경우에는 그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유보될 만큼 제반 검증 결과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구통계는 그 자체가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통계 기술상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당국의 통계적 조작과 같은 시도에 기인한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여섯째, 위와 같은 북한통계의 검증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관한 한, 경우에 따라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를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러한 북한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그 이외의 외부 추정통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② 그러나 어떤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만일 북한과 관련된 분석을 위해 북한통계를 찾아 활용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연구자들이 직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분석에 필요한 북한의 데이터를 찾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통계 없는 북한경제 연구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 자체를 중단하는 곤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간 장막에 가려진 북한의 통계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외부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외부 연구자들에게 '이제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데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북한 사회개발은 인간능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빈곤의 원인에 대해 경제영역을 넘어 복합적 인식을 전제로 하며, 처방도 복합적 차원에서의 모색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처방도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간능력의 향상을 위한 복합적 차원을 포함하며, 북한 사회개발협력은 이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I | 필요성과 목적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논의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측면인 경제개발의 진행과 병행하여 사회개발은 도시·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사회복지·교육 등의 사회적 측면의 개발이며, 그 목적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북한내 인도적 위기의 해소와 북한주민의 고통, 빈곤경감 및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개발협력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의 위기구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주민들의 인간개발을 제약하는 사회적 위기 역시 지속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대북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북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은 북한내의 인도적 상황의 개선과 아울러 남북관계발전, 그리고 한

반도의 평화정착에 긍정적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개발협력과 사회개발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정책적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특성에 맞는 사회개발협력모델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1995년 이후 진행되어 온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를 북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개발협력의 형태와 다른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특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3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이면서 분단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역량의 쇠퇴와 인간개발능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발협력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다. 제4장은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의 전개,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 그리고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이상을 토대로 북한 사회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특성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원칙, 북한 사회개발협력 모델의 정립, 빈곤감소의 지향, 북한 사회개발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북한 사회개발협력 추진기반 강화 등 북한 사회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III | 목차

- I. 머리말
- II. 대북지원의 평가
 - 1.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대북지원의 특수성
 - 2. 대북지원의 평가

- Ⅲ. 북한체제의 특성과 사회개발협력의 필요성
- Ⅳ.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과 특징
 - 1. 개발협력의 개념
 - 2.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의 전개
 - 3.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
 - 4.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특징
- Ⅴ. 북한 사회개발협력 방안
 - 1.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원칙
 - 2. 북한 사회개발협력모델의 정립
 - 3. 빈곤감소의 지향
 - 4. 바람직한 북한 사회개발협력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 5. 북한 사회개발협력 추진기반 강화
- Ⅵ. 맺음말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에 있어서 남한의 지원은 더 이상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북지원'은 이제 남북한 모두에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 단어로 자리잡고 있다. 용천역 사고에서 목도했듯이 북한내 인도적 사안에 대해 남한사회내의 구호와 다를 바 없는 지원체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증명되었다. 이는 동시에 대북지원이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 구조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북지원은 이제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내 인도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구조적인 것이며,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재해나 분쟁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겪었던 많은 국가들에서 단기간의 긴급구호가 끝난 이후 개발협력 사업이 뒤따랐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기존의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현실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협력에 대한 분석 및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대북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정책의 형성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 사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개발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각 주체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연구부문

-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 외 공저
-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외 공저
-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저
-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저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남북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새터민의 증언은 연구자가 북한사회의 성격이나 변동의 특성을 경험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에 조심성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많은 유용성과 중요한 의의를 가진 연구자료이다.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제도의 변경은 공식 문헌이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형태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 등의 비공식적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추적은 현재로서는 새터민의 증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십여년간 수집된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실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I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수집한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 여부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분야별 변화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 과연 변화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논쟁 속에 휩싸여 있다. 이는 무엇이 변화이고 무엇이 과거와 달라져야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변화의 개념과 영역, 정도에 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논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 나아가 북한연구가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연구주제를 소화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와 적절

한 연구방법의 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자가 북한에 직접 가서 연구주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아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차 자료도 절대량이 부족하고 대부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근본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새터민의 증언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활동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 사회 변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행위자 차원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측면에서 특히 큰 유용성을 지닌다.

변화의 시점과 관련해서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를 획정하는 기준으로 통상 사용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된 1998년, ‘6·15 공동선언’이 있던 2000년, 7·1조치가 단행된 2002년 등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7·1조치이다. 본 연구는 2002년을 북한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점으로 삼고 2002년 전후의 북한사회가 분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와 새터민의 증언을 교차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가운데 새터민의 상세한 증언내용은 통일연구원이 2007년에 개발한 새터민 증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II | 주요내용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각 분야에서 발견된 특징적인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래 정치분야에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구조, 정치엘리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왔다. 우선 북한은 목표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가운데 선군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정일주의화하고 있다. 2005년 초부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창시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선군사상과 김정일 위원장의 일체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선군사상이 북한당국 의도대로 북한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통치이데올로기에서 선군사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실리사회주의’의 등장이다. ‘실리사회주의’는 2001년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

선강화할 데 대하여” 라는 김정일 위원장 명의를 문건이 발표되면서 정식화되어 북한 체제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리사회주의’는 경제분야에서는 7·1조치라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으로, 대외분야에서는 전통적 적대국가와의 관계정상화 추구로 구현되고 있다. ‘실리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위로부터의 주도적인 ‘개혁’을 합리화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 선군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선군실리사회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면에서는 수령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머리인 ‘혁명의 수뇌부’라는 호칭을 통해 ‘수령’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혁명과 건설의 주체라는 주장에서 수령제의 유지를 쉽게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제는 당 기능과 권위의 하락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은 제대로 기능하지만 지방당을 포함한 하급당으로 내려올수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고난의 행군기에 당일꾼들이 보여준 부패한 모습과 인민생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한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당을 믿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인데, 당 권위의 약화는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

권력구조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변화는 국방위원회의 강화이다. 최근 국방위원회가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현재 국방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정책실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같이 중대한 국가대사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교체 문제는 어떤 권력이나 제도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런 변화의 추동력이라는 점에서 어떤 체제이든 권력구조의 변화 분석에서 항상 주목받는 주제이다. 현재 북한 권력구조의 최상위층은 1, 2세대가 차지하고 있으나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는 세대는 3세대인데, 특히 대남사업부문에서는 혁명 2세대에서 3세대로의 교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7·1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정책은 공급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만하게 운영되던 계획경제를 대폭 조정하고 하부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수요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이미 확산된 시장을 국영기업소 형식으로 개편함으로써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의 틀 내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계획 유지비용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생활

비 자체가 물질적 유인이 되도록 개별적인 차원에서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고 기업소 차원에서도 국가 납부금을 제외한 수입을 자체 배분하도록 하여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유인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하에 가격현실화, 유인체계 개편, 독립채산제의 강화, 물자교류시장의 효과적 활용, 종합시장 도입, 배급제 유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운데 공식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새로운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 '실리'를 추구하되 계획경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이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2000년대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개인들의 노동의욕이 높아지고 기관별 책임감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원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비료 및 농업 자재 등이 부족하여 생산량이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소의 경우도 원자재의 조달, 생산, 기업소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에 수납하는 몫을 제외한 수입을 자체 배분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 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일정 수입을 기업소에 제출하고 다른 일로 생계비를 조달하는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정상화는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동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공식적 제도변화와 북한주민들이 학습하고 체득한 경제활동 방식은 주민생활과 의식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우선 7·1조치 이후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는 크게 늘어났다. 7·1조치로 개인상행위 등이 허용되자 일에 대한 자세가 한층 더 능동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사경제활동이 급증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형편은 기대와는 달리 악화되었는데 임금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급증과 공급물자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급속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북한주민 생활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신흥부자의 등장과 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제의 강화는 높은 임금을 받거나 시장에서의 사경제활동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낳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줄어들어 더욱 빈곤해졌다. 이와 더불어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일탈행위도 증가했다. 생활총화 불

참, 무단결근,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물자유용, 불법 의료, 주택 암거래, 국경 밀무역, 절도, 폭행, 강도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7·1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돈이나 물품을 훔치기보다는 은행이나 회사를 상대로 절도를 하거나 국가소유 물자를 훔치는 등 규모가 커진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주민생활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생활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의식의 변화는 다시 생활의 변화를 야기한다. 7·1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공식화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자본주의와 상품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자본주의 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반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로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외국가요 테이프와 영화CD 등이 반입되고 있고 외부 실상에 관한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이었던 대남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등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의식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가치의식의 변화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부분적·제한적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가치의식도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에서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돈이다. 7·1조치로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매달 받는 노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명실상부하게 '생활비'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7·1조치 이후의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으로 인해 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의식의 변화는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 파괴와 수업 운영의 파행, 교권 하락 등의 문제를 겪었던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공교육 복구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국가적 지원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 타개와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 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된 것은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일종의 발전교육론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 인재의 집중적 육성,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에 중심을 두는 교육 체계로의 개편,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교육 투자가 과학기술분야의 수재교육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한편, 공교육 전반에서는 교구비품에서부터 학교 시설 유지비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사교육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시장 확대가 가져온 경제적 계층분화와 제1중학교 및 대학진학의 수요 급증이라는 수요 측면의 요인과, 경제난 이후 교원들의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일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 투자의 감소와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의 실질적 폐기, 교육에서의 개인적 영역의 확대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되어온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수재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교육의 질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교육방법 및 시험방법 개선, 첨단 과학기술매체의 활용과 같은 교육의 ‘현대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한편, 입시비리와 시험부정의 확대 등 사회주의적 관행에 의한 정책의 왜곡과 교육 수준의 전반적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 교육의 변화는 과학기술분야의 수재양성을 통하여 ‘단번도약’을 이루려는 강한 정책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난국 타개를 위해 인적자원 이외의 별다른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부문의 유일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불균등한 발전이 가져올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교육분야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내용들은 증언한 새터민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새터민이 보고 느낀 북한 변화의 특징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완전히 객관적인 전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들은 북한 변화와 관련있는 다른 자료들에 의해 더 세밀히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III 목차

- I. 서론
- II. 통치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변화
 - 1.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 2. 권력구조의 변화
 - 3. 세대교체와 후계구도
- III. 경제제도와 조직의 변화
 - 1. 신제도주의 이론과 북한경제의 변화
 - 2. 북한의 경제위기와 제도변화
 - 3. 7·1조치 이후의 제도변화
- IV. 북한주민 생활과 의식 변화
 - 1. 북한주민의 생활변화
 - 2.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 V. 교육정책과 교육현실 변화
 - 1. 공교육 약화와 교육의 사적 영역 확대
 - 2. 발전교육론의 부상과 '수재교육'
 - 3. 교육의 '현대화'와 비리의 확대
- VI. 결론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북한연구실장),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서상현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원)

북한은 당-국가조작-인민대중을 수령 중심의 개인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결집시켜오면서 그들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분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단행해 왔다. 특히 2002년 7월 '경제 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통치행태는 사회주의적 체제요소를 견지하면서도 개인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리비아와 쿠바의 통치체제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I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체적 양태와 역사가 다른 국가들의 경험들을 일반화해서 사회주의체제 구축에서 붕괴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박형중*은 사회주의 체제변화 패턴을 “정치권력, 경제 소유권 및 이데올로기 등 3중의 당-국가 독점체제(전체주의)”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3중의 당-국가 독점은 몇 개의 변화단계를 거쳐 점차로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붕괴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면서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사회주의를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저발전지역에서 성립했던 유형으로 꼽고 있다. 즉 그는 이러한 유형의 저발전국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 63.

가들로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을 지적하고 이들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 시기 및 탈 공산주의 시기에도 가장 낮은 변화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북한과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체제 변화 과정이 이러한 사회주의체제 국가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출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동구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개혁이 단행되어 더 이상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들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은 급격한 체제개혁으로 기존체제의 붕괴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적 기본패턴을 유지하면서 개인적 지배 통치 즉, 유일지배 통치국가로 공고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 경제 소유권 및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당-국가 독점체제의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되는 개인독재체제로 강화되면서 체제붕괴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극복되어갈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원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 당과 온사회에 오직 노동계급의 수령과 그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전당, 전국, 전민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영도원칙은 수령 개인에 의한 사상의 독재, 전당, 전체국가와 전민에 대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이와 같이 당-국가조직-인민대중을 수령 중심의 개인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결집시켜오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분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단행해 왔다. 특히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통치행태는 사회주의적 체제요소를 견지하면서도 개인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리비아와 쿠바의 통치체제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리비아와 쿠바의 사례는 향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비아와 쿠바의 사례에서 북한 체제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리비아와 쿠바의 사례 분석과 북한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내용으로 하는 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리비아 사례의 경우, 먼저 리비아의 정치체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리비아의 대내외정책 중에서 경제발전 정책과 국제관계를 다뤘다. 리비아의 장기 집권자인 카다피의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 그리고 반체제 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카다피체제의 변화에서 변화요인, 경제적 실패에 따른 체제전환, 대량살상무기 폐기선언과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가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쿠바사례의 경우 쿠바의 정치체제 측면에서 쿠바의 정치체제 변화과정, 정치체제의 특성과 후계문제, 반체제와 인권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쿠바의 외교부 문은 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와 경제문제, 쿠바 정권 교체 시도 측면에서 미국의 대 쿠바정책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쿠바의 경제개혁 상황을 금융정책, 농업개혁, 관광개혁 외자유치 정책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비아와 쿠바의 체제변화가 북한 체제변화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밝혔다.

Ⅲ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례연구(I): 리비아 정치체제의 구조와 변화

- I. 리비아 정치발전과 정치체제
- II. 리비아 대내외정책
- III. 카다피의 이데올로기와 반체제
- IV. 카다피체제의 변화

제3장 사례연구(II): 쿠바 사회체제의 구조와 변화

- I. 쿠바의 정치체제
- II. 쿠바의 외교정책: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 III. 쿠바의 경제 개혁

제4장 통합결론: 북한체제에 대한 시사점

- I. 리비아
- II. 쿠바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1. 리비아

리비아는 국제원자력(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증명했으나 북한은 2005년 10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데 이어 2006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2006년 2월에는 봉인돼 있던 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들어가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에 대해 북한 체제 보장과 불가침 조약, 경제지원 등의 맞교환을 요구했다. 즉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의 몰락 이후 정치적 변신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은 미국과의 대결국면을 통한 협상으로 실리를 얻으려 했다.

국제사회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카다피의 정치적 결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미국과의 대치상황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후세인과 같은 사례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할 시기가 되었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에 대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카다피에 대한 교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성사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역할을 담당해 줄 지도자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과 중국의 입장과 카다피와 김정일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접근도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WMD 폐기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북한 체제의 유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 입각해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하며, 국제금융기구들(IMF, IIFC, 세계은행 등)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 남북한도 동시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미·일·중·러) 역시 이를 즉각적으로 동의하며, 나아가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프로젝트(이르쿠츠크·사할린의 석유·가스전 개발,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의 교통망 연계 등)를 추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리비아는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야심찬 혁명사상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려는 카다피의 야심이 국제정세와 유리된 노선과 경제실패 그리고 장기집권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이데올로기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리비아 경제는 개방화를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대외관계는 ‘대량살상무기’ 포기 등으로 국제정세에 발맞추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국내정치는 아직 카다피의 장기집권과 개혁미비로 이전 정권과 다름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와 더불어 최근 국제정세에서 관심을 끄는 북한도 과연 리비아식 해법으로 대량살상무기 포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2. 쿠바

가. 정치 이념분야의 시사점

쿠바 정치구조의 특징과 후계체제 전망은 북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국내적인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후계체제의 성격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념분야의 실용주의적 전환은 북한이나 쿠바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에 적합한 정치·사상체제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나. 경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북한은 쿠바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혁 선택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라는 국제적 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정책 선택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국제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개혁과 개방의 병행 추진이 중요하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방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은 쿠바의 농업개혁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이 당분간 집체 농업의 틀을 유지한다면, 그 한계 속에서 적정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체제를 모색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쿠바의 국영농장 개편 사례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농업부문의 시장개혁 체제를 시도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인권 정책의 시사점

정권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인권과 민족화합을 위한 쿠바위원회’, ‘인권을 위한 쿠바위원회’와 같은 인권운동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쿠바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미국 내 망명쿠바인들의 인권 운동과 다르다. 쿠바 내에서 쿠바의 인권 개선과 동시에 미국의 대쿠바 강경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쿠바 스스로의 ‘영리한 전략’들이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의 인권결의안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소한 비동맹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EU와의 인권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비동맹 국가들의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경제예속화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게 된다. 동시에 한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 등으로 인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지 약화를 보상할 수도 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I | 필요성과 목적

최근 북·중 경제교류는 무역과 투자의 양면에서 모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자원개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판매되는 소비재는 중국산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대북투자 진출이 확대되는 등 최근 중국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북·중간 경제관계는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

중국은 동북진흥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3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동북3성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접국인 북한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동북3성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고자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북한과의 물리적 연계성을 제고해 북·중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북·중 경제관계의 성장에 따른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 심화는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 동북지역의 4번째 성(省)으로 전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북·중 경제관계는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절대적인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중 경제관계 확대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특징과 관련해서 제3장에서는 북·중 무역을,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및 지원을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 그리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북한 대외경제의 다각화 유도, 남북경협의 적극 추진, 남·북·중 3국 경제협력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II | 주요내용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배경은 크게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배경에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은 북한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빠져들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동북아지역에서의 완충지대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성 강화를 통해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하고 있다. 동시에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배경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을 활용하고자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동북3성 개발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도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 중 북·중 무역과 관련해서 우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전반적인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급증해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56.7%로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경제의 특징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점과 북한의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들 수 있다. 수출품목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대중 무역 적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무역이 주로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동북3성의 위상은 약화되는 추세이다. 북·중 무역은 과거 중국이 북한에 적용하던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가 배제되고 상업적 베이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자재의 확보 및 동북3성 진흥계획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 연계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북투자가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북·중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양국 경제관계의 심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국의 대북투자는 주로 동북3성과 남방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대북투자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의 원자재 부족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기보다는 급성장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자원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SOC개발, 유통·운수업, 수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투자는 현재까지 주로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핵문제 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는 북한에게 있어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

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부정적 영향은 북한경제의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 때문에 발생한다.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북한경제는 중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내수 시장은 중국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중 의존심화는 북한의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소비재 생산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자본축적의 선순환 발전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대신 소비재의 수입대체 → 생산중단 → 자본축적 실패 → 재투자 중단이라는 악순환 구조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북·중 경제교류 확대 과정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경협의 절대적인 규모는 북·중 경협 확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경제관계 확대 과정을 통해 북한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북한의 국민소득과 구매력이 증대되어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국간 경제관계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북한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우리의 주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는 대북협상에서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의 구조적인 제약 및 북·중 경제관계 진전의 속도가 남북경협의 진전 속도보다 빠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남북경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따라서 우리가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한국의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

III 목차

- I. 머리말
- II. 북·중 경제관계 확대 배경
 1.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
 2. 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배경
 3. 경제관계 확대의 경제적 배경

- Ⅲ. 북·중 무역의 현황과 특징
 - 1. 북·중 무역 일반 현황
 - 2. 무역의 형태와 변경무역
 - 3. 동북3성과의 무역
 - 4. 북·중 무역의 특징
- Ⅳ. 중국의 대북투자·지원 현황과 특징
 - 1. 대북투자 추이
 - 2. 분야별 투자 추진 현황
 - 3. 대북투자의 특징
 - 4. 대북지원 실태
- Ⅴ. 북·중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
 - 1. 경제관계 확대의 영향
 - 2. 정책적 대응방안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중 경제관계 긴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중 의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 대외경제의 다각화 유도, 남북경협 적극 추진 및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

북한 대외경제의 다각화 유도 방안으로서는 먼저 북한 수출입선의 다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 중 일부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북·일 무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북·일관계 회복과 정상화에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중 경제관계 확대에 따르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를 약화시켜 나갈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중 경제관계 확대에 따르는 북한의 대중 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다. 즉, 남북경협 증진을 통해 우리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다. 남북경협의 증진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남북경협 마스터플랜(또는 대북 경제지원·협력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북한간 실질적인 자유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해 남북한 교역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남북교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북한 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북한 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남쪽과 연계시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지역에도 수출 위주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북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북투자에 맞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단순지원과 함께 개발지원을 병행,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의 효과가 남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국내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을 남북경협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한다. 개성공단사업의 취약점(원산지 문제, 전략물자 반출 제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남측(경기 북부지역)에서 전개하여 남북경협의 국내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한다.

동북3성 개발 및 중국의 대북투자는 남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구조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단순히 남북한 양자간 차원에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북한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접국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상호 협조하고 공유할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남·북·중 3국의 공동 이익을 창출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동북아지역 협력 촉진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북한연구실장)

향후 '당의 평화적 구호'에 따른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다변화와 활성화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북한 군대의 부정적 대외 인식변화는 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비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교양교육은 보다 강화할 것이지만 군대의 부정적 인식 변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군대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나가면서 군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규군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I 필요성과 목적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자연적인 교체를 가져왔다. 김정일은 새로운 지도자 교체를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훈통치'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직접 통치해 나갔다.

'유훈통치' 기간 김정일은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동맹세력 또는 협력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체제 변화는 김정일 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보다 더 위협적인 도전세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위협요인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 전반의 일탈상황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고유의 권

력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군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군대를 동원, 전면적인 사회 통제를 실시하여 북한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군대(특히 보위 사령부)를 동원해서 당을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사정활동을 펴는가하면, 공장·기업소 통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경제부문에 군이 실제 투입되어 일부 생산단위를 복구하여 재가동하는 모범사례를 시위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사회통제와 안정화를 위한 군대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앞세워 통치한다는 소위 '선군정치'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선군정치' 용어를 최초로 제시한 이후 2000년에 가서는 '선군정치의 전면적 역사'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술 초소 방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면서 '선군정치'를 정착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선군정치는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는 우리시대의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함으로써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체제건설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군대는 점차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서열이 상승되면서 군부의 중시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군의 경제적 역할이 제고되고 체제보위 임무에 대한 비중도 높아졌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북한인민군대의 체제 영향력은 비대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그의 '최전위부대'로 만들어 나가면서 체제보위를 위한 가장 안정된 수단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김정일 정권이 체제보위와 관련하여, 군대에 대한 사상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군대의 대내외 인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안정과 공고화를 위하여 북한인민군대의 대내외 인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인민군대에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북한군의 내부체제에 대한 인식(제2장)
- 대외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제3장)
- 북한군의 내부동향 평가(제4장)
- 선군정치와 북한군(제5장)
- 체제변화과정에 있어서의 북한군의 변화방향(제6장)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선동 자료, 군관·장령, 사관·병사용 학습자료(학습제강),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 학습참고자료, 교양자료 등의 북한 내부자료 내용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군의 대내외 인식의 내면화 상태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최근 탈북해 온 사람들의 면담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의 대내외 인식의 내면화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III | 목차

- I. 서론
- II. 내부체제에 대한 인식
 1. 최고 통치자 김정일에 대한 인식: 수령관
 2. 체제보위에 대한 인식: '수령보위'
 3. 군 자체에 대한 인식: '선군' 인식
 4. 사회주의 권력의 핵심, 노동당에 대한 인식: '당에 의한 선군'
 5. 북한군의 국가와 국가 주요가치에 대한 인식
 6. 체제의 적(敵)에 대한 인식
- III. 대외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1. 세계 일반정세 인식: "사회주의 조선 대 미제국주의 대결구도"
 2. 북미/북일/대남 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
 3. '적과 평화'에 대한 인식

IV. 북한군 내부동향

1. 병역(兵役)실태
2. 훈련
3. 군사규율문제 및 사기
4. 군사적 준비성

V. 선군정치와 북한군

1. 선군정치의 주요내용
2. 북한의 선군정치 등장배경
3. 선군정치 이행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확대
4. 군 중심의 국가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VI.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북한군의 변화 방향

1. 사례분석: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중국군 변화
2. 북한 체제변화 현황과 전망
3. 체제변화 과정에서의 북한군의 변화 방향

VII. 결론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 군 당국은 인민군대에 대하여 먼저 체제에 대한 대내외 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태세를 강조한다. 동시에 이러한 대내외의 적으로부터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 체제의 적(敵)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을 지목한다. 그들은 이들 국가들을 ‘계급적 원수’로 치부하고 짓부수기 위해 이들과 “싸우는 계급 투쟁의 맹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북한은 핵문제에 인하여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이 이어지면서 인민군인들이 이것을 평화의 계기로 인식하는 경향, 즉 ‘평화환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회담은 단지 ‘계급적 원수’들과 당의 전술적 대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대 내에서는 특히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의식변화가 뚜렷하다는 증언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군관급에서 남한에 대한 호기심이 부상하

고 남한방송 청취률도 높아가고 있으며 남한방송과 한국, 미국 홍콩영화를 감상하는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영화 중에서도 홍콩영화, 한국영화, 미국영화 순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단속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부 내 보위부에 군관 및 병사들의 언행을 감시하도록 한다든가, 군관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라디오는 회수하고 텔레비전은 채널을 고정시켜 버린다고 한다. 또한 외국방송 청취를 보면 즉시 신고하고,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범으로 처벌하며 라디오를 소유하면 외국방송 청취한 것과 같은 처벌을 적용한다고 경고한다. 남한과 외국방송을 청취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처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효율성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 당국이 “당이 평화적 구호를 들면 들수록 인민군대는 오직 총대로 조국통일 하겠다는 사상을 가져야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더라도 남북한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북한 인민군대의 ‘평화환상’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군인이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면 첫째, “계급 의식이 마비되어 적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며, 둘째, “전투적 긴장성이 약화되어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 수 없게” 되고, 셋째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잃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인민군인들의 ‘평화환상’ 인식이 확대되면 될수록 주적으로서의 대미의식은 점차적으로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남한에 대한 ‘계급적 원수’ 인식은 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인민군대의 주적인식의 완화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며 충성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체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군관들은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간부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군관급들은 적극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밀담이 오가기도 한다는 증언들도 있다. 또한 군관들과 하전사급 군인들은 기회가 조성되면 주변의 여건을 활용하여 돈벌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경제난의 지속으로 인하여 식량을 비롯한 군대 보급품의 부족이 지속될 경우, 북한 인민군대는 자구책의 하나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탈행위들을 과감하게 확산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지도자 즉 김정일에 대한 충성 유도 차원에서 ‘수령관’을 의식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북한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이 주로 ‘수령보위’ 중심의 내용이 강조되어 온 데서 잘 드러난다. 즉 북

한 당국은 인민군대의 모든 문제를 ‘혁명의 수뇌부’ 즉 김정일 보위 견지에서 철저히 보고하도록 주문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대의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한으로 온 탈북자의 말을 빌리면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품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김일성이 죽자마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데 함부로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만과 원한은 북한 인민군대 내에서도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수령 즉 김정일에 대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있게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잡생각의 여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에게 충실성, 절대성, 무조건적 정신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조직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여유를 주면 잡생각을 하게 되고 잡생각이 많아지면 불평이 많아지며 결국은 나쁜 ‘불충성’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명절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한 개별적 휴식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전해진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인민군대의 주적에 대한 인식은 점차적으로 열어져 가는 대신 ‘평화환상’ 인식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으며, 수령 즉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상당히 약화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당의 평화적 구호’에 따른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다변화와 활성화 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북한 군대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변화는 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비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교양교육은 보다 강화할 것이지만 군대의 부정적 인식변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일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군대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나가면서 군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규군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연구부문

-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 김국신 외 공저
- ▶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저
- ▶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저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인곤 (동북아연구실장),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장)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배경을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미·일동맹 변혁과 주일미군 재편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미·일동맹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우리의 안보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 필요성과 목적

미·일동맹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공동의 적인 소련의 위협이 해소되자 새로운 공동 목표를 정립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기간 중 소련과의 과다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증대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보체제의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되었다. 미·일동맹이 이완되자 양국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탈냉전기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여 미·일 안보체제의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제회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한 클린턴(Bill Clinton) 민주당 행정부는 실제적으로 미·일 군사동맹 강화보다는 미·중관계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1년 보수 정권인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당시 새로 출범한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도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반테러 세계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 이라크로 확대되자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가속화하며 2003년 2월부터 일본과 주일미군 재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일간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2005년 10월 제시하였다. 그 후 2006년 5월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는 주일미군 재편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를 정한 이정표(roadmap)를 제시하였다.

미·일동맹의 재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활동은 미국과의 협력아래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 되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전략적 연대를 긴밀히 하고 있다. 동북아 4국의 지지를 받아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에 크게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일미군 재편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우리의 안보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일동맹 변혁의 배경으로서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이완과 재정의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 변혁과 주일미군 재편협상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미·일동맹이 동북아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넷째,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안보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 탈냉전 이후 미·일 양국이 동맹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탈냉전기에 들어 미·일간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1990년 8월 2일 발생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건은 미·일 갈등을 안보분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다국적군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으며, 의료부대나 군수

지원부대 등 비전투부대도 파견하지 않았다. 걸프전 기간 중 일본은 총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지만,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에의 일본 불참은 미·일동맹에 대한 존폐논의로 이어졌다.

당시 미·일동맹에 대한 폐기론은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주창되었다. 일본내 폐기론은 냉전이 종결됨에 따라 미·일동맹의 유용성은 소멸되었으며, 일본은 미·일동맹이 아닌 다자간안보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내의 미·일동맹 폐기론자들은 미국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안보협력 요구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미·일동맹의 비대칭성을 지적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일동맹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중·대만관계의 긴장 등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위협요인이 대두되자 미·일 양국 정부는 동맹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도쿄를 방문하여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였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으로 통칭되는 동 선언은 동아시아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이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비추어 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을 중시하고 중국을 배척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안보 문제보다 자국경제의 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9·11테러 이후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배경을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001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은 힘을 통한 국익확보를 기치로 미국식 국제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천명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장기적인 국가전략 목표 하에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한편, 9·11테러 이후 미국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통해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실시하여 탈레반 정권을 궤멸시키고, 2003년 3월 19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9·11테러 직후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테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미군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견 방침을 공언하였다. 걸프전 당시 자위대 참가를 기피함으로써 받은 비난을 상기하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즉시 자위대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테러활동의 무대가 되는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도 실시하여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공고히 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일동맹의 변환과 주일미군 재편협상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 미·일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02년 12월 16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①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② 군사기술의 비약적 향상과 각종 기술의 통합화 진전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미·일 양국은 2005년 2월 19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아·태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위협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양국의 공통의 전략목표를 공표하였다. 기존의 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한정되었고, 위협의 실체를 한반도의 정세불안, 핵무기 등 군사력의 집중, 영토문제의 존재, 지역분쟁 발생 가능성 내재,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의 확산이라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특정 국가를 위협의 대상국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2월 공동성명에서는 지구 전역에 걸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며, 에너지공급원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 대만해협 사태 등 위협의 실체를 특정국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 10월 29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임무·능력을 검토하고 병력태세의 재편 계획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미·일동맹의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5월 1일 2014년까지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재편실시를 위한 미·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일미군 재편 합의 내용은 9개 분야로 요약된다. ①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지휘소로 이용할 ‘공동통합운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즉, 주일미군은 요코타(横田) 비행장에 일종의 연합사령부격인 ‘공동통합운용조정소’(共同統合運用

調整所)를 설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양국간 근접성과 상호 조정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② 미국은 수도권인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캠프 자마(座間)에 위치한 주일 미육군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대폭 확대하고 현대화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 육상자위대는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중앙즉응집단 사령부'를 창설하여 캠프 자마에 주둔시키기로 하였다. ③ 미·일 양국은 각각의 공군사령부를 요코타(橫田) 기지로 통합배치 한다.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요코타 기지에 병치(並置)된 미 제5공군 사령부와 항공총대사령부는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설치한다. ④ 요코타 기지의 주변공역에서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미·일 양국은 일본내 미사일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최신형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 시스템을 아오모리현(靑森縣)에 소재한 항공자위대의 샤리키(車力)기지에 배치·운영한다. ⑥ 주일 미 해병대의 신속 전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 3개 지역에 재배치한다. ⑦ 미국은 F/A-18 호넷(Hornet), EA-6B 프라우러(Prowler) 등 항공모함 탑재기와 E-2C 호크아이(Hawkeye) 정찰기를 가나가와(神奈川) 현(縣)의 아즈키(厚木) 비행장으로부터 야마구치(山口) 현에 있는 미 해병대의 이와쿠니(岩國) 비행장으로 2014년까지 재배치한다. ⑧ 주일 미 공군기지인 카테나(嘉手納) 기지 등에 배치된 항공기에 의한 훈련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훈련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한다. ⑨ 미국과 일본은 지역사회가 미군시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주일미군은 작전에 차질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실시되어 가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군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미래형 사단의 작전사령부(UEX)로 재편하고, 2008년까지 일본 자마기지로 이전하여 유사시 주일 미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거점이 된다. 자마를 중심으로 한 주일 미군기지는 전략적으로 다양한 아·태지역에 전력을 투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거점(hub)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일동맹 변혁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자위대의 장비첨단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기술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생산과 첨단장비 수입을 통해 자위대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동아시아전략의 요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본만을 유일한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위상과 중국을 견제하는 대항세력으로서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아·태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 미·일동맹의 성공 여부는 제1파트너인 일본의 협력 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대변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불안정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6장에서는 미·일동맹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미·일동맹 강화는 역내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최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 경쟁 등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일과 중·러는 각기 양자 차원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외부세력과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지역에는 미·일 중심의 아·태지역 민주국가연대와 중·러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SCO)라는 두 개의 큰 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대립구도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지향하는 경직된 대결구도가 아니다. 동북아 4국간의 실질적인 외교행태는 오히려 국익과 실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기 양자회담을 통하여 공동이익에 관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익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일·중·러 4국의 세력확대를 위한 경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국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일동맹 강화는 주한미군 재편 및 한·미동맹 재정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 목차

- I. 서론
- II.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안보관계
 1. 미·일 안보협력의 이완
 2. 미·일동맹 재정의 과정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추진 실태

- Ⅲ.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일본의 호응
 - 1.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 2. 고이즈미 내각의 적극적 편승전략
- Ⅳ. 주일미군 재편 협상의 특징과 내용
 - 1. 미·일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의 특징
 - 2. 미·일의 국익과 전략적 공동목표
 - 3. 주일미군 재편 합의내용
- Ⅴ. 미·일동맹 재조정 의의와 발전방향
 - 1. 미·일동맹 변혁의 군사적 함의
 - 2. 미·일동맹의 발전방향
- Ⅵ.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
 - 1.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
 - 2.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
- Ⅶ.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 1. 기본 방향
 - 2. 세부 추진 방안
- Ⅷ. 결론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동북아지역의 세력판도는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역내 안정 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경계하며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 편승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공동의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대 중·러 양축이 각기 배타적인 군사동맹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일·중·러 4국은 각기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협력과 견제를 받

복해 오고 있다.

정확적으로 미·일 해양세력과 중·러 대륙세력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한국은 주변정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냉철한 현실적인 정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 군사·안보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보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세력판도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정착될지 불확실하지만 향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력에 기초한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2020년경에도 동아시아 역학구도는 정치·경제적으로 다극화된 양상을 보이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는 단극-다극 체제(uni-multipolarity)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현실과 미국 패권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일본·중국·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전통적인 우방이며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강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과거사·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중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맹관계는 어느 일방의 편익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동맹을 체결한 쌍방이 위협인식과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면 동맹관계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차이 및 대북정책 우선순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조율 노력을 보다 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한·미·일 대북공조체제도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신뢰를 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관계를 단순히 양자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진전, 동북아 평화유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동북아 4국은 안보정책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실리위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안보정책과는 별도로 실용주의적인 전방위 실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중국·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

고 있는 중국·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일단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

동북아 4국관계는 한반도 안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변화 또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즉,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확대·발전시켜 이를 통하여 동북아 4국간의 관계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각국의 안보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7·29 참의원 선거와 아베정권의 퇴진 등에 관해 분석하였고, ... 동아시아 외교 등 후유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노선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I | 필요성과 목적

2001년 4월 ‘일본개혁, 자민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하였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6년 9월에 퇴진하고, 아베 총리 및 내각이 등장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경선에서 동아시아 외교문제는 격차사회의 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정책쟁점으로 부각되었고,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대결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후계자로서 개혁노선을 계승할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아베 신조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을 은근히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6년 7·5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대망론'으로 전개되었다. 아베 신조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첫 전후 세대의 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원과 일본판 북풍의 결정적 영향에 힘입어 등장한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의 탈피를 위한 개혁정치를 전개하였고,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성향은 한국, 중국 등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국 등 서구의 일본 전문가들이 지난 일본의 10년간을 재평가하며, 소위 '일본 부활'에 대한 연구서들을 출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년 5개월 집권한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정치에 관한 분석·평가와 함께 아베정권의 개혁정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에 관해 분석·평가하였다. 즉, 정치변동속의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양대 정당구도의 형성,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성향 등에 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하였다. 제3장에서 9·20 자민당 선거의 쟁점 정책과 전개과정에 관해 분석하였다.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쟁점인 동아시아 외교문제, 야스쿠니 신사문제, 주일미군의 재편과 기지·비용문제, 격차사회문제, 재정재건과 소비세 인상 등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부상과 정국 영향, 모리 파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칠드런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등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로 인식하여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전개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7·29 참의원 선거와 아베정권의 퇴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전후체제 탈피노선에 따른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위성 승격, 집단자위권 용인을 위한 연구자문그룹의 발족, 헌법개정을 지향한 국민투표법의 마련 등 개혁정치를 중심으로 아베정권의 특징을 분석한 뒤,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당의 대참패, 참의원 선거 대참패의 후유증에 따른 아베정권의 퇴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외교 등 후유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노선에 관해 분석하며, 나아가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제5장에서는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 동아시아외교의 전개, 일본·호주 안보협력 강화 등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에 관해 연

구하고, 나아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노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북제재, 2·13합의 이후의 일본의 대북전략 및 북·일관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II | 주요내용

1. 아베정권의 국내정치

2006년 9월에 등장한 아베 총리는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친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내각을 발족하였고, 전후체제의 탈피를 정권의 목표로서 내세웠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강한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집권 3개월만에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을 성립시켰고, 나아가 국민투표법의 성립과 더불어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개혁 정치는 격차사회의 해소 등 민생정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국민들의 불만 누적을 초래하였고 지지율의 하락으로 귀결되었다. 국민지지율의 하락은 2007년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으로 하여금 대참패토록 하였다. 7·29 선거의 자민당의 대참패의 요인으로 ① 정치스캔들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 ②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중시, ③ 연금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경솔한 대응, ④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경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7·29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참패로 인해 참의원 과반수 의석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정국 운영을 위한 강한 리더십의 발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마침내 아베 총리는 2007년 9월 11일 국회소신표명연설을 한 다음 날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였고, 아베내각은 침몰하였다.

2.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가. 대외정책 노선과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과제는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 중 하나인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을 꾀하면서,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된 미·일동맹의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아베정권의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는 ①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외교 부재의 극복, ②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미·일동맹의 강화·확대, ③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

향력의 확대 등이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2006년 9월 29일의 첫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주장하는 외교'로의 전환을 역설하면서, '세계 및 아시아를 위한 미·일동맹', '아시아와의 강고한 연대' 등을 주장하였다.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구상은 2006년 11월의 아소 외무장관의 「자유와 번영의 호(弧)」에서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아소 외무장관은 2006년 11월 30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정책연설에서 기존의 미·일동맹의 강화, 한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UN 등과의 국제협조, 등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弧)」의 형성을 새로운 외교 기축으로 제시하였다. 「자유와 번영의 호(弧)」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윤택하고 안정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본구상 아래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을 따라 북구유럽, 발트 3국, 중·동유럽, 중동, 인도대륙, 동남아, 동북아를 연결하여 구축되는 것인데,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 호주, G8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 들을 지원하며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형성·구축한다는 것이다.

나. 동아시아 외교의 전개

아베 총리는 경선과정에서 한국·중국 등과의 갈등의 불씨 중 하나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배를 자제하는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취임 직후 미국보다도 먼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외교 부재의 극복 차원에서 10월 초 중국과 한국 등을 방문하였다. 예컨대,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과 회담을 가진 뒤, 동일 「중·일 공동프레스」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7년만의 중국 총리의 일본 방문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 12일 원자바오 총리와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증진 방안, 국제 및 지역현안의 공조 등에 관해 논의되었다. 이로써, 중·일관계는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즉,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9일 베이징에서 바로 서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에 기인한 제문제, 해양을 둘러싼 제문제, 북한의 핵실험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한·일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 가

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의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후, 한·일간에는 양국의 외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는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1월에 베트남을 제14회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하여 일본·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고, 동년 12월에는 필리핀을 공식방문함과 더불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06년 11월에 일본에 국민방문을 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외교의 새로운 기축인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아시아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호주, 인도 등을 전략적으로 중시하였다. 일본·호주간에는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하여 각료급 전략대화가 전개되었고,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인도 역시 인도 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일본·인도간의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다. 미·일동맹의 강화·확대와 일본·호주의 안보협력 강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2007년 3월 13일 도쿄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일·호 안보공동선언」이라고 칭함)을 서명·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4월 12일 도쿄에서는 미·일·호 3국의 외교·국방분야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일동맹은 호주는 물론 인도까지 포함한 안보교류 및 협력을 한층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미·일·호 3국의 안보협력 회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서 미·일·호 3각 안보동맹체제의 구축이 추구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중국 역시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아시아판 나토(NATO)’라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동향과 전략적 의미,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초석으로서의 미·일동맹 강조 및 미·일동맹과 인도의 연대 비전, 미국의 중국견제 및 포위망 전략(a hedging strategy), 아베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 노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는 매우 주목된다.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호 안보공동선언」을 매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3각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을 연계할 수 있는 일·호 안보협력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동맹의 구축도 길이 열리게 되었다. 셋째,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 「자유와 번영의 호(弧)」 등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및 미·일 동맹과 인도와의 연대 등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2007년 4월 16일에 미국·일본·인도 3국의 합동 해상훈련이 일본 동쪽 태평양 연안에서 전개되었다. 즉, 국제정치의 속성상 미·일동맹 또는 일본과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주일미군의 재편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 작업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향한 포위망 구축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본과 호주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미·일동맹과 연계되어 유사시 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망 구축 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의미와 관련하여 미·일동맹과 연계된 대중국 견제능력의 증강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3.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아베정권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경제제재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과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하자, 아베정권은 금융제재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추구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를 채택·발표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또, 2·13 합의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납치문제 최우선·에너지 지원 불참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개최된 하노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은 경직되어 운용되었고, 북·일관계는 상호입장의 차이,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문제 등으로 거의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문제와 관련 일본 검찰의 정치적 배려 수사,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과거청산과 납치문제의 병행 협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계 속의 진전의 조짐을 나타내었다. 아베정권은 관계 개선을 위해 강·온전략을 전개하였으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예컨대, 아베정권은 대북 수해지원의 무기한 연기 방침을 결정하였고, 아울러 대북경제 제재 시한 재연장 방침을 결정하였다. 아베정권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상 재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 등 국내여론을 우려하여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요컨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은 보수층의 여론 의식, 납치문제의 집착 등으로 경직성을 탈피하지는 못한 채 전개되었다.

III 목차

- I. 문제제기
- II.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 1. 정치변동과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 2.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 3. 2003년의 11·9 총선과 양대 정당 구도의 형성
 - 4.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국 주도력 강화
 - 5.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대한 평가
- III. 2006년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과 전개과정
 - 1.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
 - 2.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와 전개과정
- IV. 아베정권과 국내정치
 - 1. 아베정권의 등장
 - 2.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 3.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당의 대참패
 - 4. 아베 총리의 퇴진
- V. 아베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 1. 아베정권의 대외전략노선
 - 2.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 VI. 결론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로 대북여론이 악화된 정치적 상황에서 보수강경론자로 총재 후보 수준의 정치지도자 반열에 올라선 뒤, 고이즈미 총리의 후견과 ‘일본판 북풍’의 영향으로 ‘아베 대세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권공약으로 ‘헌법개정’을 외치며 첫 전후세대의 최연소 총리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역으로 고이즈미정권이 남긴 ‘정책 후유증’, ‘일본판 북풍’ 등의 부담을 가져야 했고, 따라서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이념지향형 정책을 추구하여야 했다. 즉, 아베정권은 민생중시 정책을

소홀히 하였고, 전후 탈피 개혁정치를 추구했으며, 납치문제에 집착한 경직된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였고, 국정운용 주도력을 상실하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여야 했다. 즉, 아베정권은 366일 만에 침몰하였다.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대외 및 대북정책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정치 차원에서 보면, 아베정권은 고이즈미정권의 후유증인 격차사회문제, 재정재건문제, 연금기록문제 등을 떠안게 되었으나, 민생증시정책보다 전후체제의 탈피에 역점을 둔 교육개혁, 안보개혁, 헌법개정 등을 우선시하였다. 즉, 아베정권은 전후 개혁정치 차원에서 숙원과제였던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위청의 성(省)으로의 승격,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성립, 주일미군재편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성립 등을 이룩하였다. 이는 보수층으로부터 일정부분 평가받을 업적이지만, 아베정권은 '코드 인사'에 따른 측근들의 요직 배치, 민심과 이반된 이념 지향형 정책의 중시 등 소위 '관저정치(官邸政治)'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베정권은 고이즈미정권의 대외정책 후유증인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중국, 한국 등을 방문하고,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미·일동맹 중시의 외교기조를 유지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 동아시아 외교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본·호주의 안보협력 강화, 미·일의 가치외교와 「자유와 번영의 호(弧)」 추구 등 미·일동맹의 강화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대외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판 북풍'의 부담 때문에 납치문제에 최역점을 둔 대북정책노선과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노선을 추구했다. 즉, 아베정권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2·13 합의가 도출되어도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납치문제에만 집착하였다. 아베정권은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다소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납치문제의 제약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보수성향의 특성, 현안에 대한 북·일간의 인식차이 등으로 인해 관계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안보 전략 기초를 서술하고, 북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개 및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6자회담 2·13합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I | 필요성과 목적

북한의 핵개발 의욕과 핵무기 보유는 중·북관계를 기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사안이다. 중국은 북핵 실험 이전까지 남북한이 선언한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여 왔으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평화적으로 협상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개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북핵 실험 직후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 및 외교적 제재 결의에 찬성하여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면서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6자회담 지속 주장과 중국의 북·미간 중재외교에 힘입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6자회담 2·13합의가 도출되었다. 2·13합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핵문제를 포괄적 사안으로 접근하여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 따른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은 한반도비핵화,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수교와 동북아 평화

안보협력체 실현 등을 위한 논의와 협상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동의하였다.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북핵문제는 단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케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13합의에서 다루게 될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심층 분석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도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 실험 이후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 합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입장을 분석 전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안보 전략 기초를 서술하고, 둘째,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개 및 현황으로 구분, 분석하였으며, 셋째, 6자회담 2·13 합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결론부문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였다.

II | 주요내용

1. 중국의 대북 정책

가. 정치분야: 가장 제한적 성장

중국은 대북 정책 전개에 있어 군사협력 관계 발전보다는 정치와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양국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나아가기를 기대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한 후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관계를 지속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대북 협력이라는 촉매제를 활용하였으나 양국이 정치적 동반자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 예로 북한의 핵실험을 들 수 있다.

중·북 양국의 정치관계가 한계를 보이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과거가 주는 교훈이다. 즉 과거에 중·북 양국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국은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인 핵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았으며,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강력히 주문하지 않아 북한으로부터 신뢰(credibility)를 얻는데 부족하였

다. 아울러 북한 역시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찬성하였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공동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양국간에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북 양국이 정치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이 중국의 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하려고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을 천명하였을 때 중국이 이를 차단해 버린 사실을 북한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부상하면 할수록 자국을 사회주의 동맹국이며 전통적인 우호국가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골칫거리(trouble-maker)로 간주하여 압력을 크게 행사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자국이 요구하는 바를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소위 '인도적 차원'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으로 인도하는 데 대해 불만을 지녀 왔다. 즉 북한의 시각으로는 중국은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 것이다. 향후 미국 특히 미의회가 탈북자를 북한에 중국이 송환하는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비난하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의결하여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사안에 따라 미의회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탈북자문제에 대해 중·북 양국은 긴장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북한은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 중국의 야욕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은 증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양국 정치관계 발전을 제한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북 양국 정치관계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북·미 수교로 인해 중·북 정치관계 발전은 또 한 차례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북·미 수교를 통해 미국과의 정치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정치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나 북한의 수동적인 그리고 편향된 외교 전략으로 인해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중국의 촉구인 양국 정치 지도자, 국회, 정부 고위 관료들의 상호 교류와 정기적 방문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나 제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은 중국의 이익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고 대중 정치적 의존 성향을 축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외교분야: 협의 상대자로 지속

북한은 자국이 국제적 고립감을 심히 느꼈을 때만 중국과 한국에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국과의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한 경향이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감이 심화되는 것은 국제정세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국제적 참여 유도와 대북 협상외교를 적극 시도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북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북 외교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북핵실험이 자국의 대북 외교 실패라고 내부적으로 진단하였을 것이다. 중국은 대북 외교의 실패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적인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2·13합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청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협의와 중재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장미빛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향후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경도된 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것을 암시한 것으로 중·북 양국사이에 의견 차이가 노출될 것이다.

중국은 북핵 불능화 조치 수준과 대북 평화적인 핵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표출할 것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서 나타나는 사안인 주한·미군 지위 변경문제에 대해 북한과는 다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양국간 외교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화 협상이 잘 진전되면 될수록 미국과의 원만한 수교를 기대하여 주한·미군이 향후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요소 철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반드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거나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만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북 양국 외교 갈등이 예상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난관이 예상된다.

다. 군사안보분야: 협의 상대로 지속

중국 특히 중국 군부는 미국을 제1의 잠재 적국으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집단이며 자신을 중국 사회주의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군부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자국을 홀시

하고 있지만 군사전략상 대미 견제용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을 포기할 경우 중국이 사회주의를 배반한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 북한을 안보 협의 상대국으로 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미 중시 외교로 인해 북한과의 안보협회는 적었다.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지 못해 안보협회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원치 않은 적이 많았다.

중국이 대북 군사협의를 재개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는 사안의 중요도가 심할 경우였다. 중단되었던 중국의 대북 군사외교가 2003년 8월 북한이 제1차 6자회담에 참여함과 동시에 재개된 적이 있었다. 중국 군부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군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 파견된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 협상을 위한 목적이었다.

북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군사협회가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군부는 북한이 핵실험 감행에 대해 사전에 자국과 협의하지 않은 점은 자신이 대북 군사 교류를 충분히 행하지 못한 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향후 북핵 불능화 조치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 정상화 협상도 진전될 것이다. 중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북 군사협의를 위한 교류와 정기 방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단지 협의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중·북 군사협력은 가장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제분야: 중국의 대북 경협 확대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대

중·북 경협과 관련, 양국간 교역 규모와 분야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투자는 향후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에 치중될 것이며 투자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투자 증대를 환영하면서도 자국의 천연자원 발굴에만 치중하는 투자 확대에도 별 다른 견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북 교역과 투자 면에서 보면, 양국이 약속한 '상호 호혜협력의 원칙'이 사실상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이익이 많이 가미된 상태의 편향된 중·북 경협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경협상에 갈등이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은 농업을 경제개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확보를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국간 경제협력이

주로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로써 북한경제가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을 북한이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북 경협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 문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틀 내에서 북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핵불능화 중간 단계가 되면 대북 2단계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북한의 발전기 개보수용 시설을 지원하고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는 상관없이 북·미관계 진전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 지원요청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여 미국의 주장인 북한이 NPT 가입 이전에는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경수로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일본이 북·일관계 진전과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것을 더욱 권유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계획 폐기야말로 북·미 수교협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북·미 수교협상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외교 및 경제 제재 결정 폐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미 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북한 핵이 검증가능하게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물질 해외 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4개국 정상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은 핵불능화 2단계 조치가 해결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중국은 우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하면 자국도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자국이 참여하지 않고 남북한과 미국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향후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정당성을 관련국이 묵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중국을 의식하여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으로 우선 주한미군의 지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북한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시하지 않는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견제용보다는 대중 견제용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나 상징적인 존재로만 한국에 남기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문항에 남북한의 단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남북한이 적어도 중립적이기를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 지위 변경여부와 관련 없이 중국은 한·미 안보동맹 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북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 문항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 중국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이다.

다. 북·미, 북·일 수교문제

중국은 북·미 수교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북·미 수교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북·미 수교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북·미 수교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중국은 만약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미 수교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북·미 수교 이후 일본에게 북·일 수교 실현을 더욱 촉구할 것이다.

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문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될 때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표명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에 조화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해나간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입장을 본 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해도 무관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것이며 역내의 군비경쟁, 미·일동맹의 강화 등

이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에 장애라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어야만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미국의 관여 정도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혹은 강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일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자신이 그동안 구축한 경험이 있었던 SCO 구축 예를 많이 도입하여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국제사회의 동등한 참여,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중립, 동맹관계 철폐, 역내 경험 확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목차

- I. 서언
- II. 중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
 - 1. 동북아 안보 정세 인식
 - 2. 동북아 안보 전략 기조
- III. 중국의 대북 정책: 전개 및 현황
 - 1. 전개
 - 2. 현황
- IV. 6자회담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 1. 한반도비핵화
 - 2.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
 -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4. 북·미, 북·일 수교
 - 5.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
- V. 결어: 전망
 - 1. 중국의 대북 정책
 - 2.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국의 대북 정책은 단순한 양국관계만을 지향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중국은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대북관계를 설정하여 온 것이다. 그런 다음 동아시아 부속 세력판도에 따라 대북 정책 추진 범위를 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6자회담 2·13합의와 그 후에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한반도 안정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억제 정책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북한의 안정유지와 대북 경협 확대)도 지속되었다.

북한인권연구부문

-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저
-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저
-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저
- ▶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이금순 저
- ▶ 북한인권백서 2007 | 김수암 외 공저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북한 체제는 현재 체제복원력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제적응력의 생성 덕분에 체제내구력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원시시장경제가 대체하여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산불이 나서 쓸모없는 고목이 불타버린 자리에 이듬해 봄에 먼 산에서 날아온 생산성 좋은 과실나무씨와 새 꽃씨와 새 풀씨가 무성하게 돌아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I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문제 해결과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이후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현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오히려 통제된 형태로나마 전개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체제가 붕괴하는 역풍을 맞을지,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체제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체제내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제내구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체제복원력, 체제적응력, 급변사태 가능성 등의 3대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후 체제내구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처럼 체제내구력을 하나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체제내구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분석방법을 사용한다면 경제난속에서도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체제내구력의 개념을 3개의 변수로 분화하여 북한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방향의 새로운 현상들을 각기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체제내구력의 개념을 체제복원력, 체제적응력, 급변사태의 3요인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 연착륙과 개혁·개방의 역설의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 주요내용

북한 체제는 현재 체제복원력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제적응력의 생성 덕분에 체제내구력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내구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물리적 통제도 한 중요한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원시시장경제가 대체하여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마치 산불이 나서 쓸모없는 고목이 불타버린 자리에 이듬해 봄에 먼 산에서 날아온 생산성 좋은 과실나무씨와 새 꽃씨와 새 풀씨가 무성하게 돌아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북한은 효율성 없는 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효율성 높은 체제의 새싹이 돌아나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화위복의 기이한 현상이다. 이것이 북한체제가 경제난속에서도 체제내구력이 유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북한에서도 제2사회, 또는 병렬사회(parallel society)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사회란 제1사회에 대한 공격은 무모하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1사회와 별도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최소 생존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대량 아사가 났던 시기보다는 다행이라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최소 생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억압이 없는 것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제2사회에서는 간부든 일반주민이든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알리바이 장치를 만들어 놓고는 각자 장사와 개인 실리주의에 탐닉한다. 북한주민들의 말로 각자 “체불장을 본다.” 계획경제하에서처럼 당국이 일일이 작업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율적 업종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구가 외부에서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은 각자의 새로운 생업의 터전에서 스스로 제 살 궁리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의 기층으로부터의 변화를 국가가 점진적으로 양성화해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변화 추세에 편승한다면 체제내구력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체제의 연착륙도 가능해질 것이다. 핵문제 해결,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가 실현된다면 북한의 체제내구력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III 목차

- I. 서론
- II. 체제 내구력의 개념
 1. 체제의 개념
 2. 체제 내구력의 개념 및 분석틀
- III. 사회주의 체제 복원력의 쇠퇴
 1. 사회주의 제도의 기능 마비
 2. 체제의 정당성 실추
 3. 간부들의 체제 신뢰 동요
 4. 물리적 강제력의 기능 부실화
 5. 체제위기속의 체제유지 배경
 6. 소결: 체제의 복원력 감소
- IV. 새로운 체제 적응력의 생성
 1. 새로운 생산양식의 생성: 원시시장경제와 가내수공업
 2. 새로운 경제관리 시스템의 형성: 분절경제와 연고경제
 3. 새로운 가치관 형성
 4. 새로운 질서의 형성: 제1사회에서 독립된 제2사회의 질서
 5. 소결: 체제 적응력의 상승
- V. 2·13합의 이후 체제 적응력의 추가 상승 가능성
 1. 국제적 환경의 개선
 2. 새로운 생존전략의 효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
 3. 남북경협을 진전에서 얻는 이득
 4. 핵문제 해결 이후 새로운 사회통합 전략 전망
 5. 소결: 체제 적응력 추가 상승

VI. 급변사태 변수와 체제 내구력

1. 급변사태의 개념
2. 급변사태 발생 요건 검토
3. 개혁·개방 과정의 급변사태 가능성

VII. 체제 내구력 종합평가

1. 체제 내구력 종합평가
2. 현재까지의 체제내구력 유지 요인
3. 향후 전망: 연착륙 가능성과 토크빌 역설의 가능성

VIII. 맺음말: 정책적 함의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기대하기 어렵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이 결국은 북한체제 변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체제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급변사태 가능성이 낮아지고 체제 적응력이 높아지면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북한당국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제변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에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연착륙 이후 예상되는 문제로서 개혁·개방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새로운 경제적 기득집단이 출현하게 된다. 그럴 경우 동서독과 같은 통일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동서독은 합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의 주민과 지도부가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서독에 흡수통일된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여 경제가 회생되면 남북한 통일정책은 다른 방식의 통일방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3합의 이후 핵문제의 해결, 북·미수교의 실현, 북한의 경제 회생, 북한의 체제 안정화, 남북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순리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한은 상호협력과 동시에 새로운 경쟁체제로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누가 안정적인 자기의 입지와 권력을 포기하고 다른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바라겠는가? 이러한 추세는 동서독 통일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의 체제포기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방안의 현실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의미한다. 남북한은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물류가 소통되는 경제협력의 관계는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신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은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신 유럽연합(EU)과 같은 방식의 남북연합의 체제를 상정해볼 수 있다. 유럽은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민족주의적 야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게 되었고 그 대안의 하나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형성을 시작으로 하여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하였고, 40여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연합(EU)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고 대북정책을 추구할수록 북한은 더욱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봉쇄와 대결보다는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북한의 식량난이 냉전종식 이후 소련 등 우방국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왔듯이, 남한의 1997년 IMF 외환위기도 냉전종식 이후 이념논리에서 경제논리로 변화된 미국의 대외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북한과 남한이 공통적으로 냉전체제에서 탈냉전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겪은 부적응이다. 이제는 21세기 탈냉전의 시대정신에 맞게, 이념을 넘어서 경제논리로 북한에 다가가야 한다. 20세기가 냉전과 이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탈냉전과 경제의 시대라는 것을 새삼 되새기며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탈냉전과 경제의 논리로 북한에 다가갈 때 북한이 훨씬 빨리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통일로 연결되든 않든 간에 변화하지 않는 북한보다는 변화하는 북한이 우리의 국익에 이롭다.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제 한민족의 개념은 한반도를 벗어나 한인이 거주하는 전세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의 통일이 아니라 전세계 한민족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I |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전세계 150여개 국에 660만명의 재외동포가 있다. 이 660만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획득한 동포와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을 모두 포함하는 수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210만명, 중국 240만명, 일본 90만명, 러시아(독립국가연합) 53만명 등 주변 4대국에 거주한다. 한인 재외동포 수는 이탈리아(6,000만명), 중국(2,500만명), 이스라엘(1,800만명), 멕시코(1,800만명), 우크라이나(1,200만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480만명)나 일본(260만명) 보다도 많은 수이며, 모국거주 인구(남북한)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거의 10%로,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분단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분단시켰다.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거주 동포는 친북한 환경에서 남한을 방문조차 할 수 없었고, 미국, 유럽 등 자유진영 동포들은 친남한 환경에서 북한 방문에 제약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민

단과 총련으로 나뉘어 반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일부 재중동포는 북한의 인민군에 편입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을 지지하는 조련도 지원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냉전 시기 남북한은 상호 대결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정책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여, 동포사회가 분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과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재외동포사회 내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국가별 재외동포사회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재외동포들의 실태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된 데 비해,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의 개념을 남북한간의 통일로 인식하며,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남북간 매개의 역할로 국한시킨 데 기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일의 개념은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포함한다. 모국 중심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한민족 공동체 형성은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에 한국이 중심이라는 우월주의는 자칫 해외 한민족 사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한민족 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민족 사회의 다 중심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의 개념을 넓힐 때,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일체의 노력, ② 거주 국가 내에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적인 노력, ③ 남북 양측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체성 회복노력, ④ 남북을 연결하려는 매개적인 노력, ⑤ 한 당사자와의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내부에서 통일의 동력을 끌어내는 행위, ⑥ 실제적인 모국에 대한 투자 및 지원, ⑦ 새로운 한민족의 공동 정체성을 향한 개념화 노력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 시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국가·정치 중심이 아닌 민족과 문화 중심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으로 재외동포정책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에 남북동수의 대표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민족공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통일과정에서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과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모색을 위해 중국과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주요내용

첫째, 본 연구는 재외동포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국가별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김일성저작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 등 북한원전과 한국 외교 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자료 등 정부원전에 의존하였다. 셋째, 향후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로서 중국과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현실과악과 정책 시사점을 위해서 오사카, 교토, 알마티, 타쉬켄트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분석이다.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을 각각 재외동포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방향,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후,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결론이다.

III 목차

- I. 서론
 - 1. 연구 목적
 - 2. 연구 방법과 구성
- II. 재외동포사회의 기원과 변천
 - 1. 1기 1860~1910: 농업이민
 - 2. 2기 1910~1945: 일제 강점기
 - 3. 3기 1945~1991: 해방이후 이민기
 - 4. 4기 1991~현재: 탈냉전기
- III. 재외동포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통일관련 특성
 - 1. 일반적 특성
 - 2. 통일관련 특성
- IV.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 2.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 3. 남북한 재외동포정책 비교
- V.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 1. 사례 연구
 - 2. 정책방향: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의 역할증진 방안
- VI. 결론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가난, 식민지, 한국전쟁, 냉전 등 대체로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21세기 대한민국에게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류의식을 가지는 상당한 규모의 동포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전반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가 자주독립이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통일이었다면, 21세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는 한민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해외의 한민족 사회가 거주국에서 성공

적으로 정착한 상태에서 고국에 대한 민족의식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내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경제·문화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다. 즉 각국에 존재하는 한민족 사회의 연결망 또는 유대체제를 말한다.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공동대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재외동포문제를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재외동포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주변국의 역사왜곡, 동화정책, 차별정책 등에 강력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국의 한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셋째, 건강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 거주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민족 네트워크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북한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노력에 앞서 국내적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에 걸맞게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강제 혹은 자발적이든, 원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서든, 이주의 동기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거주 당시 개인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고, 현 상황에서 남아있기를 선택한다. 이러한 의지와 욕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한민족 네트워크 구상의 기본이다.

이제 한민족의 개념은 한반도를 벗어나 한인이 거주하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의 통일이 아니라 전세계 한민족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 재외동포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을 계기로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들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I 필요성과 목적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아래로부터 인권인식이 확산되거나 시민사회의 맹아적 형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인식과 정책의 조정 및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식 확산 및 시민사회 형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인권대화, 기술협력, 압박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의 관건은 북한의 개방여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 성격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고 인권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북한은 인권해결의 관점이 아닌 체제 안보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포장하면서 대내 통제와 체제정당화를 위해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대북인권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

서 인권이 유린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두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주체인 동시에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북한당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인권개선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요소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들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전략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II 주요내용

본 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북한 자신의 인식,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제2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제3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와 민주주의 확산전략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고 대북인권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주주의의 개념과 구체적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기초로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유일사상을 토대로 유일지도체제라는 강력한 일인지배체제를 형성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다당제와 선거제도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요소를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둘째, '문제'로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대해 북한은 체제전복, 정권교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다당제와 절차적 민주주

의 수용 요구에 대해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배타적 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의 개념과 내용의 차원으로 북한은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은 문화상대주의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정립되고 있다. 그런데 인권은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 등 본질적으로 체제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은 국제규범과 유엔의 제도화를 통하여 발현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민주주의처럼 전면적으로 인권을 배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양대 국제인권규약인 A, B규약과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유엔이 중심이 되어 법규화된 국제인권규약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상대주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북한에서는 체제안보 차원에서 '인권공세'로 규정하여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관할권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의 원칙인 주권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침략 등을 근거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명분으로 미국이 침략전쟁을 감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권은 곧 인권이라는 극단적인 안보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III | 목차

- I. 서론
- II.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 1. 민주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
 - 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주요내용
 - 3.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III.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
 - 1. 우리식 인권개념의 정립

2. 자유민주주의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
3.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 IV.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1. 국제사회의 인권 공론화에 대한 인식
 2.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 V. 북한의 대응과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1. 북한의 대응
 2.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 VI. 결론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의 인권정책은 인권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체제안보 관점과 직결된 인권개념과 인권공세 인식으로 인권 해결의 관점이 아닌 ‘인권공세’ 대응의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대응은 인권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 외부위협, 현실적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되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 현상에 대응하는 체제유지, 2000년대 테러에 대한 전쟁, 색깔혁명 등에 의한 친미적 인 정권교체 등에 따른 체제 위기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체제 유지 차원에서 정책 조정 수위가 결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회생과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의 2가지 기준에 대한 비중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외부의 위협’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안보위협을 활용하여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여지 자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체제위협을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체제적 차원이 아닌 시급한 인권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북한국내법을 기준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함

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고 4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인권레짐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엔과의 인권대화, 개별국가 양자 차원의 인권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대북지원의 전환될 경우 '사회정치적 능력의 향상', '인권을 누릴 권리론에 기반한 빈곤축소전략' 등 국제적인 원칙을 북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북한주민의 참여 확대 및 역량 형성, 평양중심을 벗어난 중소도시와 지방의 개방, good governance 형성 등이 구체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경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주민의 이동 및 거주 자유권이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 변화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 변화 실태를 인권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I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인권개선의 방식들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인권논의는 주로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 촉구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실태보고서들이 발간되어 왔으나, 개괄적인 인권 침해 사례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권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회변화과정에서 개별 인권사안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거주 및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통제는 중앙배급제를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식량배급제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국내외 이동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택사용권의 개인 간 매매도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서 실제 거주 및 이동 제도와 달리 주민들의 국내 및 국외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주의국가의 이동 및 거주 권리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제도를 검토하고, 이것들이 어떠한 명분과 방법으로 규정되어왔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통제를 위해 주민의 이동 및 거주권을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는 어떠한 작동원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주민들의 여행 및 거주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차원의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주민의 이동 및 거주 자유권이 인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변화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변화 실태를 인권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사회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국내외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양상과 대응 제도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 발표된 문헌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국 등 사회주의체제 변화과정에서 주민들의 국내외이동이 이루어지는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민이동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불법이동 시 받게 되는 처벌을 인권적 차원에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들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여 온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여행 및 거주이동과 관련하여 국내입국 탈북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북한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국내 여행 시 여행증 발급절차 및 실태를 살펴보고, 식량난 이후 주택거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이 어느 경우에 허용되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입국 새터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여행 및 거주관련 인권침해의 정도를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감안하고 사회변화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권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당국에게 압력과 협력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권개선방안 제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거주·이동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계획경제와 거주·이동제도, 체제변화과정과 거주·이동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중앙당국이 생산과 분배과정을 총괄한다는 기본가정에서 근거하고 있다. 즉 국가가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주택, 식량 및 생필품 배급, 의료 등)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소재는 철저히 중앙당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들의 단기이동(여행)과 거주지 이동은 철저히 당국의 승인 및 등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직업배치가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별 신상에 대한 자료들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 일상생활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명분상으로 계획경제와 연계된 경제적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다. 즉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를 통해 계획경제 하의 호적관리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호적관리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상호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주민의 등록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여 왔으며, 향후 개혁·개방과정에서 주민 이동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게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거주·이동 제도를 신분등록제도, 여행허가제도(국내여행, 국외여행), 이주등록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실태와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을 검토해 보았다. 제5장은 거주·이동관련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향후 과제를 담고있다.

III 목차

- I. 서론
- II.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주·이동
 - 1. 계획경제와 거주·이동제도
 - 2. 체제변화과정과 거주·이동
- III. 북한의 거주·이동 제도
 - 1. 신분등록제도
 - 2. 여행허가제도
 - 3. 이주등록제도
- IV.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 1. 국내이동
 - 2. 국외이동
 - 3. 변화와 사회적 파급력
- V.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 1. 침해실태
 - 2. 개선방안
- VI. 결론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계획경제 하의 배급체제는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역이동이 불가피하나, 이전과 같이 사적인 용무로의 여행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여행증 발급을 위해 뇌물을 쓰거나, 단속당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강취당하여도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 북한주민들의 가정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 중 장사물건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개인의 신체적 어려움이나 인권침해에 그치지 않고, 가족해체의 상황까지를 유발하여 가족전체의 생활을 위협하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이동과정에서 인

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허가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고 여행증의 발급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여행 시 마다 여행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여행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평양시민의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소지함으로써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타 지역 거주자들에게도 평양시민과 유사한 여행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민증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의 이동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경연선, 평양, 나진선봉, 개성 등 특수지역 여행에 대해서도 여행증의 발급을 확대함으로써, 실제 주민이동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여행의 경우에도 국경출입통행증, 도강증, 여권 등의 발급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국외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를 당국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에 실질적인 제약은 북한의 열악한 교통수단에도 기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인 기차의 경우 정기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 기착지에서 연착되는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버스 및 사회트럭, 군대트럭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고비용인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평양 보안성 산하 울림운송 합영회사(신의주, 해주, 함흥, 청진 분사)에서 각 주요도시 간 장거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송회사의 버스들이 매우 노후한 것이고 도로사정도 좋지 않아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단위 운송체계를 합법화하고 당국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지역 간 이동과정에서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단체나 기관에 의한 독과점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및 여행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운행체계를 가진 운송수단을 지역단위에서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

적 상황이 지역단위 운송체계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의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운송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북한주민들의 여행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내 운송수단 확대를 위한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은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내이동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무직(무단결근)의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주민들은 단속 될 경우 조사 및 수감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수감시설의 열악한 영양 및 위생 실태로 인한 허약 및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체포 이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탈북자들은 북한과 중국 간 체결된 합의서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송환되게 된다. 탈북자들은 송환 이후 '처벌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명백하지만, 불법이주자로 간주되어 난민에 준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규모가 급증하면서, 북한당국이 생계형 단순이동과 정치적 이동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자 송환 이후 처벌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탈북자의 거주 지역 및 송환 시기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현격히 변화하게 된다.

중국과 북한당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양국 주민들의 처리절차에 최소한의 인권보호 요소들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국이 불법이동으로 단속된 상대국민의 처리과정을 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정부는 양국 주민들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수요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상대주민에 대해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남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북한여성들의 강제송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남성가족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당국도 북한여성들의 체류 합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현실적으로 어느 사회에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과 중국당국도 결혼을 위한 국경이동을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결혼을 위해 이동하는 당사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인권보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반인권적인 상황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선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각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큰 사안은 바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제약일 것이다. 일반 사회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중앙계획경제 하에서 주민들의 거주등록을 배급체계, 교육, 직장배치, 의료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다. 주민들의 거주등록은 계획경제 하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주민들의 거주지 결정이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반영한 주민성분 분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평양은 ‘혁명의 수도’로 규정되어 특별한 권리들을 부여받을 만한 주민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평양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는 현격하나 정당화되어 왔다. 북한의 경우에도 당국의 필요에 의해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보다는 도시노동자들이 우선시 되어 왔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북한에서는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장기업소 등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하고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도시노동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단순히 ‘퇴거리 장사’ 등을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민이동을 통제하는 인민보안성은 시군 보안부 주민등록과를 주축으로 매 2년 마다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이주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외부자본의 투자가 확대되면,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국의 정책적 관심 및 투자, 외부자본의 투자는 주민이동에 소득 및 취업기회 확대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엄격한 주민관리체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당국이 철저한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동관련 허가제도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 수요를 감안하여,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해외 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들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탈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파급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불법탈북자들의 처리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등 관련당사국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 및 임시취업 등을 위한 국경이동의 수요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백서의 발간목적은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의 중·장기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I | 필요성과 목적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2006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 당국도 형법 등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인권규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권개선을 위한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2006년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의 중장기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II | 주요내용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억압적인 북한체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일탈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의 자유권, 생명권의 유린이 일상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빈도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개처형을 시행하고 있다.

2.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2006년도에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명권이 존중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급노선이 견지되고 관련자들의 인권 인식이 미약하여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여전히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출신 성분과 사회성분을 구분하여 입당, 교육, 제반 생활에서 차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연좌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신분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유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비공식 차원에서의 시장요소의 활성화 등 의도하지 않은 사회변화의 결과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교육기회, 직업 등에서 성분정책이 완화되고 있으나 당 기관 등 체제보위를 위한 직책에는 여전히 출신성분이 핵심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한다.

여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행증 제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여행을 통제하고 평양, 국경지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은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경우 보안원들의 단속으로 여행증이 필요하지만 기차 이외의 이동수단으로 도 내에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출판, 결사·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은 본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최근 핸드폰 등 외부정보 유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장마당 등에서 매대를 통해 비밀리에 외국서적들이 유통된다

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가된 종교시설과 종교의식, 중앙 종교단체 이외에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등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경우 종교인과의 접촉이 발각될 경우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최근 북한의 농업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약 630만 톤으로 계상하면 아직도 2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2007년 신년사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핵심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의 증가추세가 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북한주민의 식량접근권은 단순한 북한의 식량수급실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의 변동 폭과 주민들의 식량구매능력 간의 차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식량가격이 보다 하향 안정화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식량구매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면 주민들의 식량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7·1조치로 인해 사실상 포기한 의·식·주 공급제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의 모순과 마찰은 과거와 달리 가입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7·1조치로 인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국가에 납입해야 할 집세, 전기세, 교육세, 교통비 등의 세금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 구매능력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4. 소수자 인권 실태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

주치게 되는 장마당 보안원, 열차승무 보안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특히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및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 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굶주림과 가정해체로 인해 많은 ‘꽃제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 악화는 이들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2000년 이래 14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에 전후납북억류자 79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한 결과 14명 생존, 18명 사망, 47명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생존자 14명 중 13명이 남측가족과 상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어 상봉행사에 13가족 58명이 동반 참여하였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4만 1,971명이며, 이중 포로교환시 귀환자 8,726명, 유가족 신고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1만 3,836명, 이들을 제외한 1만 9,409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2007년 1월 22일)는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생사확인된 국군포로가 총 1,738명이며, 그 중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54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 중 일부는 전사자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억류된 생존 국군포로의 숫자는 국방부 주장보다는 많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기준 귀환 국군포로 본인 67명, 동반 가족이 133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벗들은 2006년 동북삼성 서북쪽 오지 한족마을(약 2만 명)과 선양, 파렌, 칭따오 등 대도시 근교지역(약 3만 명)을 조사하여 탈북자 10만 명, 탈북자가 출산한 어린이들이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 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의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탈북자의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도강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북한주민의 불법 국경이동과 관련 알선행위가 실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밀입국 알선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일부사례에서는 탈북경험이 있는 이웃주민이나 도강안내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웃이나 친척과 동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어 왔다.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에도 중국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이후 상대남성을 찾지 않게 된다. 중국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하게 되면, 유산 혹은 출산을 상대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중국남성과 동거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III 목차

-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II.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IV.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인권백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행본 북한인권 보고서로서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사회의 인권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영문으로 번역되어 인권관련 국제 NGO,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각국 주한 대사관, 인권운동 전문가들에 배포되어 매년 시행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기능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법률을 개정하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실태의 변화에 대한 지속

여부를 평가하여 대북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 할 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로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과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요구전략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협동연구부문

-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명	연구자	연구기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책임자) 박형중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강동완 (기획조정실 연구원)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병원 (서울산업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기획조정실장) 여인근 (동북아연구실장) 최춘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송정호 (우석대학교 교수) 오현철 (전북대학교 교수)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통일연구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실장) 조한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 석 (남북협력연구실 연구위원) 조정아 (남북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이주철 (KBS 남북교류협력팀 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명	연구자	연구기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대전대학교 교수) 박채복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진숙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차조일 (경인고등학교 교사)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정란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조종기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각 구성단위들 간 상호협력, 권력 조정, 분쟁 해결, 효율적 작동 등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거버넌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분야별 거버넌스의 발전 정도와 특성에 따라 개선 방향과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적합한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I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의 추진 목표, 정책 수단과 방법은 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의 국가 또는 정부를 중심으로 집권적·계층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던 상황과는 달리, 국가 이외에 다양한 행위자가 출현했고, 고전적 통일안보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이슈 영역이 대두했으며, 행위자 및 이슈 간의 중층적 차원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정보화·민주화의 확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생해왔는데,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제시한 이후 가속화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정부로 일원화되어 있던 대북 접촉 창구를 다원화하자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보다 뚜렷해졌고, 여론형성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언론과 학계에서의 논쟁과 조치가 증가했다. 국내에서 대북정책의 여러 사안에 관련하여 NGO의 개입과 활동이 증가했고, 국제적 대북지

원의 본격화 및 북한의 수교 국가 증가로 인해 북한문제에 관한 국제적 개입이 증가했다. 한국정부가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NGO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증진 노력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국내에서 더 많은 행위자가 북한과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에 관한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의 강도가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방식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판적 반작용도 증가했다. 국제적 대북지원의 증가와 함께 인권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심도 국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민간의 대북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세력이 국내외에서 보다 조직화되며 비판을 체계화하는 양상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전반 및 구체적 사안에 관한 의사형성과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대내외 행위자가 참가하고 상호 영향을 끼치는 복잡한 양태가 발생하였다.

점차 분명해진 것은,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며 그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는 한편, 이러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을 끌기 시작했던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을 강조하며 국가-사회관계가 기존의 관료중심의 위계적 통치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협력하여야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에 관한 새로운 인식틀로서 거버넌스 이론을 도입하고 이에 준거하여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정치 등의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수평적 협력정치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적 국정운영에서 국회,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협력정치(協治) 관계 정립을 의미한다. 즉, 효율적이고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인식체계에 준거하여 제시된 평화·번영정책은 기존의 통일정책과 다른 새로운 추진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도 이전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정부주도의 통치(government)모델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공조에 의존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모델로의 이동이라는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도 종래와 같이 중앙정부가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조직과 중간 매개적 조직들 간의 연결망에 의거한 협의적 정책 결정과정과 수행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은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며, 아울러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 및 활성화 그리고 공고화를 위한 3개년 연구가 통일연구원 주관 하에 여러 연구기관과의 합동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에 시행된 1차년도 연구 사업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였다. 본장에서 그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2007년 2차년도 연구주제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다. 3차년도인 2008년에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의 공고화』라는 제목으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2차년도의 주요 연구 내용은, 분야별 거버넌스의 발전 정도와 특성에 따라 개선 방향과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적합한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적 문제인식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출현은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지만,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실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버넌스 (good governance)’가 필요한 바, 그 개념 내용은 무엇이며, 또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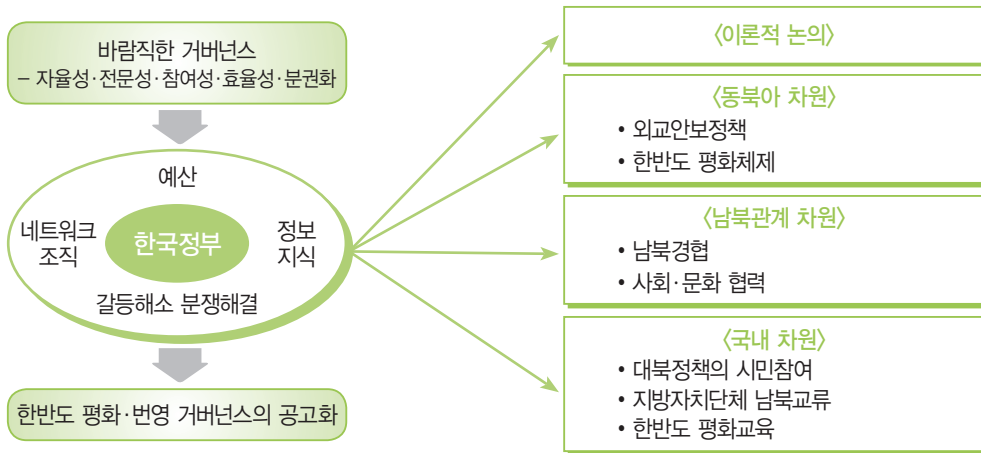
2차년도의 연구는, 거버넌스적 조종기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각 구성단위들 간 상호협력, 권력 조정, 분쟁 해결, 효율적 작동 등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거버넌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거버넌스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면, 일관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 어렵고, 개별적 거버넌스 구성 인자는 각자 다른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의 문제에 접근할 것이며,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가 충돌과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괄해서 해결할 주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현상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도, 거버넌스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지향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혁신과 변화의 관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1차년도에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필두로, 동북아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내 차원의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를 다루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회문화 협력 등을 다루며, 국내차원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교류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등의 개선 및 활성화를 살펴본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의 기본방향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관련 문헌들을 종합해 보고,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메타거버넌스가 소개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역할을 맡아야 하는 국가의 기능을 주된 논지로 제시한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데, 특히 한반

도 평화·번영과 같은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거버넌스를 관리할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전략 메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 그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의 내용 등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국가가 한반도 평화·번영의 여러 이슈 영역에서 메타 거버넌스적 기능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다음 주제는 외교안보이다. 먼저,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개선·활성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에 관해 고찰한다.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굿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거론한다. 나아가 외교안보정책의 환경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해 살펴본다.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환경 변화,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외교안보정책체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와 주요 행위자 등에 관해 연구한다. 그리고 굿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외교안보정책의 거버넌스의 실태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평가한다. 특히 세 가지 사례를 연구한다. 즉, 한미동맹,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 및 사례분석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선·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그 다음의 주제는 평화체제 거버넌스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의 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내적 차원 등으로 나누어 대안을 모색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특히 정부의 메타거버넌스 기능에 주목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축소 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거버넌스 행위자 중 하나가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의 관리자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는 구축 이후의 과정에서 각 구성단위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등을 고양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의 실태파악에 기초한 그 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을 분석하는데 일종의 준거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 주제는 대북정책에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이다. 본 연구는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북정책 거버넌스적 현상의 확대에 근간이 된 시민참여를 민주주의 이론

적 접근을 통해 점검해 보고, 대북정책 분야에서 심사숙고와 토론에 의거한 심의민주주의적인 ‘참여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본 프로젝트의 이론 개발팀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를 이론적 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대북정책 거버넌스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현재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임파워먼트와 의사결정참여 등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대북정책을 결정·집행함에 있어 정부라는 행위자가 위계상 ‘집권형’ 거버넌스의 최상위적 위치가 아니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심의민주주의적인 수단·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본다. 첫째, 남북간 경제협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한다. 이어서 둘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를 행위자별 및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남북경협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북측과 만나서 대북사업을 영위하는 실무자들 및 정부차원에서 남북경협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대북한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이러한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방안의 포괄적 파악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운용과정과 대북사업 지원기관 사례연구 및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관련 합의서 이행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활성화방안을 요약 및 정리해서 추후에 추진할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다.

그 다음 주제인 사회문화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이 분야를 학술·종교·문화예술·언론·출판·방송·관광·대북 지원 등으로 나누어 그 실태조사와 함께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대북 인도적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는 그 대부분이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보고 포함시킨다. 사회문화 분야의 각 분야는 국내·남북관계·국제차원에서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정책단계별 실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실태를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뒤,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연구는 전체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를 다른 각 장을 모두 세 가지 부분으로 단순하게 구성한다. 각 장의 도입부는 해당 분야의 교류연혁을 살펴보면서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와 그 역할을 규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해당분야의 거버넌스 실태를 정책단계별로, 평가지표별로 분석한다. 마지막 부분은 이를 토대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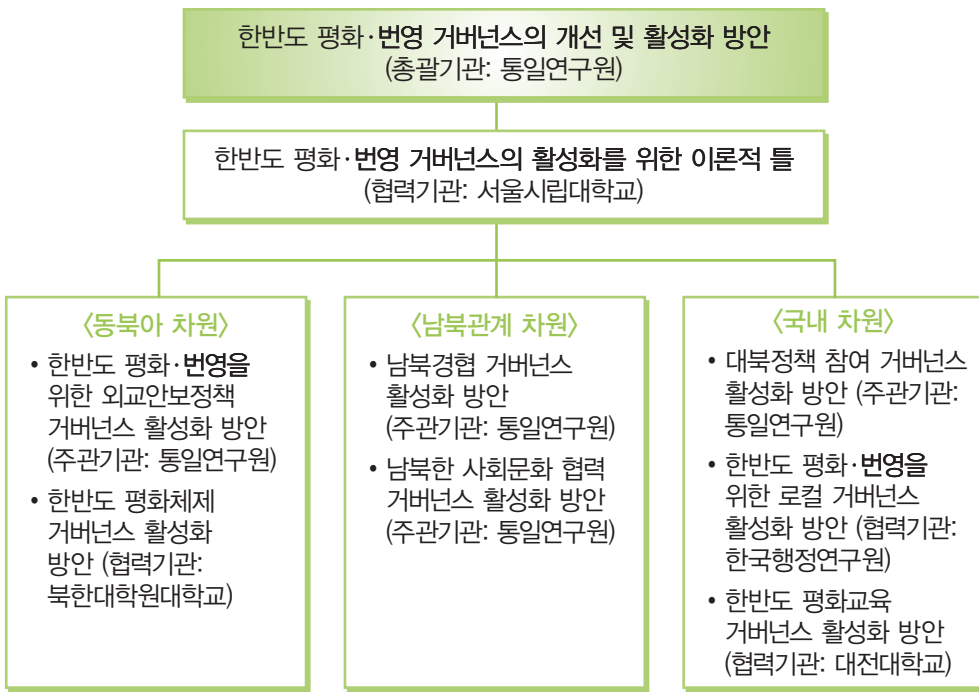
그 다음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한 로컬 거버넌스이다. 여기서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거버넌스의 개념에 입각해 관련 행위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협력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여러 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맥락을 이해하고 구축·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활발히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도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거버넌스의 구축실태 및 문제점을 조명한다.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본 연구는 남북교류에 대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NGO, 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주제는 평화교육이다. 본 연구는 평화교육이 단독형 평화교육과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으로, 또한 그 행위주체에 따라서는 학교 평화교육, 공공평화교육, 비정부 평화교육으로 구별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은 단독형 평화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시장, 미디어 등 평화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평화 및 평화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는 실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이 경우,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활성화의 중요하고 중심적인 논의대상은 정부주도형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방안과 학교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위의 연구들이 제시한 여러 연구성과를 요약하는 한편, 종합적 차원에서 그 정책 함의를 평가한다. 또한 이번 2차년도 연구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과 활성화,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을 보다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보려는 정책적 탐색이 핵심과제인 만큼, 종합적으로 또한 개별 분야에서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3차년도 연구과제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공고화 연구과제의 기획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협동연구는 통일연구원이 기본계획서와 이에 따른 연구분야 및 세부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모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 공정성, 적합성, 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일연구원을 총괄연구기관으로 하여 4개의 세부과제는 통일연구원이 그리고 나머지 세부과제는 1개의 국책연구기관 및 3개의 대학교가 협력연구기관으로 하는 협동연구망을 구축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구수행체계 및 참여 연구기관



이러한 연구망의 구성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 및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였고, 특히 연구대상이 여러 행위자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거버넌스인 점이 감안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전대학교 등의 공동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전체 방향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분야별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종합보고서이다.

III 목차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박형중·강동완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II.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 1.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 2. 네트워크 거버넌스
 - 3. 메타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 4. 한반도 평화·번영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전략적 메타 거버넌스
 - 5. 한반도 평화·번영의 메타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적 과제
- III.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실태와 평가
 - 3.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부록 1〉 설문조사지
 - 〈부록 2〉 사례별 설문조사 응답
- IV.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이론적 논의
 - 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 3. 국제적 차원과 6자회담
 - 4. 남북관계 차원과 남북협력
 - 5. 국내적 차원과 국민적 합의
- V.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이론적 논의
 - 2. 대북정책단계별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 3. e-참여 거버넌스의 활성화
 - 4.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 활성화

- VI.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거버넌스 활성화 개념
 - 2. 정부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3. 비정부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4.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의 실제적 적용사례: 개성공단
- VII.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이론적 논의
 - 2. 학술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3. 종교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4. 문화예술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5. 언론방송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6. 관광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7. 대북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VIII.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현황
 - 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실태분석
 - 4.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5.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IX.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 2. 학교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3. 공공사회교육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4.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5.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X. 결 론
 - 1. 분야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2. 종합 평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서창록·민병원·전재성

- I. 서론
- II. 거버넌스 실태조사의 내용
 - 1. 자율성(autonomy)
 - 2. 전문성(specialization)
 - 3. 참여성(participation)
 - 4. 네트워크(network)
 - 5. 분권화(decentralization)
 -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 III.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 1. 굿거버넌스의 역사
 - 2. 개념
 - 3. 문제점
 - 4. 굿거버넌스와 한국 적용
- IV. 네트워크 거버넌스
 - 1. 거버넌스와 정부: 네트워크 속에서의 공존
 -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속성
 -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 4.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능과 구조적 내재성
 -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와 의미
- V. 메타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 VI. 한반도 평화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 1. 메타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 2. 한반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 VII. 한반도 평화의 메타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적 과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배정호·박영호·여인곤·최춘흠

- I. 서론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분석시각과 개념
- II.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 1.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 III.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실태와 평가
 - 1. 한·미동맹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과정
 - 2.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
 - 3.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
- IV.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1.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사점
 -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V. 결 론
 - 〈부록 1〉 설문조사지
 - 〈부록 2〉 사례별 설문조사 응답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김근식·김갑식·이정진

- I. 서 론
 - 1. 문제제기
 - 2. 연구내용 및 접근방법
- II.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 1.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 2.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 III. 국제적 차원과 6자회담
 - 1.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2. 국제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 IV. 남북관계 차원과 남북협력
 - 1.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 2.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 V. 국내적 차원과 국민적 합의
 - 1. 국민적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2. 국내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VI. 결 론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송정호·오현철·이원태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1.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 2.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 III. 대북정책 참여제도 활성화
 - 1. 정책단계별 참여제도의 확대
 - 2. 대북정책 단계별 참여제도의 개선
 - 3. 대북정책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과제
- IV. e-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 1. 온라인 정책참여의 확산과 한계
 - 2. 온라인 정책참여제도의 유형과 사례
 - 3. 온라인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과제
- V.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의 활성화
 - 1.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의 확장
 - 2.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의 유형과 사례
 - 3. 심의민주주의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과제
- VI. 결 론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조한범·이 석·조정아

- I. 서 론
- II.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거버넌스 활성화 개념
 - 1. 남북경협의 발전과 환경변화
 - 2. 남북경협과 거버넌스 활성화
- III. 정부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예산 등 자원의 지원

- 2. 제도화
- 3. 정보·지식·비전 제공
- 4.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력
- IV. 비정부차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기업 차원
 - 2. NGO 차원
 - 3. 국제 차원
- V.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의 실제적 적용사례
 - 1. 개성공단 사례연구
 - 2. 대북사업 지원단체 사례연구
 - 3. 경공업-지하자원 사업 사례연구
- VI. 결 론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최수영·이금순·김병로·이주철

- I. 서 론
 - 1. 연구목적
 - 2. 분석틀과 거버넌스 활성화
- II. 학술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학술교류 현황
 -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III. 종교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종교교류 현황
 -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IV. 문화예술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 문화예술교류 현황
 -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V. 언론방송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언론방송교류 현황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VI. 관광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관광교류 현황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VII. 대북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2. 거버넌스 실태분석과 평가
3.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VIII. 결 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이준호·최유성·최진욱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II.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
2. 남북교류와 로컬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4. 연구분석의 틀

III.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현황

1.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현황
2.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평가

IV.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실태분석

1.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 분석

2. 정책과정에서의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사례분석
 3.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실태 평가
 4. 종합평가: 성과와 문제점
- V.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민간단체의 자율성 강화
 2. 대북사업관련 전문성 제고
 3. 개방적 참여의 확대
 4. 효과적 네트워크의 구축·운용
 5. 내부 결정과정의 분권화
 6. 신뢰를 통한 효과·효율성의 제고
- VI. 결론 및 정책건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박채복·유진숙·차조일·설규주·박정란

- I.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1. 들어가는 말
 2.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3.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전략적 메타 거버넌스
- II. 학교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학교 평화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학교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실태
 3. 학교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III. 공공사회교육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공공사회교육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 공공사회교육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공공사회교육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IV.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거버넌스 이론에서 본 비정부기구 평화교육의 이론적 논의
 2.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V. 결론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2.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1차년도에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면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거버넌스 활성화란, 평화·번영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적 현상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도 거버넌스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분야별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는데, 주요 지향점은 첫째, 국가의 메타거버넌스 능력 향상, 둘째, 분야별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분야별로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셋째, 각 분야별 거버넌스 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 세 가지였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되었던 분야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책방향 제시에서 일련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우선 전반적인 특징이라 한다면, 국가의 메타거버넌스적 기능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분야가 외교안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역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자원, 즉 예산, 정보와 지식, 네트워크 조직력, 갈등해소 및 분쟁해결 능력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개입해 달라는 요구가 대체로 공통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첫째, 예산의 효율적, 전략적 지원을 통해 각 주체들이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둘째, 정보와 지식을 올바르게 제공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 구성단위들을 효율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시키기 위하여 조직적 비전과 역할을 가지고 각 구성단위들을 대해야 하며, 넷째, 행위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도에서 활성화의 측면이 분야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 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 즉, 국가의 메타거버넌스 능

력 향상, 분야별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분야별로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각 분야별 거버넌스 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측면 모두에 강조점을 두는 방식으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와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정책 제안이 정부가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내적 차원 등에서 예산, 정보와 지식, 네트워크 조직력, 갈등해소 및 분쟁 해결 등 메타적 조정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메타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부 기구 내부, 정부와 민간, 국내와 국제 행위자 사이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은 국가의 메타 거버넌스 기능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정부가 거버넌스 행위자 중 하나가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의 관리자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는 구축 이후의 과정에서 각 구성단위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등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예산, 정보와 지식, 네트워크와 조직,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등 전략자원을 동원하여 행위자별로 각기 분절화되고 전략적으로 분화된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은 국가의 메타거버넌스, 바람직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국가 메타 거버넌스의 수단 중에서 정보와 지식의 제공, 갈등해소와 분쟁 해결과 관련한 제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협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메타거버넌스 기능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 측면이 강조되었다. 후자와 관련하여 특히 정부와 기업, 기업 상호간, 기업과 NGOs, NGOs 상호간, 국내 행위주체와 국제 행위주체간 등의 네트워크를 다차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메타 거버넌스 강화의 측면이외에 특히 개별 하위 거버넌스의 내실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남북간의 학술, 종교, 문화예술, 언론방송, 관광, 인도지원 등 각종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분야별로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이 강화되어야함을 보여주는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 남북교류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와는 달리 국가의 메타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 방안은 주로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등 거버넌스 내실 강화를 위한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메타 거버넌스 강화, 평화교육 실행 주체 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 등의 두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각 분야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중점 분야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중점 분야

분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거버넌스 지향유형
		바람직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동북아 차원	외교안보정책			√	집권형
	한반도 평화체제			√	집권형
남북관계 차원	남북경협		√	√	관리형
	사회문화 협력	√			분권형
국내 차원	대북정책의 시민참여			√	분권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	√		분권형
	한반도 평화교육		√	√	관리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분야별 거버넌스 활성화가 지향하는 분야별 거버넌스의 유형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 유형이란 다음의 세 가지와 관련한다.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거버넌스 관리 양식을 주도하는 집권형,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분권형, 정부가 거버넌스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리형이다. 이와 같은 구분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련한 전체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국가의 메타 거버넌스의 기능을 중시하는 관리형을 이상형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남북경협 및 평화교육 거버넌스도 관리형에 속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정부의 메타 거버넌스 기능이 강조되었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와 평화체제 거버넌스의 활성화된 이상형은 보다 집권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부의 메타 거버넌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명	연구자	연구기관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책임자)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강동완 (기획조정실 연구원)	통일연구원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영윤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중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기호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차명제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NGO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한반도 통일이나 동북아 평화구축 모두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통일의 원칙과 방식을 고려할 때 NGO의 역할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동북아 평화구축의 경우 역시 정부간 협력의 한계와 민간활동의 장점을 생각하면 NGO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I 필요성과 목적

국내외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과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조직체인 NGO들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의 연구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보도와 다

양한 실제 행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왔다. 국외적으로는 1980년대 말 동서냉전 종식의 원동력 중 하나로서 시민사회와 NGO들의 활약상이 많이 지적되면서 국제 정치의 구조와 정책변화의 핵심적 행위자로서 그들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사실 NGO들의 수적 증대는 물론 활동의 질적인 다양화와 수준제고로 인해 심지어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혹은 그 연계망(Global NGO Networks)의 출현을 논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역사, 지리, 언어, 문화 등과 같은 시공간적 공통점에 기초한 전통적인 개념의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이자 담론의 장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국내적으로도 6·29선언 이후 눈부신 시민사회와 NGO의 급성장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징표이자 척도로서 널리 인정되어 왔다. 활동 분야 면에서도 인권·개발·환경·여성·소비자운동 등 사회운동 분야는 물론 과거 국내에서는 성역시 되어 민간 차원에서는 쉽게 다루지 않았던 안보나 국방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NGO의 활동과 영향력 증대현상은 최근 명령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에 의한 통치(government)와 구별하여 다양한 집단들의 폭넓은 참여와 토론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의미하는 협치(governance)가 강조되면서 더욱 더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미처 나서지 못하는 이슈나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꺼리는 이슈들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유발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NGO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책적 주창활동(policy advocacy) 외에도 NGO들은 관행이나 구태로 인해 유지·반복되어온 잘못된 사회적 폐습을 캠페인이나 대중동원을 통해 개혁하려는 사회운동 분야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런 성격을 띤 단체들을 흔히 구별하여 사회운동조직(SMO)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공간적 활동범위는 대개 국내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이런 경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즉,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SMO나 지원기관들과 연대 혹은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공동으로 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조직(TSMO)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NGO들의 이러한 두 가지 최근 특징에 주목하였다. 즉, 하나는 NGO의 활동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통일 분야에서의 NGO 활동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NGO의 활동공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서 NGO들의 연대 혹은 네트워크 활동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과 발전방안을 알아보

려고 한다. 동북아에서 NGO 네트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논의해야 될 의제는 크게 6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동북아 지역 NGO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NGO 교류협력은 어떤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기초해서 이뤄진다. 따라서 공동의 과제로 각국 NGO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NGO들이 교류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인식이 동일 지역 NGO의 공동의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동북아 NGO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정책 결과물은 매우 빈약하기 짝이 없다. 보통의 경우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와 성명서가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NGO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정책 대안의 형성, 효과적인 정책 수단과 절차,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차원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지방 내지 국가 단위 NGO의 동북아 협력활동 촉진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동북아 NGO 교류협력은 소수의 NGO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를 넘어서서 NGO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NGO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벅찬 일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 별도의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담당자가 없으며, 일회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려고 해도 경비와 언어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넷째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NGO들에게 있어서 재정문제는 숙명적인 것이다. 역사가 길고 국제적 명성을 얻은 일부의 국제 NGO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NGO가 재정의 취약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NGO를 후원하는 기부자들은 재난의 희생자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NGO 자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기부에 소극적이다.

다섯째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기구들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매우 적극적이다. 유엔 산하의 각 기구들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아직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여섯째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이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많은 부분에서 NGO 교류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서도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소수의 NGO만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발전의제들이 NGO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난망한 일이다. 아니 이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매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발전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가 추진된 것이다. 즉,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와 연대활동을 활성화하고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 마련을 위해 현재의 인프라에 대한 실태파악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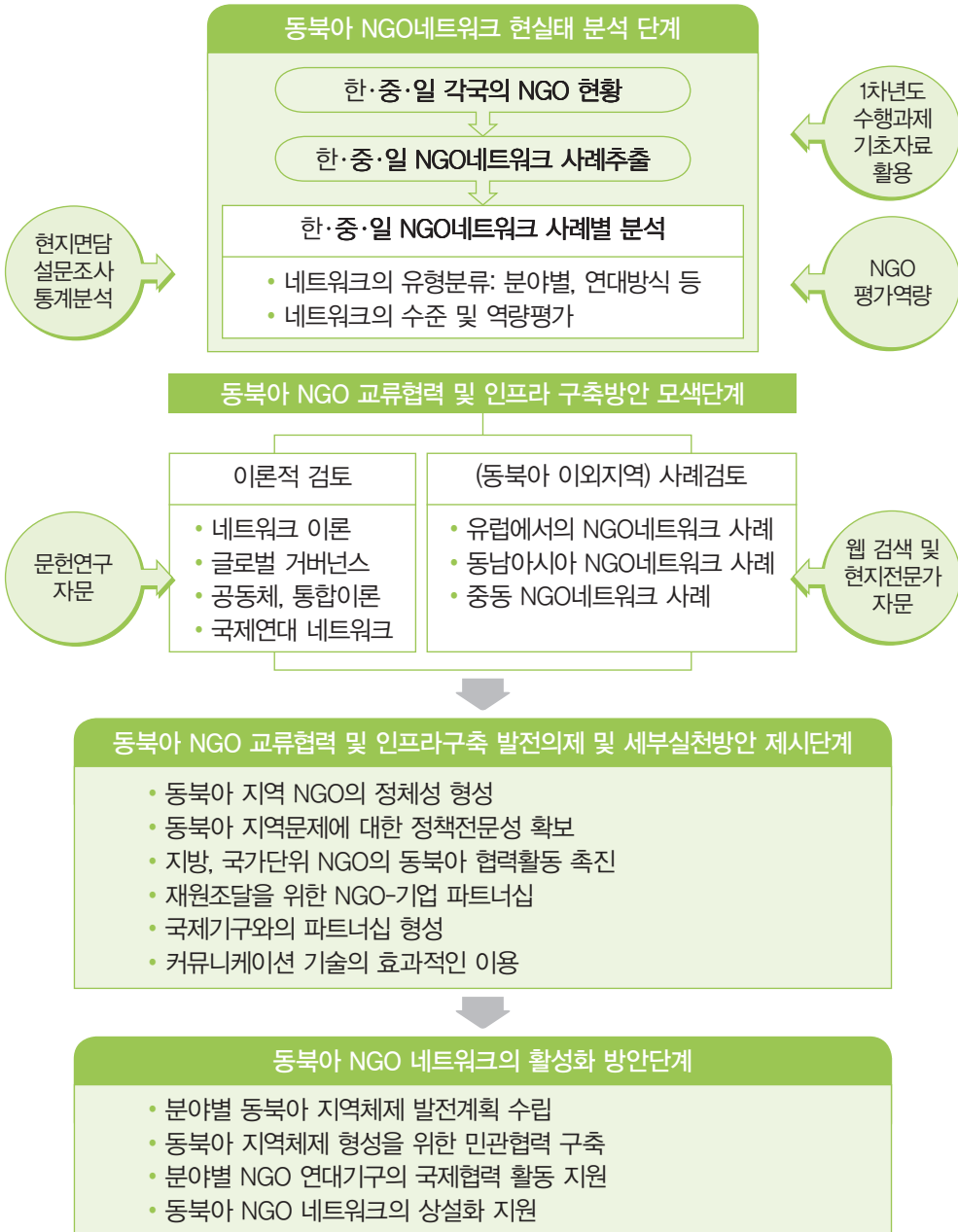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NGO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추진되는 협동연구로서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년도(2005년)에는 『동북아 NGO 백서』와 『동북아 NGO 연구총서』를 통해 동북아 지역내 분야별 NGO 현황 및 특성과 NGO간 교류협력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NGO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NGO 활동의 주요 분야로 반전·평화, 환경, 인권, 역사, 대북지원, 탈북자정착지원 등 다각적인 분야의 활동현황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제2차년도(2006년)는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제1차년도에서 수행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동북아 지역내 NGO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문제점 및 발전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내, 특히 한·중·일 NGO들의 교류·협력 실태를 각국 전문가·학자·NGO실무자 등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현안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NGO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발전의제를 모색하였으며, 나아가 동북아 NGO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3차년도(2007년)에는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정부부

문이 아닌 NGO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3개년에 걸친 단계적 및 다층적 연구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3개년 연구종합의 구성도



아울러 본 연구는 학제간 연구와 해당분야 전문 연구기관 및 NGO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정책적 대안 제시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의 기본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실사구시적 성격의 현장감 있는 연구 수행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III 목차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김영호·강동완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NGO 연구의 이론적 기초
- II.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1. 통일대비 국내NGO의 현황과 역할
 2. 통일 대비 국내NGO의 기존 역할 평가 1: 교류·협력 활성화 측면
 3. 통일 대비 국내NGO의 기존 역할 평가 2: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측면
 4. 통일 대비 국내NGO의 기존 역할 평가 3: 통일 거버넌스 구축 측면
 5. 통일 대비 국내NGO의 발전방향
- III.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1.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현황
 2. 동북아 NGO 부문별 인프라 개선 방안
 3.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IV. 결론
 1. 한반도 통일대비 NGOs의 역할과 발전방향
 2.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3. 종합 결론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 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김영윤·김수암

-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 II. 통일대비 국내 NGO의 현황과 역할
 1. 통일 NGO의 현황
 2. 통일 NGO의 분류와 분포
 3. 통일 NGO의 역할
- III. 통일 대비 국내 NGO의 기존 역할 평가 1: 교류·협력 활성화 측면
 1. 국내NGO의 자체 평가
 2. 전문가 평가
 3. 소결: 종합평가
- IV. 통일 대비 국내 NGO의 기존 역할 평가 2: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측면
 1. 국내 NGO의 자체 평가
 2. 전문가 평가
 3. 소결: 종합평가
- V. 통일 대비 국내 NGO의 기존 역할 평가 3: 통일 거버넌스 구축 측면
 1. 국내NGO의 자체 평가
 2. 전문가 평가
 3. 소결: 종합평가
- VI. 통일 대비 국내NGO의 발전방향
 1. 교류·협력 활성화 측면
 2.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측면
 3. 통일거버넌스 구축 측면
- VII. 결 론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이종무·이기호·차명제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념 및 구분
 3. 연구범위 및 구성
- II.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현황
 1. 한·중·일 시민사회 및 NGO 현황에 관한 비교
 2. 인적 인프라 현황
 3. 재정적 인프라 현황
 4. 제도적 인프라 현황
 5. 소 결
- III. 동북아 NGO 부문별 인프라 개선방안
 1. 인적 인프라 개선방안
 2. 재정적 인프라 개선방안
 3. 제도적 인프라 개선방안
- IV.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방안
- V. 결 론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통일NGO들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기반 구축에 보다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는 대개 세 가지 분야로 정리된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차원에서는 첫째, 통일NGO들의 남북교류협력은 전체적인 통일정책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를 각각 분리하여 경제평화를 먼저 촉진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일NGO들은 통일기반 구축의 우선순위를 정치군사적 의제에 두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통일NGO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평화 촉진을

통해 통일대비 상호 신뢰기반 구축에 힘쓰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통일NGO의 역할 다변화 필요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처럼 정치군사적 의제에 치중한 활동을 하면 정파적 편향성, 일방주의적 운동, 과도한 이념 표출 등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통일기반 구축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NGO들이 정군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중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의 복잡하고 산적한 현안들의 실존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통일NGO들의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로 교류단계와 지원단계에 접근한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남북 상생의 경제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2007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어려움이 없는 직교역을 통한 교역확대,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NGO간 강한 통일열망에 따라 과당 경쟁을 하거나 일회성 사업의 추진으로 상호 갈등을 초래하거나 역량의 부족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 하에 기업과 통일NGO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분야인 통일기반구축 분야에서도 필요한 개선점들이 있다. 첫째, 통일NGO들은 백화점식 통일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특화를 통한 전문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어느 통일NGO가 대북 경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담부서와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일NGO들은 인원과 재정이 열악하여 대북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NGO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가의 양성은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가속도를 높여갈 수 있다.

그런데 통일NGO들은 대부분 상근활동가가 5인 이내이고 재정도 열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유사단체들을 통합하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단체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개별 단체가 지나치게 개인중심으로 구성되어 유지되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허가한 통일NGO도 200여개가 넘지만 대부분 이렇다 할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에 전화만 갖추고 1~2인이 상근하는 단체들도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 이로 인해 몇몇 단체들은 ‘이름걸기식’ 연대운동에 참여하여 비전문성과 무책임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통일NGO의 양적 증가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업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통일NGO들의 조직역량과 재정형편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차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통일NGO의 수적 증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효과적인 통일기반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NGO들의 남북통일기반 구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운동 대중화, 통일정책의 대안화, 통일논의의 균형을 토대로 평화와 통일 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일NGO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통일NGO의 정당성은 단체들의 활동의 질과 국민적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여 그 활동과 성과가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NGO가 추구해야 할 원칙과 가치는 특정의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 정신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추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촉진토록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인 통일정책 거버넌스 형성 분야에서는, 남북의 국가통합을 위한 통일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NGO와 정부, 시장 등 개별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의 통일정책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의 상대자인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발시켜 전향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이 남북평화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왔던 통일정책도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특히 통일NGO들이 통일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는 것은 정부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통일축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특히 민간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한편,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NGO들의 노력이 중요한데 동북아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NGO 활동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고,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서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동북아라는 지역 차원의 NGO 교류협력 인프라는 다양한 기준에서 나눌 수 있지만, NGO들이 국제교류에 나설 때 가장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사람과 재정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NGO 교류협력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와 재정적 인프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북아 NGO 교류협력을 용이하게 해주는 법률, 규칙, 기구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 인프라가 있다.

동북아 NGO들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제개발 NGO와 국제 주창활동(advocacy) NGO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 마치 복지단체와 NGO들 사이의 교류가 없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이 두 영역사이의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조는 단순히 일시적인 욕구만 충족시켜 줄 뿐, 장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결국 그 나라 사회구성원들의 역량과 의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둘째, NGO의 국제교류와 협력활동이 아직도 대개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초국가적 NGO 활동을 위해서는 지방과의 연대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구호가 의미하듯, 모두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NGO들의 참여가 무척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교류협력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의 가이드로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NGO들의 축적된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국제교류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NGO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학계와의 연대활동 강화가 필연적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NGO가 갖고 있는 현장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한국만의 독특한 학문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NGO 역량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은 한 개별국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불안은 아시아의 불안정을 의미하며, 중국의 안정과 번영은 아시아의 안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과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중국의 NGO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인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대북지원 NGO들의 활동을 국제협력 분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통일관련 지원금과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모두 ODA에 포함시킬 경우, 이 자금을 활용하는 대북 관련 NGO들은 북한과 연계하여 동북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다른 개발 NGO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NGO들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제도적 지원이 오히려 NGO들의 자발성, 유연성, 창의성 등을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 제도적 지원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면 NGO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수행에만 전념하게 되어 회원의 관심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설령 NGO와 정부 간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엘리트와 관료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보고서명	연구자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책임자),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책임자),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이희욱 (한신대학교 교수), 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책임자), 김학성 (충남대학교 교수),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문수, 이우영 (이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현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 그리고 한반도질서에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여 2020년에 각각의 수준에서 예상되는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수준을 세계·동북아·한반도 차원과 문제영역을 안보·경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차원과 영역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외전략을 제시하였다.

I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중견국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에 있어서는 열세한 지위에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복합성과 불안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미래 전망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제정세 및 사회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차원에서 보면, 탈냉전 이후 갈등보다는 협력의 분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 혁명,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증가, 환경오염이나 자연재난의 확대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두는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중심의 ‘단극주의’의 향배와 새로운 지구적 경쟁자(global competitors)의 등장 가능성은 향후 세계정세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차원에서 여전히 갈등양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군비경쟁, 국경분쟁, 북한 핵문제 등 전통적인 안보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 역시 동북아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차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테러리즘을 포함한 전통적 안보위협, 환경, 초국경적 범죄, 노동력의 이동,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 부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에너지 확보경쟁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한반도 상황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내부 정치상황과 대외관계, 남북한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남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 등은 여전히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질서상 외관상으로 중견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북아질서 내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및 동북아 지역에 상존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인들은 갈등요인이 강하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및 동북아 지역 질서에서 각 수준에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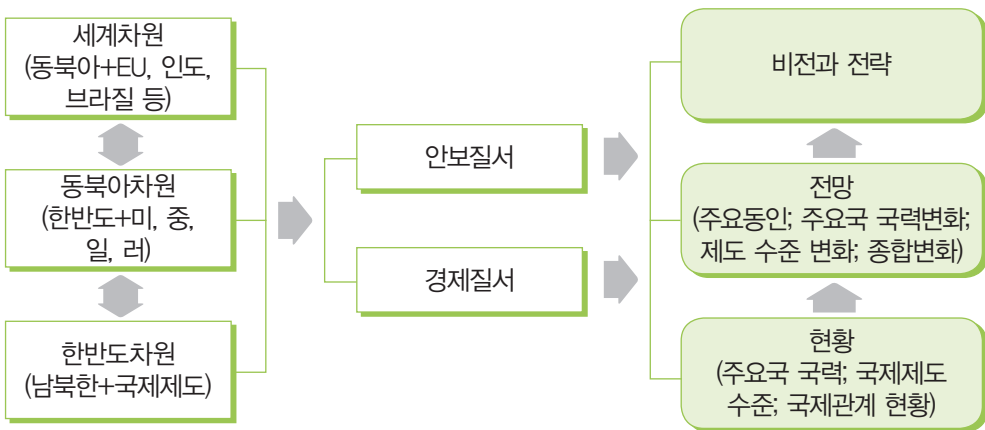
재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배제하고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질서에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국익을 보호하는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질서 구축을 위한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기반으로 세 차원 즉, 세계 및 동북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 질서에 존재하는 협력과 갈등요인의 변화를 2020년의 시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전망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각 차원에서 평화와 협력요인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구해야 할 국가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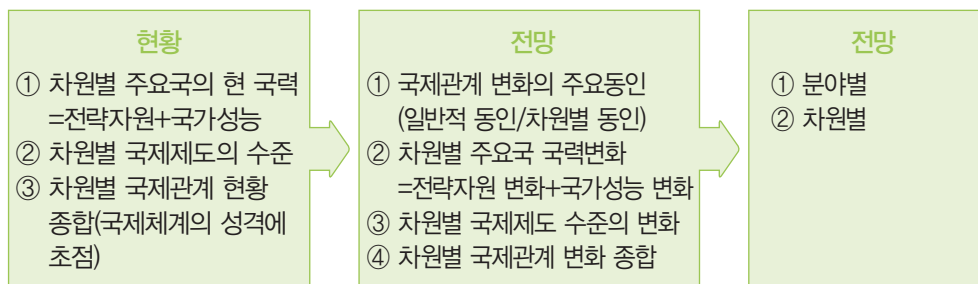
II | 주요내용

본 연구는 먼저 대체로 기존의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현황분석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의 장을 할애하여 이론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적 차원 간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주목하여 세계,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수준과 함께 문제영역을 안보와 경제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차원과 영역에 따라 여섯 개의 영역에서 현황과 전망, 그리고 2020년의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4]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방법론



[그림 5]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분석틀



[표 2] 국력지표 및 국제관계 변화의 주요동인

기준	구분	분석요소
국력지표	지표	구성요소
	전략자원	- 인구(연령별 분포, 인구증가율) - 영토(크기, 천연자원) - 인적 자원(교육수준, 직업별 인구분포) - 경제력(GDP, 산업별 GDP, 해외투자, ODA, 경제성장률) - 기술력(연 특허출원건수, 첨단산업분야 R&D투자액) - 군사능력(병력수, 장비수준)
	국가성능	- 외부의 제약·기회(경쟁 및 적대국의 숫자와 강도, 동맹국의 수, 에너지의 대외의존도) - 정치 인프라(각 국 정치제도의 특징 비교: 권력구조, 정책결정과정, 엘리트 총원방식, 주민의 정치참여 수준) - 사회·경제 인프라(시민의 만족도, 사회적 균열구조 및 정도, 교육수준의 국제적 비교, 해외자본의 투자유치)
국제제도의 수준 지표	차원	지표
	세계차원	- UN의 역할변화(안보관리능력 확대) - WTO의 협력 확대(자유무역의 확대) -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대(경제, 환경, 인권) - 비확산·반테러레짐의 확산 - 세계 동맹구조의 변화 - 국제기구·레짐에 대한 중국의 가입/영향력 확대 추이
	동북아차원	- 각국 참여 국제기구·레짐의 현황과 성격 - 지역기구·레짐 현황·성격과 변화·신설 (안보, 지역공동개발, 에너지 협력, 환경, 문화) - 동맹현황과 냉전종식이후 변화 현상 -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대응 방식(범주별 통계) - 역내 자유무역 협정 체결
	한반도차원	- 화해·협력→남북연합단계 이행 정도 - 세계·지역규범과 한반도규범의 동조화 여부

기준	구분	분석요소	
		공동 동인	차원별 동인
국제관계 변화의 주요동인	차원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빈부격차 감소 또는 확대) - 석유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확보 경쟁 - 환경위험의 확대와 규제 - 전염병의 확산 - WMD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 균형세력의 대두 - 민주화 확산 - (경제적) 세계화 확대 - 환경 및 자원관련 갈등 확대
	동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 - 초국경적 범죄 - 인구의 집중 및 노동력 이동 - 문명의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중일 관계(경쟁과 협조) - 역내 영토분쟁 - 급격한 경제성장과 상호의존 증대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 북미/북중 관계 - 남북관계 - 북한의 체제불안 가능성

위의 분석 근거를 토대로 2020년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쌍무 및 다자관계의 전망에 있어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였으며, 세계적,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차원 등 세 지역적 차원을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쌍무관계와 다자관계,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발전을 분석하였다. 지역적인 고려와 함께 문제영역 역시 안보와 경제영역으로 나뉘어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전략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세 지역적 차원 및 두 문제 영역, 즉 여섯 영역에서 이들의 간주관성이 고려된 국가전략이 모색되었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질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는 유지되겠지만 2020년의 시점에서 국제문제는 패권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이(Joseph N. Nye)가 지적하는 것처럼 군사안보, 경제, 초국가적 게임의 장 등에서 각각 다른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극적·초국가적 질서의 비중이 확산될 것이며, 만약 미국이 전통적 군사해결만을 고집하는 ‘군사안보 게임’에만 몰두할 경우 국제정세의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차원에서의 경제질서는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갈등, 지역주의의 심화와 확산, 그리고 자본주의의 표준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EU와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부상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빈부격차의 심화와 에너지 부족현상, 중국의 국내적 정치·경제적 불안정, 동북아 3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전에 따른 동아시아공동체 발전의 한계, 그리고 EU의 정치적 결집력 후퇴 가능성과 인구 노령화 문제 등이 향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

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 비전으로는 ‘매력적인 중견국가’, 경제 비전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주도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각각 제시하였다. ‘매력적인 중견국가’란 타국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국가 간 물질·인적 교류의 중심 및 상호 신뢰구축의 거점이 되며, 상호 협력 의제를 창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세계질서 주도연합(leading coalition)에 참여하고, ② 매력외교의 중견국가로서의 ‘외교태세(diplomatic posture)’를 정립하며, ③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전략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주도하는 선진 복지국가’ 지향은 ① G10에의 가입, ② 선진 복지국가의 달성, ③ 동아시아공동체의 주도 국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 등을 포함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EU와 ASEAN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에 대한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경제외교 다변화, ‘ASEAN+3’ 중심의 지역주의 발전에 대비한 경제외교 강화, 역내 FTA 확산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차원의 안보적 비전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매력적 중견국가’로의 성장, 그리고 경제영역에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중견국가로서의 국력을 확보하고, ② 대외관계를 재정비하며, ③ 동북아 평화·번영 질서에 대한 정책구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차원의 경제적 비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 틀의 구축, 한반도와 동북아의 화해에 대한 기여,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발언권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② 상시적 동북아협의체의 구축, ③ 역내 경제협력의 증진, ④ 공동번영의 기재 마련, 그리고 ⑤ FTA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 정비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I 목차

제1부 서론 및 이론적 분석들

박종철·김학성·김성진

- I. 서론
 - 1. 연구 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방법
- II. 이론적 분석들
 - 1. 분석기준으로서 이론의 활용
 - 2. 국제관계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 분석틀과 지표

제2부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이상현·박영준·백승주·김근식·박명림·이희옥·전병곤

- I. 2020 선진 한국의 세계 안보전략
 - 1. 현황
 - 2. 전망
 - 3. 2020 비전과 전략
- II. 2020 선진 한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 1. 현황
 - 2. 전망
 - 3. 2020 비전과 전략
- III. 2020 선진 한국의 한반도 안보전략
 - 1. 현황
 - 2. 전망
 - 3. 2020 비전과 전략

제3부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최태욱·김양희·임강택·양문수·이우영·정여천·방호경·박현정

- I. 2020 선진 한국의 세계 경제전략
 - 1. 현황
 - 2. 전망
 - 3. 2020 비전과 전략
- II. 2020 선진 한국의 동북아 경제전략
 - 1. 현황
 - 2. 전망
 - 3. 2020 비전과 전략
- III. 2020 선진 한국의 한반도 경제전략
 - 1. 현황
 - 2. 전망
 - 3. 2020 비전과 전략

제4부 결론

박종철·김성진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2020년 안보 및 경제 환경의 분석틀을 고려할 때, 한반도 차원에서의 안보전략은 ‘비핵평화국가’의 구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평화적인 북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구현, 그리고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의 건설·유지, 그리고 연성국력에 기초한 문화영토의 확대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적 북핵폐기 유도, 항국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외교적 연성국력의 확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한반도 차원에서의 경제전략의 비전 및 전략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변형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① 남북한 공동변영의 실현, ② 남북통일의 경제적 기반 마련, 그리고 ③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의 부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안보영역에서는 세계질서 주도연합

에 참여하는 '매력적 중견국가' 그리고 경제영역에서는 '동아시아를 주도하는 세계적 선진 복지국가' 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매력적 중견국가' 란 스스로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간의 물적·인적 교류의 중심이 되고,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의 거점이 되며, 상호 협력의 의제(agenda)를 창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성·경성국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질서 주도연합에의 참여와 경제적 선진과 정치적 안정 및 통합의 달성, 그리고 외교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일, 한중, 한러의 신뢰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비핵 평화체제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수시연구부문

- ▶ 수시분석보고서
- ▶ 동향분석보고서
- ▶ 기타 단행본

수시분석보고서

KINU 정책연구시리즈 | 통일정세분석보고서 | 국·영문논총 |
Studies Series | 학술회의 총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남북관계 주요 현안, 북한실태, 통일관련 대주변국관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단기차원의 정책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07-01 | 북핵 '2·13 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핵 폐기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핵폐기 과정에서 일체의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핵개발 참여자들의 전폭적인 협력 속에서 신속하게 폐기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호 협력적으로 핵위협을 제거한다”(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는 개념과 그 실천적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CTR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교훈을 북핵 폐기 과정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13 합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북핵 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했다. 둘째, 미국에서 1991년 11월 27일 발의된 「소련의 핵위협 제거 법안」을 토대로 진행되어 온 CTR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과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분석했다. 셋째, 9·11 사태가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 유지에 준 영향과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G8 Global Partnership Program)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를 현재의 북한 상황과 비교해서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제공한 안전보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리비아의 경우에는 신속한 핵 폐기 절차와 리비아의 사례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안전보장과 핵우산과의 관계를 밝

히고, 핵 폐기의 대가로 제공되는 대북 안전보장이 미국의 대남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조성된 위기의 전략적 함의를 억지전략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 I. 서론
- II. ‘2·13 합의’의 이행과 향후 전망
 1. ‘2·13 합의’의 배경
 2. 향후 북핵문제 전개방향 전망
- III. CTR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1. 법적 근거
 2. CTR 프로그램의 이행과 성과
- IV. 9·11 사태와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1. 9·11 사태의 영향
 2. G8 지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V.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
 1. 우크라이나
 2. 리비아
- VI. 대북 안전보장과 대남 핵우산
 1. 적극적 안전보장
 2. 소극적 안전보장
 3. 미국의 대남 핵우산
- VII. 결론
 1. 북핵위기의 전략적 함의
 2. 바람직한 북핵폐기 절차

2007-02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김위원장의 순차적 답방으로 귀결되었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의 표명 및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정치적 신뢰의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및 북핵위기의 고조 등 한반도 문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은 상당부분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북핵문제라는 당면과제와 남북관계를 한 단계 고양시켜야 하는 실질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6자회담과 남남갈등 등 대내외적 변화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이라고 규정한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시대의 본격화’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I. 머리말
- II.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III.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경
 1. 북핵문제 현안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3. 한·미공조의 필요성
 4. 동북아 다자대화구도의 출현
 5. 국민적 합의 및 국내정치적 중요성 부각
- IV. 2차 남북정상회담 목표와 추진방향
 1. 목표
 2. 추진방향
- V. 2차 남북정상회담 예상의제
 1. ‘한반도 평화’의 증진

2. '공동번영' : 남북경협 확대와 대북개발지원 검토
 3. 인도적 문제의 해결
 4. 남북교류의 확대와 제도화
 5. 정상회담의 정례화
- VI.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남북관계
 2. 대내적 차원
 3. 국제적 차원
 4. 북한 차원
- VII. 맺음말

2007-03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금순(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진욱(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서은성(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고향을 등진 실향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산이 양산되어 왔다.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귀환 국군포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전 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우리 주민들을 납치하여 억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냉전과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생사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요망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납치와 억류라는 비인도적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정확한 실상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전쟁 시기 및 이후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합의,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 서론
- II. 국군포로·납북자 실태
 - 1. 국군포로 실태
 - 2.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실태
- III. 국군포로·납북자 해결 추진 현황
 - 1. 정부의 기본입장
 - 2. 북한의 태도
 - 3. 남북회담을 통한 근원적 해결 추진
- IV.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전문가 설문 조사
 - 1. 설문개요
 - 2. 설문조사 결과
- V. 해결방안
 - 1. 기본원칙
 - 2. 세부방안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논문은 2001~2006년 사이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불협화를 분석하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면 공동의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 연구의 주요 논지는 제2장과 제3장에 서술되어 있다. 제2장은 2001~2006년 사이 불협화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방식을 검토하고 두 나라 사이에 세 가지 쟁점분야를 구분하고 분석한다. 세 가지 쟁점분야란 대북정책, 한미 군사동맹, 동북아에서 두 나라의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이다. 제3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문서들에서 표현했던 대북정책과 관련한 공동의 인식을 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비핵화 과정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의심이 감소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하게 되는 과제의 내용이 언급될 것이며,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 I. 서론
- II. 2001~2006년간 한미의 불협화
 1. 2002~2004년간 반미감정 고조
 2. 대북정책
 3. 한미 군사동맹 재조정
 4. 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 III. 한미 공동전략의 탐색
 1. 새로운 시작의 표식들
 2. 미국이 직면하는 과제
 3. 한국이 직면하는 과제
- IV. 요약 및 정책 제안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동북아연구실장)

김국신(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배정호(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춘흠(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 및 이에 대한 10월 14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채택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2·13 합의’를 통해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양자 및 다자 간 협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화해·통일이라는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협의한 결과 8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문제의 협상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7년 ‘2·13 북핵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I. 서론

II. 주변국의 동북아 및 대북정책 목표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III. ‘2·13 합의’ 이후 주변국의 분야별 대북정책

1. 핵문제

2. 정치 분야
 3. 안보·군사 분야
 4. 경제 분야
- IV. 주변국의 대북정책 전망
1. 핵폐기 협상의 장기화
 2.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3. '4자 한반도 포럼'의 평화체제 논의
 4. 중·러의 대북 경제관계 증진
- V. 정책적 고려사항

2007-06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가입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중요하다. 실제로 향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등 주요 주주국가들(shareholders)의 요청에 의해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동시에 개혁·개방정책의 정착 및 심화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조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정책과제를 논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들,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지원 수단, 그리고 정식 회원가입 이전에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기 위한 북한과 남한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실체와 개입 시나리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초기 북한 개발지원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다루었다.

- I. 서론
- II. 국제금융기구의 범주와 주요 역할
 - 1. 국제금융기구의 범주
 - 2.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역할
 -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 III.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 1. 국제정치적 조건
 - 2. 정책 및 제도적 조건
 - 3. 법적 가입 절차
- IV.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시나리오: 지원 순서, 수단 및 규모 예측
 - 1. 개입 시나리오
 - 2. 금융지원의 대상과 절차
 - 3. 금융지원 원칙과 규모: 북한 적용
- V. 주요 쟁점 및 과제
 - 1. 주요 쟁점과 시사점
 - 2. 향후 과제
- VI. 결론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평화협정 체결의 3대과제가 연계를 갖고 추진될 때 비로소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비핵화 프로세스, 군비통제, 평화체제의 법적 관점, 협정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세부 방안,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였으나, 평화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사례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사례에 대한 분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구 역사에서 평화조약의 변천과정을 분

석한다. 평화조약의 사례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베트남 평화협정,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다루었다. 각 평화협정은 차별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전쟁의 예로 포함시켰다. 평화조약에 대한 변천과정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 서론

II.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정의의 전쟁, 불의의 전쟁
2. 용서를 통한 평화: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3. 응징을 통한 평화: 나폴레옹전쟁 이후
4.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현실정치

III. 평화조약의 사례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평화조약 없는 러·일관계 정상화
2. 베트남 평화협정: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전쟁의 평화조약
3. 보스니아 내전과 데이튼 평화협정: 내전과 현실정치
4. 종전선언 이후 끝나지 않는 이라크전쟁: 정권교체

IV.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1. 평화조약 체결시 일반적 논쟁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특수성

V. 결론

2007-08 |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의 초점은 북핵 폐기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두 가지 딜레마, 즉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와 북한체제 공고화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병행해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물론 '위협중심 접근' 과 '신속성과 완전성 추구' 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에 토대를 두고 입안·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의 기본구도를 핵폐기 과정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는데, 북핵 폐기 4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불능화·신고 단계, ② 핵폐기 협상 단계, ③ 핵폐기 실시 단계, ④ 핵폐기 완료 이후. 불능화·신고가 끝나면 바로 핵폐기가 실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핵폐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협상보다도 힘든 협상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의 각 단계별로 북한이 해야 할 의무사항, 이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I. 북핵 폐기의 딜레마

1. 대북 안전보장의 딜레마
2. 북한체제 공고화의 딜레마

II. 기본원칙

1. 위협중심 접근
2. 신속성과 완전성 추구

III. 전략적 추진방향

1. 핵폐기 4단계
2. 예상쟁점과 대응방향

IV.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전략

1. 당근과 채찍의 병행
2.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통일정세분석보고서

주요 현안이슈관련 정책 수립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북한, 남북관계, 주변국관계 주요 현황 등 단기 현안 위주의 정세분석보고서

2007-01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I. 전반적 특징

II. 내용분석

1. 2006년에 대한 평가: '강성대국의 려명'
2. 2007년 과제와 추진방식: '핵 억제력 보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

III. 분야별 정책전망: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

1. 정치: 선군정치를 통한 김정일 '절대화' 지속
2. 경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자력갱생
3. 사회·문화: 사회통제와 사상교양 강력 추진
4. 군사: '평화수호' 명분의 대남군사태세 강화
5. 대남: 협력과 통전의 이중전략
6. 대외: '핵보유국' 기반 위에서 실리외교 추진

〈부록〉 2007년 신년 공동사설

2007-02 | 2·13 북핵 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 I. 머리말
- II. 「2·13 합의」 이행: 북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북·미간 줄다리기
- III. 북한정세
 - 1. 김정일체제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 전개
 - 2. 국방우선 정책으로부터 경제우선 정책으로의 전환
 - 3. 대남 경협외 적극화
 - 4. 대외관계
- IV. 남북관계
 - 1. 당국대화 재개 및 정상회담 가능성
 - 2. 다양한 남북경협외 활성화
 - 3. 사회문화교류 확대
 - 4.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인권개선 노력

2007-03 |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 I. 문제제기
- II. 구성 및 부문별 북한인권실태
 - 1. 구성 및 활용자료
 - 2. 부문별 북한인권실태 평가
- III. 주요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 I. 문제제기
- II. 체제유지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국제적 보장 확보
 1. 김정일 우상화
 2. 군부의 충성 강화
 3. 외부위협 의식 고취
 4. 대미 유화를 통한 관계 개선
 5.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보장 확보
 6. 대중관계 회복
 7.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일관계 개선
- III. 통치의 효율성 강화와 경제건설
 1. 경제강국 건설 강조
 2.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강화
 3.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노력 강조
 4. 남북경협 중시
 5. 대외경제활동의 촉진
- IV. ‘2·13 합의’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와 사회통합
 1. 핵 보유 선전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
 2. ‘2·13 합의’의 선별 보도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3. 경제강국 건설에의 주민 관심 전환
 4.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 V. 남북관계 복원과 민족공조 요구
 1.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2. 민족공조 주장 강화
 3. 남한정국에의 영향 시도
 4. 선군정치 지지 유도
 5. 민간교류의 활성화

2007-05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 I. 문제제기
- II. 북핵정책의 전술적 변화
 - 1. 정책 변화의 배경
 - 2. 정책 변화의 성격
 - 3. 정책 변화의 목표
- III. 주요 현안별 입장 분석
 -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2. 비핵화와 북·미 수교의 상관관계
 - 3.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 4. CVID, PSI 및 유엔안보리 제재
 - 5. 대북 강경책 회기 가능성
- IV. '2·13 합의' 이행 전망
- V. 북핵문제 예상 시나리오
 - 1. 북한의 핵보유 상태 지속
 - 2. 先 북·미관계 진전, 後 핵폐기 모색
 - 3. 무력사용 및 강압적 핵폐기
 - 4. 신속하고 평화적인 핵폐기

2007-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 I. 문제제기
- II. 주요내용
 - 1. 내각의 2006년 사업 정형과 2007년 과업
 - 2. 2006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7년 국가예산
- III. 예산·결산 분석
 - 1. 2006년 결산
 - 2. 2007년 예산

IV. 특징

1. 부문별 구체적 경제건설 과업 제시
2. 과학기술부문 투자 대폭 확대
3. 국방력의 지속적 강화 강조
4. 신임 총리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V. 종합평가

2007-07 |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I. 문제제기

II. 7·1조치 및 추가 개혁조치의 내용

1. 전반적인 가격 인상
2. 경제운용의 자율성 확대
3. 실적에 따른 분배
4. 재정의 건전성 확립

III.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1. 물가수준
2. 재정·금융
3. 대외무역
4. 산업생산

IV. 종합평가 및 향후과제

1. 종합평가
2. 향후과제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I. 서론
- II. 일반 정세
 - 1. 정치부문
 - 2. 대외부문
 - 3. 경제부문
 - 4. 대남부문
 - 5. 사회부문
- III. 군사동향
- IV. 종합평가 및 전망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 분석

김국신, 여인곤

- I. 문제제기
- II.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 1. 9·19 공동성명 주요내용과 쟁점
 - 2. 2·13 합의 주요내용과 쟁점
- III. 2·13합의 이행 실태
 - 1. BDA 문제 해결 이전
 - 2. BDA 문제 해결 이후
- IV.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
 - 1. 북·미 양자회담
 - 2. 6자 수석대표회담 개요
 - 3. '언론발표문' 발표
 - 4. 평가
- V. 핵협상 추진방향과 예상쟁점
 - 1. 핵협상 추진방향
 - 2. 협상의제 및 쟁점

Ⅵ. 정책적 고려사항

- 〈부록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부록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부록 3〉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

2007-10 |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 I. 문제제기
- II. 아베정권의 국정운영 특징
 - 1. 친정체제의 구축
 - 2.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 III. 7·29 참의원 선거 결과
 - 1. 참의원 선거방식 및 정치적 의미
 - 2. 여·야의 참의원 선거 대응과 선거 결과
 - 3. 자민당의 패배 요인
- IV. 향후 일본정치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 1. 일본정치 정세 전망
 - 2.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과 전략적 고려사항

2007-11 |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 I. 문제제기
- II. 개요
- III. 내용
- IV. 배경
- V. 분석 및 전망
 - 1. 분석
 - 2. 전망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 I. 문제제기
- II.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 1. 7·29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와 아베총리의 국정운영 리더십 약화
 - 2. 자민당내 파벌의 반아소 포위망 구축과 후쿠다 대세론 등장
 - 3. 자민당 파벌의 후쿠다 야스오의 지지
 - 4. 총리 선거와 중의원 결정 우선주의
- III. 후쿠다 정권의 특징
 - 1. 거당체제
 - 2. 계파안배 및 소폭개각
 - 3. 총선 대비 잠정·관리내각
- IV. 후쿠다 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 1. 대외전략노선: 미·일동맹 강화와 아시아외교의 조화
 - 2. 대북전략: '대화와 압력'의 기조아래 대화 중시
- V.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1.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 2. 한·일 전략적 대화 및 협력의 강화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 I. 문제제기
- II. 러시아 총선 과정
 - 1. 총선이전 상황
 - 2. 선거전 양상
- III. 러시아 총선 결과와 평가
 - 1. 총선 결과
 - 2. 총선 평가

- IV. 러시아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
 - 1. 대내정책에 미칠 영향
 - 2.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 V. 정책적 고려사항

2007-14 |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I. 서론
- II. 정치·외교부문
 - 1. 대내정치
 - 2. 대외정세
 - 3. 대남정세
- III. 경제부문
 - 1. 경제건설의 방향
 - 2. 대내경제
 - 3. 대외경제
- IV. 사회문화부문
 - 1. 주민들의 생활상
 - 2. 체제결집 활동
 - 3. 체제단속 및 통제
 - 4. 현대화 교육 강화
- V. 전망

통일정책연구(국문논총)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영문논총)

북한실태, 한반도의 주변정세, 통일정책에 관한 국내외 북한·통일문제 전문가·학자들의 정책지향적 연구논문을 수록하는 연 2회 발간 전문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국문논총, 등재후보 학술지: 영문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기획논문

-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서의 2·13합의: 형성배경과 이행전망
- 서재진(통일연구원)
- 2·13 북·미합의의 의의와 과제
- 정향석(전북대학교)
- 경제개혁과 이행조건 그리고 공공 거버넌스: 북한 적용 가능성, 합의 및 과제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최창용(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연구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 조 민(통일연구원)

일반논문

-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 2차 핵위기를 사례로
- 김근식(경남대학교)·서보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의 정책선택 패턴: 생존성과의 상관관계
- 이종현(UPI통신 서울지국,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 연구: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접근
- 박정란(서울대 통일연구소)
- 차등분배현실을 고려한 북한 일반주민의 실질 식량수급량 추정
- 홍성국(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남북한의 재산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 김성욱(고려대 법학연구원)
-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공동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 김영봉(한양대 박사과정)·김홍배(한양대학교)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개성공단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 미국 이스라엘 QIZ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양용석(국회 유승희의원실,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 구 동독에 있어서 체제전환과 세계화의 지역적 영향
 - 이상준(국토연구원)
- 중국 개혁·개방초기 내부 자본축적기반 구축 연구
 - 이창렬(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기획논문

- ‘2007 남북정상선언’ : 정치·군사분야 평가와 향후과제
 - 김경수(명지대학교)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의 구상
 - : 동북아 역내 이해구조를 중심으로
 - 장의관(통일부 통일교육원)

일반논문

-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중립화통일론의 적용가능성
 - 박정원(한국교원대학교)
-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 이상현(동국대학교)·이대성(가야대학교)
- 국제인권조약 자동승계에 관한 연구: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 이규창(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 안혜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금순(통일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 엄태완(경남대학교)
- 북한과 중국 '시장(Market)' 의 비교: 형성발전과정과 그 특징
- 박희진(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경수로사업의 비용과 파생효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
- 문종열(국회예산정책처)
- 남북스포츠 협상의 평가와 전망
- 박상현(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 조정아(통일연구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 Six-Party Talks: "Action for Action" and the Formalization of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Scott Snyder(Asia Foundation/Pacific Forum CSIS)
-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 A Chinese View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Yufan Hao(University of Macau)
- What's New? Comparing the February 13 Action Plan with the Agreed Framework
- Narushige Michishita(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North Korea's Nuclear Issue: Beyond the February 13 Agreement
- Tae-Hwan Kwak(Eastern Kentucky University)
- A Prospect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beyond the BDA Issue
- Kang Choi & Joon-Sung Park(MOFAT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Capacity, Behavior, and Now Opportunity
- Jeffrey Robertson(Parliament of Australia)
- Paradigms and Fallacies
: Rethinking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Hun-Joo Park(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 Transformation of National Strategy in Postwar Vietnam
: Dependency to Engagement
– Sung-Chull Kim(Hiroshima Peace Institut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 Engaging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 Stephen Blank(US Army War College)
- Industrial Policy for North Korea: Lessons from Transition
– Paul Hare(Heriot-Watt University)
- The Peace Regime and Reunification
: Antagonism or “Conditio Sine Qua Non”? A Functionalist Approach
– Kolja Naumann(University of Cologne)
-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An Anti-Unification Policy or Just Too Many Uncertainties to Account For?
– Peter M. Lewis(University of Chile)
- A Vision of Asia
– Victor D. Cha(Georgetown University)
- Southwest Asia and Korean Unification
– Robert Dujarric(Temple University Japan)

Studies Series

연구결과의 해외활용도의 극대화과 해외홍보를 위하여 발간하는 연구총서의 영역보고서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I. Introduction
- II. Definition of the Main Concepts and Analyzing Measure
 - 1. North Korean New Generation
 - 2. Analysis Frame
- III. The New Generation's View on Life After the Food Shortages
 - 1. Self-cognition
 - 2. The Goal of Life
 - 3. Views on Occupations
- IV. The New Generation's View on Family After the Food Shortages
 - 1. Views on Marriage
 - 2. Views on Parents
 - 3. Views on Married Couples
- V. The New Generation's View on Women After the Food Shortages
- VI. Main Causes of the Changes in the Values of the New Generation
 - 1. Economic Woes and the Food Shortages
 - 2. The Invasion of Foreign Ideas and Culture Through the Partial Opening
- VII. Conclusion: Prospects

- I. Introduction
- II. North Korea's Leadership Structure and the Party, Regime, Citizens, and the People's Army
 - 1. The Nature and Principles of Leadership
 - 2. The Party, Regime (Military), and Civilians (Masses) in the Leadership Structure
 - 3. The Military in North Korea's Leadership Structure
- III. The State of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under the Kim Jong-Il Regime
 - 1. Expanding the Military's Roles and Functions: Military-first Politics
 - 2. Efforts to Strengthen the Civil-Military-Party Unity
- IV. Evaluating the Stability of Kim Jong-Il's Regime based on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 1. The Party's Chance of Losing Control over the Military
 - 2. The Kim Jong-Il Regime in light of Civil-Military Relations: The Increasing Possibility of Collapse amid Stability
- V. Conclusion

2007-03 |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 Huh, Moon-Young / Kim, Philo / Bae, Chin-Soo

- I. Introduction
 - 1. Raising Questions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 2. Methodology and Framework of Analysis
- II. The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s Crisis Level by Indicators
 - 1. Evaluation in terms of Ideology
 - 2. Evaluation of the Elite
 - 3. The Assessment in Terms of the Economic Sphere
 - 4. Assessment of Government Control
 - 5. The Assessment on Foreign Relation Area
- III. Assessment and Prospects for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 1. General Assessment

2007-04 |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I. Introduction
- II. General Considerations on Socialistic Economic Reform
 - 1. Socialistic Economic Reform
 - 2. The Side Effects of Economic Reform
- III. Case Studies
 - 1. Economic Reform in China
 - 2. Economic Reform in Vietnam
- IV. Economic Reform and Its Side Effects in North Korea: Reality and Evaluation
 - 1. Main Point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2. Side Effect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3. Evaluation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 V. Tasks for Successful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the Economic Reform
 - 1. Premises for Successful Economic Reform

- 2.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for North Korea
- 3. Specific Tasks
- VI. Conclusion
 - 1. The Role of South Korea
 - 2. Final Comments

2007-05 |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I. Introduction
- II. Reform Measures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 1. Overview of the Agricultural Reform Measures
 - 2. Production: Improving the Inefficiencies of Cooperative Farming
 - 3. Allocation: Strengthening Farming Incentives
 - 4. Price·Circulati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Prices, Introduction of Integrated Market
- III. Changes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Reform Measures
 - 1. Changes in the Production Sector
 - 2. Changes in Distribution Methods
 - 3. Changes in Prices and Retailing
- IV. The Goals and Challenge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
 - 1. Goal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
 - 2. Challenges to Agricultural Reforms
- V. Conclusion

2007-06 |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I. Introduction
- II. Changes in People's Lives in the Domain of Production

1. Economic Difficulties and Alternatives of 'Self-Reliance' as they Appear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2. Loss of Jobs and Alternative Ways of Living
- III. People's Lives in the Domain of Reproduction
 1. Revitalization of the Market and Expansion of Consumption Activities
 2. The Rupture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 IV. People's Lives and Social Relationships
 1.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2. The Relaxation and Restoration of Social Controls
 3. Succession of Generation and Innovation
- V. Conclusion

학술회의 총서

북한 및 통일관련 주요이슈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워크숍 발표 및 토론요지를 수록한 결과보고서

2007-01 |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1회의

북한의 생존전략과 2·13 합의의 의미

– 서재진(통일연구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미관계

– 유호열(고려대학교)

제2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 프로세스

– 조 민(통일연구원)

‘2·13 합의’에 따른 대북(에너지·경제지원)협력 추진전략

– 최수영(통일연구원)

2007-02 |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The June 15 Summit and Building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향후 과제

– 손기웅(통일연구원)

-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 허문영(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주변국의 구상과 이행

-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 스콧 스나이더(아시아재단)
-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 푸멍즈(현대국제관계연구원)
- 일본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 하지메 이즈미(시즈오카 현립대학교)
-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 바실리 미헤예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2007-03 |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제1회의

-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 김근식(경남대학교)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주변정세
-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제2회의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 정영태(통일연구원)
-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과제와 전망
- 고유환(동국대학교)

제3회의

-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개혁·개방: 과제와 전망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 남북정상회담과 경제공동체 건설: 과제와 전망
- 김영윤(통일연구원)

동향분석보고서

월간 북한동향 | KINU Insight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2호(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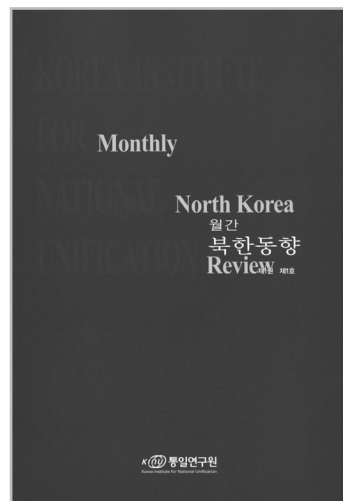
월별로 북한의 대내정세, 대외정세, 대남정책 동향을 정리

제1권 제1호 : 9월, 10월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책

제1권 제2호 : 11월, 12월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책



KINU insight

계간으로 발행되는 KINU Insight는 북한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최근 이슈들을 심층분석

07-01

- Denuclea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Cho, Min
-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e North Korean Reaction Kim, Soo-Am
- Policy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Escapees: Protection and Resettlement Assistance Lee, Keum-Soon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07-02

-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Cho, Han-Bum
- North Korean Econom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 Closer Look
Kim, Kyu-Ryoon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Lim, Kang-Taeg
- An Evaluation of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Chon, Hyon-Joon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07-03

- The 2007 Summit Declaration and Peace Regime
Jeung, Young-Tai
- How Serious Would North Korea Be About Implementing the 2007 Summit Declaration?
Park, Hyeong-Jung
- Economic Importance and Implications of the 2007 Summit Declaration
Kim, Young-Yoon
-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2호(2007)

국제사회의 동향, 북한의 대응,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대북인권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분석 및 평가를 수록

I. 국제사회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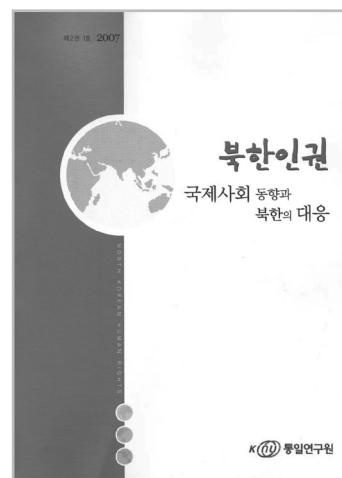
1. 개별국가
2. 유엔
3. NGO
4. 분석 및 평가

II.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2. 일본에 대한 반응
3. 유엔에 대한 반응
4. 분석 및 평가

III. 인도주의의 사안

1. 탈북자
2. 납북자·국군포로
3. 이산가족
4. 분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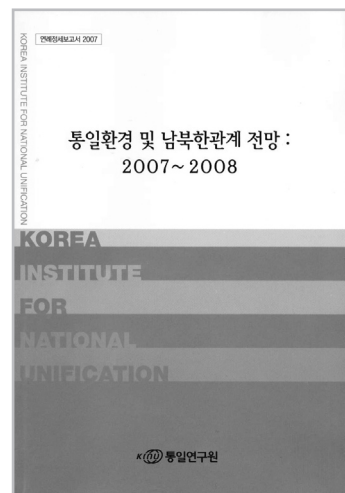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2007년의 동북아정세, 북한정세, 남북한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의 정세를 전망

- I. 동북아 정세
 - 1. 동북아 안보정세
 - 2. 북핵문제
 -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2. 주요 대외관계
 - 3. 대남동향
- III. 남북한 관계
 - 1. 남북대화
 - 2. 남북교류협력
 - 3. 인도주의 사안



기타 단행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 2006 독일통일백서
동·서독의 정치통합 | 북한이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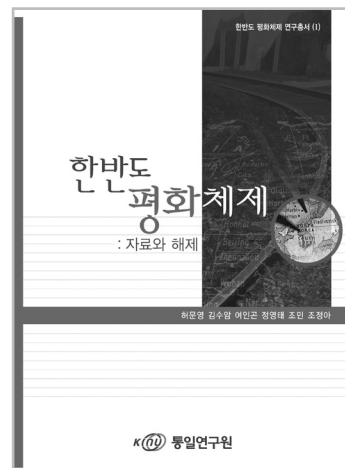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김수암·여인곤·정영태·조민·조정아 (이상 통일연구원)

이 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한과 주변국의 노력과 참고가 될 만한 국제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이를 한 권의 책에 담아보았다.

- I. 평화체제 관련 조약 및 합의문
- II. 평화체제 관련 논의
 - 1. 남한
 - 2. 북한
- III. 국제평화조약 사례
- IV. 기타



2006 독일통일백서 (번역서)

독일통일 16주년을 맞아 구동독재건의 성과와 핵심정책노선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리고, 향후 도전과제 및 전망을 분석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번역서

제1부 신연방주 개발 및 과제

- I. 신연방주의 발전 동향
- II. 발전 및 개발정책의 전개
- III. 내적 통일

4. 에너지와 환경

5. 예술과 문화

6. 스포츠

IV. 국제협력 및 유럽협력

1. 국제협력

2. 동독 재건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제2부 동독 재건의 프로그램과 정책분야

- I. 경제력과 고용 증대
 1. 경제력과 고용강화
 2. 고용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정책수단
 3. 산업 입지 요건으로서의 인프라
- II. 기술과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
 1. 산학 네트워크화를 통한 혁신력 강화
 2. 교육·연구 입지로서의 동독
 3. 교육과 직업교육 장려
- III. 지역 및 사회 결속력 지원
 1. 농촌개발
 2. 도시개발
 3. 사회보장

제3부 경제통계

- I. 지역통계
- II. 국민소득
- III. 경제지표
- IV. 노동시장
- V. 지원
- VI. 회사설립
- VII. 연구개발(F&D)
- VIII. 투자

동·서독의 정치통합 (번역서)

김영윤 편저

Prof. Dr. Alexander Thumfart 저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 번역

이 책은 독일 에어푸르트(Erfurt) 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알렉산더 툼파르트(Alexander Thumfart) 교수의 『동·서독의 정치통합』(*Die politische Intergration Ostdeutschlands*)를 번역한 것이다. 본 번역서는 1989년 대전환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지형의 파노라마를 알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책으로 독일통일에 따라 이루어진 동독의 정치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제1부 통합이론

- I. 규범적 통합과 체제전환
 1. 체제전환 연구의 범위
 2. 학제 간 연구, 해석학적 문제와 해석상의 패러다임: 방법론적, 내용적 그리고 규범적 요소로서의 통합
- II. 규범적 통합의 기본요소
- III. 자료검색체계
 1. 멤버십
 2. 갈등조절
 3. 여론
 4. 연대감
 5. 가치연계

제2부 정치통합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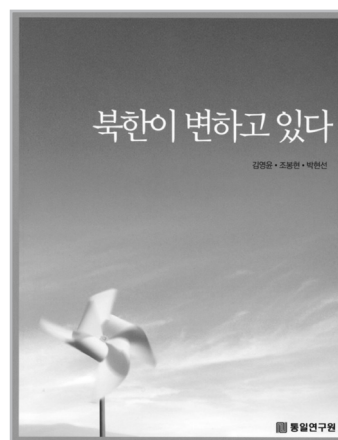
- I. 연구의 구성: 정치 제도의 제반 분야
- II.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의회주의와 주의회
 1. 이론적 접근
 2. 주의회의제도화
 3. 정치이론적 전망: 연구 방향과 요망사항
- III. 정당과 정당체제
 1. 이론적 접근
 2. 새로운 독일의 통합된 정치체계
 3. 정당이론적 차원의 전망

북한이 변하고 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 박현선 (고려대학교)

이 책은 최근의 북한, 특히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장에서는 7·1조치 이후 급속도로 달라진 북한의 정치·사회에서 2·13 합의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북한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이어 제2장에서는 북한을 뒤흔드는 경제개혁의 물결, 변화하는 북한경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끝으로 제3장은 북한의 사회문화 전반에 부는 변화의 바람과 남북협력의 의미를 파헤쳐본다.

- 프롤로그: 북한은 변화하는 유기체
- 제1장: 조금은 더디지만 북한이 변하고 있다
- 제2장: 북한은 지금 경제개혁 중
- 제3장: 북한변화에 중심에 남북협력이 있다
- 에필로그: '지켜만 보는' 방관이 아닌 '함께하는' 변화로



2007년도 연구관련사업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국제워크숍

국내워크숍

KINU Round Table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

해외전문가 방문간담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3

국내학술회의

일시	행사명	주제
2.27	동북아시아대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4.6	개원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5.14 -18	남북경협토론회	경공업 합의서 이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남북 경협의 새로운 도약
7.3	통일문제연구협의회·동북아시아대위원회 공동학술회의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기반 확충 및 각급단체 협력방안: 정당, 지방자치단체, NGO
9.14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내학술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10.9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 학술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10.15 -17	통일문제연구협의회·철원군 공동학술회의	금강산선 복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11.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화천군-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DMZ의 평화·생태적 이용 : 평화의담-금강산담간 남북교류협력
11.30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을 위한 제주도의 역할
12.8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의 변화
12.21	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학술회의	사회주의 개혁 리더십과 대북정책

국제학술회의

일시	행사명	주제
6.7	6·15정상회담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6.14 -17	통일문제연구협의회·한스자이델재단· 강원도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8.21	기본과제관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한 관계
11.6 -11	통일문제연구협의회·베트남 사회과학 연구원(VASS) 공동학술회의	베트남 체제전환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베트남 통일 이후 통합과정 : 평가와 시사점

국제워크숍

행사명	일시	주요내용
한·중 워크숍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미국·일본·러시아의 대북한정책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전망
제1차 한·중·일 서틀워크숍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발전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미치는 영향 •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에 남북한관계
제2차 한·중·일 서틀워크숍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한 관계 •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러 워크숍	6.2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 입장 •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상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러협력 • 러시아의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W/G의 의장국으로서의 입장 및 러시아내 고려인 실태를 파악
한·독 워크숍	7.2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CE/OSCE가 유럽평화 및 구소련과 헝가리의 개혁·개방 정책에 미친 영향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CSCE/OSCE 과정이 주는 시사점
한·일 워크숍	7.2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기타 상호 의견 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
한·중 워크숍	8.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 • 한반도 정세분석과 한·중 협력관계
한·미 워크숍	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EU 워크숍	9.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 공동워크숍
제3차 한·중·일 서틀워크숍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협력

국내워크숍

일시	주제	참석자
1.24	2007년도 사업방향 및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 사전」 세부추진방안 논의	손기웅, 손홍재(평화문제연구소),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정(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외 10명
3.4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 예비 사업」 사전발간 논의	손기웅, 이상준(국토연구원), 강인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김희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 10명
3.7	협동연구 사업계획 발표 및 워크숍 개최	임성학(서울시립대학교), 민병원(서울산업대학교),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 외 10명
3.2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원장,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허문영, 박영호, 김규륜, 여인곤, 조한범 외 10명
3.2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고려사항	허문영, 전경만(한국국방연구원), 손기웅, 최진욱, 조한범, 김규륜 외 5명
4.18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북한 인권문제	이승룡(좋은벗들), 박정은(참여연대), 이재원(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외 7명
5.9	한반도 평화변역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임성학(서울시립대학교), 민병원(서울산업대학교), 전재성(서울대학교) 외 15명
5.14 -18	경공업 합의를 이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남북 경험의 새로운 도약	원장, 김규륜, 김영윤, 이교덕, 송정호, 김용만, 남상태(이상 대우조선해양) 외 20명
5.17	한미 정상회담	허문영, 김동현(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손기웅, 김수암
6.1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서재진, 박태균(서울대학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외 10명
6.20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조민, 전병곤, 유재의, 정재은,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평균(고려대 평화연구소) 외 10명

일시	주제	참석자
6.20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전천실(세계일보), 이재훈(한겨레신문), 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 이옥철(납북자가족협의회)
6.21	개별·합동사업 발전방안	한재현(통일부), 김진숙(보건복지부),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0명
6.27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서재진, 김용현(동국대학교),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외 10명
6.2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방향	이상철(국방부), 허문영, 서재진, 최춘흠, 손기웅, 정영태, 전성훈, 김동엽(국방부)
7.1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원장, 이관세(통일부), 허문영, 손기웅, 전성훈, 김규륜, 김영윤 외 15명
7.16	합동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장성계(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최혜경(남북어린이어깨동무) 외 10명
8.6-9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 사전」 편찬 관련 논의	손기웅, 이상준(국토연구원), 김희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동욱(한국교통연구원),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외 15명
9.10	제2차 남북정상회담	원장, 각 실·소장, 연구위원 등 10여명, 윤석제(CBS), 안홍욱(경향신문) 외 기자단 20여명
9.18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Lynn Lee(InterMedia), 장성계(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이정호(남북경협운동본부), 최혜경(남북어린이어깨동무) 외 20명
9.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한미협력방안	최강(외교안보연구원), 김학성(충남대학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제성호(중앙대학교) 외 15명
11.16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 NGO의 역할	이일하(굿네이버스), 이기범(남북어린이어깨동무) 외 5명
11.23-25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을 위한 통일문제 연구협의회의 역할	원장, 오상봉(산업연구원장), 정희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김흥중(새천년 생명운동 이사장), 미란다 슈로이(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손기웅 외 15명

KINU Round Table

구분	일시	초 청 자	주 제
제1차	2.16	이재정 장관(통일부)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
제2차	2.28	정영근 부회장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대북경협 현황과 전망
제3차	3.6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2·13합의의 의미와 이행과제
제4차	3.21	문정인 교수(연세대학교)	부시행정부의 정책전환과 6자회담 전망
제5차	3.27	임동원 이사장(세종재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제6차	5.25	법륜스님(좋은벗들)	최근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
제7차	7.19	박한식 교수(조지아대학교), 김한교 교수(신시내티대학교), 박경애 교수(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 : 연속성과 단절
제8차	10.12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평가와 과제
제9차	10.15	고경빈 정책홍보본부장(통일부)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준비과제
제10차	12.3	이관세 차관(통일부)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

일시	주제	자문자
2.21	북한 SOC 개발 과제	이상준(국토연구원)
2.2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부민(주한 중국대사관)
3.12	개성공단사업의 현황과 전망	조용남(통일부)
3.13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이호철(인천대학교)
3.14	NGO 현황	정연정(배제대학교)
3.16	동북아 군사력 실태분석과 전망	이규열(한국국방연구원)
3.20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3.26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김성배(통일부장관 전 정책보좌관), 홍익표(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3.26	대북인권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김문환(외교통상부)
4.13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론적 고찰	민병원(서울산업대학교)
4.19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	백종국(경상대학교)
4.25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 참여 방안	이진영(인하대학교)
4.30	민간단체 합동사업 평가방식에 대한 견해 수렴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	남북한 IT 협력 현황	문광승(하나비즈닷컴)
5.3	최근 북한군부 동향	최준성, 김동수(이상 국가안보전략연구소)
5.4	구 동서독 국경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한반도 DMZ의 평화적 활용에 주는 시사점	Thomas Findeis(포크트란트주 자연보호 담당관), Helmut Nadere, Manuela Schott(이상 작센주 환경청)
5.11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연계의 이론적 고찰	최종건(연세대학교)

일시	주제	자문자
5.11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박두복(전 외교안보연구원)
5.15	중앙아시아 전략문제	송금영(외교통상부)
6.1	제5차 장성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대응	문성묵(국방부)
6.4	사회주의독재 잔재 청산과정	Rainer Eppelmann(동독 마지막 국방장관) Annette Christina(동독공산당 독재청산 재단 사무총장)
6.5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재성(서울대학교), 임성학(서울시립대학교)
6.14	SERI의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시사점	이승준(SERI)
6.14	효율적인 통신망구축 및 운영방안	남경택(디즈넷)
6.15	북한의 최근 동향	조준래(국방부)
6.18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접근의 비교	John S. Park(미국 평화연구소)
6.20	통일정책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승빈(명지대학교)
6.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개편현황	김홍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6.21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동향	설총(통일부)
6.21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제도 문제점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6.22	대북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시민참 여제도의 심의민주주의적 정비 중심	윤성이(경희대학교)
6.22	한반도 통일 대비 NGO의 역할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6.22	6·15행사에 대한 북한의 행태	양창석(통일부)
6.27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일시	주제	자문자
6.27	남북경협 거버넌스	박흥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6.29	북한의 체제위기 상황속의 사회통합 전략	전승범(국가안보전략연구소)
7.2	통일대비 NGO의 활성화 방안	김승국(미래구상 평화통일특위),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7.3	중국의 주민통제제도(여행 및 거주관련)	우병국(통일연구원 북한기초연구사업팀)
7.13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3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종현(통일부)
7.13	동북아 다자안보 현황	김창식(외교통상부)
7.18	강압외교와 PSI	최종철(국방대학교)
7.18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김기연(유엔인권정책센터)
7.23	북·러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김영웅(러시아극동문제연구소)
7.23	정부의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종현(통일부)
7.30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8.9	PSI와 한국의 대응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8.14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기업부문)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8.14	주변국의 북한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김하영(통일연구원 북한기초연구사업팀)
8.14	주변국의 북한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김예경(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8.14	주변국의 북한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8.17	통일대비 국내 NGO발전방안 관련 심층 인터뷰	정현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시	주제	자문자
8.17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기업부문)	이종근(한국무역협회)
8.21	남북정상회담과 한미협력방안	맥피이터(주한 미국대사관)
8.22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기업부문)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8.28	통일대비 국내 NGO발전방안 관련 심층 인터뷰	정경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8.29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한 관계	김충환(통일부)
8.29	통일대비 국내 NGO발전방안 관련 심층 인터뷰	유정길(평화재단)
8.29	북한체제 변화 전망	최준성, 김동수(이상 국가안보전략연구소)
9.4	통일대비 국내 NGO발전방안 관련 심층 인터뷰	이태호(참여연대)
9.11	북한주민의 합법적 국외이동 실태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9.11	개성공단의 법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조종남(통일부)
9.12	북한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9.17	통일대비 NGO의 분야별 역할	장영권(평화통일시민연대),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9.17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이상만(중앙대학교)
9.19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논의	이송배(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9.19	국가간 네트워크 거버넌스	김형민(연세대 통일연구원)
9.27	중국 경제현황과 전망	이창렬(통일교육원)
9.28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1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Lynn Lee(InterMedia)
10.4	대북 진출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장환빈(현대아산)

일시	주제	자문자
10.5	북한주민의 해외 합법이동 실태	허선행(북한인권정보센터)
10.8	북한주민의 불법이동 처벌절차	이은구(북한인권정보센터)
10.9	북한주민의 불법이동 실태	한유미(북한인권정보센터)
10.10	북한군부동향	안찬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11	통일대비 국내 NGO 발전 방안	장영권(평화통일시민연대),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10.12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22	서독의 대외정책	고상두(연세대학교)
10.31	한반도 평화체제와 중·북관계	김흥규(외교안보연구원)
11.1	확산방지구상과 한반도 평화	이광석(한국원자력연구원)
11.2	북한의 당조직 정상화 움직임 관련 북한의 외교활동 확대 배경 및 전망	김동수, 현성일, 최준성 (이상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1.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대책	김재훈(재정경제부)
11.15	유럽연합의 다층적 거버넌스와 남북연합 거버넌스	송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11.23	최근 북한동향	강석승(통일부)
11.27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4가지 노선	이명찬(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해외전문가 방문간담회

일시	방문인사
1.11	Luis Bush 상임대표(Transformation World) 외 4인
1.24	Brian McSeeters 1등 서기관(주한 미국대사관)
1.25	Elizabeth Batha 변호사(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2.15	Edward P. Reed 한국지부 대표(아시아재단) 일행
2.21	Gerald McLoughlin 공보원장(주한 미국대사관)
2.22	Norbert Baas 대사(주한 독일대사관)
2.26	Hans Heinsbroek 대사(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일행
2.26	Edwina Moreton 외신차장(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
2.28	Werner Kampeter 소장(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6	林碧炤 부총장(정치대학교(원경기금소장))
3.7	Peter Rowe 대사(주한 호주대사관) 일행
3.9	Denis Allistone 동아시아대표단장, Stephan Sakalian 다자간협력 담당 대표(이상 국제적십자위원회) 일행
4.4	Carola Tham UN담당과장(스웨덴 외교부), Britta Kinnemark 정무담당공사(주한 스웨덴대사관)
6.1	Chau Thai Keong 대사(주한 싱가포르대사관)
8.27	Dr. Vo Khanh Vinh, Dr. Le Bo Linh, Tran Dinh Hao, Dr. Pham Van Vang, Ms. Dang Anh Phuong, Mr. Nghiem Xuan Minh, Ms. Nghiem Minh Hoa, Mr. Mai The Binh, Ms. Thang Phuong Mai(이상 베트남 사회과학원)
8.27	Fraser Cameron 박사(유럽위원회)
9.21	Maria Virginia Rosas Ribeyro(페루 티 Comercio紙 국제부장)
9.21	Kimber L. sheaver 소장(IRA ASIA Division)
10.11	Richard powell 사업개발이사(Ingeus)

일시	방문인사
10.12	이정혜 대표(국제이주기구)
10.25	Harald Müller 소장(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소)
10.29	陳小川 편집장(중국 청년보)
11.21	Peter Alford 도쿄지국장(호주 The Australian), Micheal Sheridan 방콕 주재 아시안지국장(영국 Sunday Times)
11.21	Fu-Chin Hsieh, Li Hei Song, Min-Hui Lin(대만 원경기금회) 일행
11.23	Mack Williams 소장(호주 국제관계연구소 NSW 지소, 전 주한호주대사), Martion Queen 정무참사관(주한 호주대사관)
11.27	Ted Lipman 대사(주한 캐나다대사관)

통일문제연구협의회

www.tongmoon.or.kr

1998년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문제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통일문제연구협의회」를 창설하였다. 2006년도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28개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연구소, 국방대학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등 11개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북한·통일관련 연구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하고, 관련정보자료·연구실적의 교류와 아울러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의 활동으로 권역별 공동학술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회의를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술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분야 연구자의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와 참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을 위한 예비사업을 통해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참여기관들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연구사업 결과물을 발간하였다.



부 록

2007년도 발간물 목록
2008년도 사업계획
2008년도 연구위원 현황

<<4

2007년도 발간물 목록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연구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연구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용 외 공저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2007)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2007)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독일통일백서

2006 독일통일백서

통일연구원

연례정세보고서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북한연구실

통일정세분석보고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 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2007)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월간 북한동향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2호(2007)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 Huh, Moon-Young / Kim, Philo /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년도 사업계획: 기본연구사업(14과제)

부문	과제명
통일정책연구부문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부 대북·통일정책 - 통일대비연구: 북한체제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남북협력연구부문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 남북한 통행·통신·통관 절차 개선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부문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연구 -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 - 북한체제의 변동양태 및 시나리오별 안정성 평가
국제관계연구부문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및 통일외교 기반 구축 연구 -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쟁점 분석 - 후쿠다 정권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 - 중국의 국가전략과 동북아 안보전략 전망: 2008~2012 - 한중 FTA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연구부문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 북한인권백서 및 북한인권 DB 구축

2008년도 연구위원 현황

(실·소장 외 가나다순)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전공
기획 조정실	여인곤	실장	02-901-2596 ikyee@kinu.or.kr	러시아 정치·외교, 동북아 안보, 독일통일문제
	이규창	연구기획팀장	02-901-2664 kchrhee@kinu.or.kr	남북관계법, 평화법제, 국제법, 북한법
통일 정책 연구실	조 민	실장	02-901-2612 chomin@kinu.or.kr	통일정책, 남북관계, 평화사상, 평화체제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02-901-2533 pjc@kinu.or.kr	동북아 안보, 남북한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 군비통제
	손기웅	선임연구위원	02-901-2629 songw@kinu.or.kr	평화(안보) 및 환경문제,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군사문제
	전성훈	선임연구위원	02-901-2571 swc339@kinu.or.kr	통일·외교, 국제안보, WMD 비확산과 남북한 군비통제, 지역안보와 통일전략
	허문영	선임연구위원	02-901-2583 myhuh@kinu.or.kr	북한정치·외교 및 대남정책,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국제관계
	황병덕	선임연구위원	02-901-2567 hbd@kinu.or.kr	남북관계, 독일통일, 통일이념, 통일한국의 이념과 통일한국의 미래상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전공
남북 협력 연구실	김규륜	실장	02-901-2592 krkim@kinu.or.kr	남북한 교류·협력, 동아시아지역 국제관계, 아태지역의 무역관계, 국제정치경제론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02-901-2588 dpblue@kinu.or.kr	북한정치, 북한경제, 남북관계, 비교사회주의, 한·미관계
	임강택	선임연구위원	02-901-2579 ktlim@kinu.or.kr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경협, 동북아 경제협력
북한 연구실	서재진	실장	02-901-2580 suhjj@kinu.or.kr	북한사회, 남북관계, 북한체제변화
	이교덕	선임연구위원	02-901-2599 kd227@kinu.or.kr	북한정치·외교, 북·일관계, 북한후계체제
	임순희	선임연구위원	02-901-2594 lsh@kinu.or.kr	북한사회·문화, 북한여성 및 청소년, 북한종교,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02-901-2585 hjchon@kinu.or.kr	북한 권력 엘리트, 정치체제, 대남정책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02-901-2578 jeung@kinu.or.kr	북한 군사체계, 북한 당·군관계, 북한 미사일 핵 정책
	조정아	부연구위원	02-901-2590 orlando@kinu.or.kr	북한교육, 통일교육, 북한사회·문화, 북한노동
	최수영	선임연구위원	02-901-2581 sychoi@kinu.or.kr	북한경제, 도시 및 지역경제, 남북경협, 동북아 경제협력
	최진욱	선임연구위원	02-901-2558 choij@kinu.or.kr	북한정치 및 행정, 북·미관계, 재외동포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전공
국제 관계 연구실	박영호	실장	02-901-2570 youngho@kinu.or.kr	대북정책, 통일정책, 북한정치·외교·안보, 남·북/북·미/한·미관계, 미국외교·안보 정책, 동북아 국제관계
	김국신	선임연구위원	02-901-2569 kskim@kinu.or.kr	미국과 북한관계, 한·미 안보협력, 미국의 동북아 정책, 국가통합이론
	배정호	선임연구위원	02-901-2616 jhbae@kinu.or.kr	일본정치·외교, 동북아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 전략문제
	전병곤	연구위원	02-901-2573 jubykon@kinu.or.kr	중국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북·중관계
	최춘흠	선임연구위원	02-901-2595 chchoi@kinu.or.kr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중·북관계, 한·중관계), 중국의 대미·일·러 전략, 중·대만관계, 중국의 국내정치
	홍우택	부연구위원	02-901-2562 hong3579@kinu.or.kr	전쟁 및 협력, 국제협상, 핵억지, 통일정책, 동북아 국제관계
북한 인권 연구 센터	이금순	소장	02-901-2593 kslee@kinu.or.kr	인도적 지원, 탈북자 정책, 재난관리, 북한인권
	김수암	연구위원	02-901-2563 sakim@kinu.or.kr	북한인권, 대북지원
통일학술 정보센터	조한범	소장	02-901-2611 hbcho@kinu.or.kr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사회주의 체제전환, 러시아 지역연구
대외 협력실	김영윤	실장	02-901-2568 yykim@kinu.or.kr	북한경제, 남북한 경제통합, 독일통일사례, 남북경협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Tel : 02_901_2521 Fax : 02_901_2541
